

주요국 예산안 2017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7.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반곡동)
TEL:044-414-2114(대) www.kipf.re.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연구진

연구책임자

윤성주 재정지출분석센터장

최승문 부연구위원

한종석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강민채 · 장준희 · 한혜란 (국제기구)

이정은 (캐나다)

최경진 (일본)

하에스더 (프랑스)

엄동욱 (독일)

김선미 (영국)

황보경 (호주)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PART 1 총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3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3
가. 세계 경제 전망	3
나. 주요 국가별 경제 전망	7
2. 세계 재정 전망	10
가. 세계 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10
나. 주요 국가별 재정 전망	15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	19
가. 통화정책	19
나. 재정정책	20
II. 주요국 재정운동 방향 및 재정지표	23
1. 캐나다(FY2016-17: 2016.4. ~ 2017.3.)	23
2. 일본(FY2017: 2017.4. ~ 2018.3.)	25
3. 프랑스(FY2017: 2017.1. ~ 2017.12.)	27
4. 독일(FY2017: 2017.1. ~ 2017.12.)	29
5. 영국(FY2017-18: 2017.4. ~ 2018.3.)	31
6. 호주(FY2016-17: 2016.7. ~ 2017.6.)	33

I. 캐나다	39
1. 경제 및 재정전망	42
가. 경제전망	42
나. 재정전망	43
2. 예산기조(Budget 2016)	45
3. 예산안 내용	46
가. 세입	46
나. 세출	49
4. 주요 재정정책	53
가. 중산층 성장 및 경제활성화	53
나. 재정건전화	55
다. 기타	57
II. 일 본	61
1. 경제 및 재정전망	65
가. 경제전망	65
나. 재정전망	67
2. 예산기조	68
3. 예산안 내용	70
가. 세입	70
나. 세출	72
4. 주요 재정정책	77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77
나. 재정건전화	80

III. 프랑스	82
1. 경제 및 재정전망	85
가. 경제전망	85
나. 재정전망	86
2. 예산기준	90
3. 예산안 내용(PLF 2017)	92
가. 세입내역	92
나. 세출내역	93
4. 주요 재정정책	97
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97
나. 재정건전화	98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99
IV. 독일	101
1. 경제 및 재정전망	105
가. 경제전망	105
나. 재정전망	107
2. 예산기준	109
3. 예산안	111
가. 재정수입	111
나. 재정지출	112
4. 주요 재정정책	115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115
나. 재정건전화	116
다. 에너지 정책	118
라. 난민정책	119

V. 영 국	120
1. 경제 및 재정전망	122
가. 경제전망	122
나. 재정전망	123
2. 예산기준	127
3. 예산안 내용	128
가. 세입	128
나. 세출	132
4. 주요 재정정책	136
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36
나. 재정건전화	138
VI. 호 주	141
1. 경제 및 재정전망	144
가. 경제전망	144
나. 재정전망	145
2. 예산기준	148
3. 예산안 내용	150
가. 재정수입	150
나. 재정지출	152
4. 주요 재정정책	155
가. 일자리창출 및 성장 활성화	155
나. 재정건전화	157

표 목차

PART 1 총론

〈표 I-1〉 세계경제 전망	3
〈표 I-2〉 WEO 세계경제 전망(GDP 성장률)	4
〈표 I-3〉 주요국의 경제 전망	8
〈표 I-4〉 EU의 국가별 경제 전망	10
〈표 I-5〉 2016년 4월과 10월 FM보고서의 국가별 재정지표 전망	12
〈표 I-6〉 주요국의 재정전망	17
〈표 I-7〉 EU의 국가별 재정 전망	18
〈표 II-1〉 캐나다 경제전망(2016년 11월 기준)	23
〈표 II-2〉 캐나다 재정전망(2016년 11월 기준)	23
〈표 II-3〉 일본 경제전망	25
〈표 II-4〉 일본 주요 재정지표	26
〈표 II-5〉 프랑스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27
〈표 II-6〉 경제전망	29
〈표 II-7〉 FY2017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29
〈표 II-8〉 영국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32
〈표 II-9〉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33
〈표 II-10〉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34

〈표 I-1〉 캐나다 경제전망(2016년 11월 기준)	42
〈표 I-2〉 캐나다 재정전망(2016년 11월 기준)	44
〈표 I-3〉 2016년 예산안 재정전망치 대비 조정내역	44
〈표 I-4〉 세입전망	48
〈표 I-5〉 프로그램 지출 전망	51
〈표 I-6〉 추경예산 편성 내역	52
〈표 I-7〉 FY2016 예산조치(Budget 2016 Measures)의 경제 및 고용 효과	55
〈표 I-8〉 FY2016-17 시장채무(Market Debt)	57
〈표 I-9〉 장기 경제전망	58
〈표 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66
〈표 II-2〉 주요 재정지표 추이	67
〈표 II-3〉 중장기 재정전망	68
〈표 II-4〉 FY2017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70
〈표 II-5〉 FY2017 조세 및 인지수입	71
〈표 II-6〉 FY2017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72
〈표 II-7〉 경제대책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규모	79
〈표 III-1〉 거시경제 전망	85
〈표 III-2〉 FY2017 예산안	86
〈표 III-3〉 2015-2020년 재정지표 전망	87
〈표 III-4〉 2015-2020년 재정수지 전망	87
〈표 III-5〉 2015-2020년 채무비율 전망	88
〈표 III-6〉 FY2017 세입전망	93
〈표 III-7〉 2017 미션별 세출 내역	94

〈표 III-8〉 FY2016 수정예산안	96
〈표 III-9〉 400억유로 규모의 기업지원 정책	98
〈표 III-10〉 5개년간 지출 절감 노력	98
〈표 III-11〉 사회보장부문 예산 수지 전망	100
〈표 IV-1〉 경제전망	105
〈표 IV-2〉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106
〈표 IV-3〉 FY2017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107
〈표 IV-4〉 FY2016 추경예산안	108
〈표 IV-5〉 FY2016 잠정결산	110
〈표 IV-6〉 항목별 재정수입	111
〈표 IV-7〉 부문별 재정지출	113
〈표 IV-8〉 재정 전망	116
〈표 IV-9〉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118
〈표 V-1〉 2016년 3월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122
〈표 V-2〉 주요 경제전망	123
〈표 V-3〉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125
〈표 V-4〉 EU탈퇴로 인한 차입증가 효과	126
〈표 V-5〉 2016년 가을보고서 정책효과	128
〈표 V-6〉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129
〈표 V-7〉 경상세입 전망	131
〈표 V-8〉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	133
〈표 V-9〉 총관리지출 전망	134
〈표 V-10〉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투자계획	137
〈표 V-11〉 신규 복지지출 상한	140
〈표 VI-1〉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144
〈표 V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145

〈표 VI-3〉 주요 정책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149
〈표 VI-4〉 재정수입 전망	151
〈표 VI-5〉 FY2016-17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	152
〈표 VI-6〉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153
〈표 VI-7〉 FY2016-17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기능별 지출 비교	154
〈표 VI-8〉 주요 절감 조치(Major savings)	158

그림 목차

PART 1 총론

[그림 I-1] 2016년 10월 FM 보고서의 세계 총채무 추이	11
[그림 I-2] 재정수지 전망	15
[그림 I-3] 총 국가 채무 전망	16

PART 2 각국 예산안 분석

[그림 I-1] 세입 대비 이자지출 추이	56
[그림 I-2] 정부 부문별 순채무 장기전망	59
[그림 I-3] 2090년 정부 부문별 재정갭 전망	60
[그림 II-1] FY2017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비중	73
[그림 II-2] FY2017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경비별 추세	74
[그림 III-1] 2007년 이후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88
[그림 III-2] 2007년 이후 채무 추이 및 전망	89
[그림 III-3]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 추이 및 전망	99
[그림 IV-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간 격차	109
[그림 IV-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추이(GDP 대비 %)	110

[그림 IV-3] 2017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비중	114
[그림 V-1] 공공부문 순채무(PSND)	124
[그림 V-2] FY2017-18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	130
[그림 V-3] 총관리지출(TME)의 규모와 구성 변화	135
[그림 V-4] FY2017-18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지출규모	135
[그림 V-5] 영국 법인세율 인하 효과	138
[그림 V-6] 공공부문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전망	139
[그림 VI-1]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147
[그림 VI-2]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 전망	147
[그림 VI-3] FY2016-17 재정수입 구성	151
[그림 VI-4] FY2016-17 재정지출 구성	154
[그림 VI-5] GDP 대비 지출 및 수입 추이	157

제 1 부
총 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가. 세계 경제 전망

- IMF, OECD, EU 등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 경제가 2017년 3.3~3.4%에서 2018년 3.6%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에 의한 세계교역 감소, 신흥국의 급격한 채무 누적 등의 하방위험에 대해 언급

〈표 I-1〉 세계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실질GDP(IMF 전망)				실질GDP(OECD 전망) ¹⁾				실질GDP(EU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5	2016	2017	2018	2015	2016	2017	2018
미국	2.6	1.6	2.3	2.5	2.6	1.5	2.3	3.0	2.6	1.6	2.3	2.2
유로지역	2.0	1.7	1.6	1.6	1.5	1.7	1.6	1.7	2.0	1.7	1.6	1.8
일본	1.2	0.9	0.8	0.5	0.6	0.8	1.0	0.8	1.2	0.9	1.0	0.5
중국	6.9	6.7	6.5	6.0	6.9	6.7	6.4	6.1	6.9	6.7	6.4	6.2
세계	3.2	3.1	3.4	3.6	3.1	2.9	3.3	3.6	3.1	3.0	3.4	3.6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7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6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7

- (IMF 전망¹⁾) 2017-18년 동안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에서 경제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7년 3.4%, 2018년 3.6%로 전망됨 ('16년 10월 WEO 전망과 동일)

* 본 전망은美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세계에 미치는 그 영향에 따라 불확실성이 있음

- 2017-18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미국의 2016년 하반기 경제활동 증가와 향후 예상되는 재정부양책 시행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7.1.

- 선진국의 2017년과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16년 10월 WEO전망 대비 각각 0.1%p, 0.2%p 상승한 1.9%, 2.0%로 전망됨
- 세계경제 성장률 개선에 신흥개도국의 기여는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시장 조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신흥개도국의 경제전망이 미미하게 하향 조정됨
-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2017년 4.5%로 전망되고 ('16년 10월 WEO전망 대비 0.1%p 감소), 2018년은 4.8%로 개선 전망 ('16년 10월 전망과 동일)

〈표 1-2〉 WEO 세계경제 전망(GDP 성장률)

(단위: %)

	2016년 4월 WEO		2016년 7월 WEO Update		2016년 10월 WEO		2017년 1월 WEO Update		
	'16	'17	'16	'17	'16	'17	'16	'17	'18
세계경제	3.2	3.5	3.1	3.4	3.1	3.4	3.1	3.4	3.6
선진국	1.9	2.0	1.8	1.8	1.6	1.8	1.6	1.9	2.0
미국	2.4	2.5	2.2	2.5	1.6	2.2	1.6	2.3	2.5
유로존	1.5	1.6	1.6	1.4	1.7	1.5	1.7	1.6	1.6
일본	0.5	-0.1	0.3	0.1	0.5	0.6	0.9	0.8	0.5
그 외 선진국 ¹⁾	2.1	2.4	2.0	2.3	2.0	2.3	1.9	2.2	2.4
신흥국 및 개도국	4.1	4.6	4.1	4.6	4.2	4.6	4.1	4.5	4.8
아시아	6.4	6.3	6.4	6.3	6.5	6.3	6.3	6.4	6.3
중국	6.5	6.2	6.6	6.2	6.6	6.2	6.7	6.5	6.0
인도 ²⁾	7.5	7.5	7.4	7.4	7.6	7.6	6.6	7.2	7.7
아세안-5 ³⁾	4.8	5.1	4.8	5.1	4.8	5.1	4.8	4.9	5.2

주: 1)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2) 실적/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를 기초, 2011년부터 2011-12년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한 시장가격 기준 GDP

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6, Update July 2016, October 2016, Update January 2017 편집

- 하방 위험요인으로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 일부 선진국의 과잉채무, 신흥개도국 재정 취약성의 지속,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 및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여력 고갈, 중동 및 아프리카 내전과 난민 문제 등을 언급함
- 상방 위험요인인 미국과 중국의 기대치보다 큰 규모의 재정부양책이 시행될 경우와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상승으로 투자가 증가할 경우 세계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OECD 전망²⁾) 투자 및 교역이 부진하나 재정정책이 민간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을 다소 높일 전망
- (경제성장률) 2016년 11월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6년 2.9%, 2017년 3.3%, 2018년 3.6%로 전망
 - * 2016년 9월 중간전망에 비해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전망치가 동일, 2017년은 0.1%p 상향 조정
 - 미국, 중국, 유로지역에서 예정된 재정 완화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세계 GDP 성장률은 2017년 0.4%p, 2018년 0.6%p 더 낮게 나타날 수 있음
 - (물가상승률) 총수요 증가가 완만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은 상태에 머물러 OECD 국가들의 물가상승률³⁾이 2017년 1.7%, 2018년은 2.1%로 전망됨
 - 원자재 가격, 환율, 기대 인플레이션의 큰 변동이 없다면 선진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향후 2년간 서서히 상승할 것임
 -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재정부양책이 예상대로 시행될 경우 2018년 후반까지 약 2.5%로 예상되나, 일본과 유로지역은 각각 1.25%, 1.5%에 머무를 전망
 - (실업률)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은 2016년 6.3%, 2017년 6.1%, 2018년 6.0%로 점차 하락할 전망
 - (세계 무역) 세계 교역 증가율은 2016년 2%를 하회하며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2018년까지 약 3.25%로 회복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인프라 투자 등 재정 계획이 기업 투자를 촉진할 경우 세계 무역이 예상보다 강화될 수 있음
 - (주요 리스크) 저금리 상황 지속으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및 리스크 확대, 일부 신흥국의 급격한 채무 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의한 세계 교역 증가 약세 등이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됨
 -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차이로 인한 리스크는 금융시장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영국의 EU 탈퇴 관련 불확실성도 리스크 요인임

2) OECD, *Economic Outlook*, 2016.11.

3) Private consumption deflator 기준

□ (EU 전망⁴⁾) 2017~2018년 EU 및 유로지역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가 증대되는 가운데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성장률) 민간 소비가 소폭 둔화되나 여전히 주된 성장요소일 것으로 보이며 투자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 순수출은 소폭 적자에서 중립으로 돌아설 전망
 - 기존의 긍정적 요인 중 완화적 통화기조는 유지되나 저유가, 유로화 약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등 요인은 소멸될 전망
 - 유로지역 경제가 2016년 1.7%에서 2017년 1.6%, 2018년 1.8%로 성장하고, EU 경제 또한 2016년 1.9%에서 2017년 1.8%, 2018년 1.8%로 성장할 전망
- (물가상승률) 유가 상승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비자 물가상승률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2017년 하반기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2018년 물가상승률은 다소 하락할 전망
 - 유로지역은 2016년 0.2%에서 2017년 1.7%로 상승하다가 2018년에 1.4%로 다소 하락하고, EU 역시 2016년 0.3%, 2017년 1.8%, 2018년 1.7%로 전망됨
- (실업률) 경제 회복에 따라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노동력 증가를 앞지르면서 실업률이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
 - 유로지역의 실업률이 2016년 10.0%에서 2017년 9.7%, 2018년 9.2%로 하락하고 EU 실업률 역시 각각 8.5%, 8.1%, 7.8%로 지속적으로 하락
- (주요 위험) 대·내외의 하방 위험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방 위험도 부상
 - 미국의 재정부양책과 친기업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 무역정책 입장 변화와 급격한 통화정책 정상화가 세계 경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급격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중국의 무질서한 조정, 신흥시장의 지속적인 불황,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등이 실현되면 EU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국의 EU 탈퇴 과정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과 주요 회원국의 선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성장을 제약할 수 있으며, 유럽 은행들의 취약성, 저성장-저인플레이션 고착화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

4)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7.2.

나. 주요 국가별 경제 전망

□ IMF의 주요국 경제전망⁵⁾

- (미국) 재정부양책의 경제성장효과를 가정하여 2017년 경제성장률은 2.3%, 2018년 2.5%로 전망. 2016년 WEO 10월 전망 대비 2017년 0.1%p, 2018년 0.4%p 개선
- (유럽) 2016년 하반기 독일, 스페인, 영국의 경제성장이 기대치 이상으로 성과를 나타냄에 따라 2016년 WEO 10월 전망 대비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개선됨
 -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독일 0.1%p(1.4%→1.5%), 스페인 0.1%p(2.2%→2.3%), 영국 0.4%p(1.1%→1.5%) 상향조정 되었고, 이탈리아는 $\Delta 0.2\text{p}$ (0.9%→0.7%) 하향조정
- (일본)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활동으로 2016년 WEO 전망(0.6%) 대비 2016-17년 경제성장률 전망(0.8%)이 개선(+0.2%p)
- (중국) 2017년 성장률은 재정부양책의 영향으로 '16년 10월 전망 대비 0.3%p 개선된 6.5%로 전망되나, 지속적인 재정부양책 의존과 민간 신용의 급격한 확대, 기업부채 처리 부진 등이 위험을 증가시킴
-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개도국) 인도는 화폐개혁 후 현금부족 등으로 인해 대내소비가 위축되었고, 인도네시아는 민간투자 약세, 태국은 소비와 관광수입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

□ OECD의 주요국 경제전망⁶⁾

- (미국) 정부 지출 증대, 조세 인하를 통한 완화적 재정정책이 추가로 내수를 부양할 경우 2017~18년 GDP 성장률은 연평균 2.5%를 상회할 전망
 - 추가 재정조치가 없는 경우 2017~18년 GDP 성장률은 연평균 2%에 근접할 것
- (일본) 엔화 평가절상과 아시아 지역 교역 약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고 미국의 수입 수요가 강화됨에 따라 2017~18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0.75~1%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5) IMF, *WEO Update*, 2017.1

6) OECD, *Economic Outlook*, 2016.11.

- (유로지역) 2016~18년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 약세, 높은 실업, 부실채권 문제 등으로 내수는 완만한 수준에 머무르고 경제성장률은 연간 1.5~1.75%를 기록할 전망
- (신흥국) 정책 지원, 원자재 가격의 민감도, 구조개혁 진척 상황, 금융 취약도의 차이에 따라 신흥국의 경제는 차이가 있음
 - (중국)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감소하고 수요가 재조정됨에 따라 2017~18년 경제성장률은 연간 약 6.25%로 다소 둔화될 전망

〈표 1-3〉 주요국의 경제 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GDP 성장률					
OECD	1.9	2.1	1.7	2.0	2.3
미국	2.4	2.6	1.5	2.3	3.0
일본	0.0	0.6	0.8	1.0	0.8
유로지역 ¹⁾	1.2	1.5	1.7	1.6	1.7
한국	3.3	2.6	2.7	2.6	3.0
실업률(Unemployment rate) ²⁾					
OECD	7.4	6.8	6.3	6.1	6.0
미국	6.2	5.3	4.9	4.7	4.5
일본	3.6	3.4	3.1	3.0	2.9
유로지역	11.6	10.9	10.0	9.5	9.1
한국	3.5	3.6	3.8	3.8	3.8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미국	1.6	0.1	1.2	1.9	2.2
일본 ³⁾	2.7	0.8	-0.3	0.3	1.0
유로지역	0.4	0.0	0.2	1.2	1.4
한국	1.3	0.7	0.9	1.5	1.8

주: 1) With growth in Ireland in 2015 computed using gross value added at constant prices excluding foreign-owned multinational enterprise dominated sectors.

2) Labour market data are subject to differences in definitions across countries and to many breaks in series, though the latter are often of a minor nature.(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seasonally adjusted quarterly indices for each year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6*

- (인도) 공공부문 임금 인상과 구조개혁으로 경제성장률이 연간 7.5%를 상회할 전망
- (브라질, 러시아) 안정된 원자재 가격, 신뢰 제고,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향후 2년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전망
- (한국) 추경, 저금리 등으로 인해 2016년은 완만한 성장을 지속했으며 2017년 경제성장률은 2.6%, 2018년은 3.0%로 전망됨

□ EU의 주요국 경제 전망⁷⁾

- (미국)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책이 성장을 촉진하나 중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여 2016년 1.6%에서 2017년 2.3%, 2018년 2.2%로 성장할 전망이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 전망 위험이 증가
- (일본)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경기부양책 추가 시행, 재정건전화 연기에 따라 2016년 0.9%에서 2017년 1.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는 경기부양효과 약화로 0.5%로 하락할 전망
- (중국) 가처분소득 증가, 고용 시장 호황, 주택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계 소비 성장에 힘입어 2016년 6.7%에서 2017년 6.4%, 2018년 6.2%로 완만한 둔화가 예상되며 급격한 신용 성장과 높은 기업 부채는 상당한 중기 위험 요인으로 작용
- (독일) 견고한 노동시장, 우호적인 금융 여건, 건설 호황 지속, 공공지출 확대에 힘입어 2016년 1.9%에서 2017년 1.6%, 2018년 1.8%로 성장할 전망이나 주요 교역국의 무역 장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하방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영국)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 하락에 따라 민간 소비 성장이 약화되고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기업 투자가 약화되어, 2016년 2.0%에서 2017년 1.5%, 2018년 1.2%로 더욱 둔화될 전망
- (프랑스) 수출 회복이 민간소비 성장 부진을 상쇄하고 건설 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 1.2%에서 2017년 1.4%, 2018년 1.7%로 완만하게 가속될 전망

7)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7.2.

〈표 I-4〉 EU의 국가별 경제 전망

(단위: %)

	실질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HICP)			실업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미국	1.6	2.3	2.2	1.3	2.4	2.5	4.9	4.6	4.5
일본	0.9	1.0	0.5	-0.1	0.4	0.6	3.1	3.1	3.0
독일	1.9	1.6	1.8	0.4	1.9	1.5	4.1	4.1	4.1
영국	2.0	1.5	1.2	0.7	2.5	2.6	4.9	5.2	5.6
프랑스	1.2	1.4	1.7	0.3	1.5	1.3	10.0	9.9	9.6

출처: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7.

2 세계 재정 전망

가. 세계 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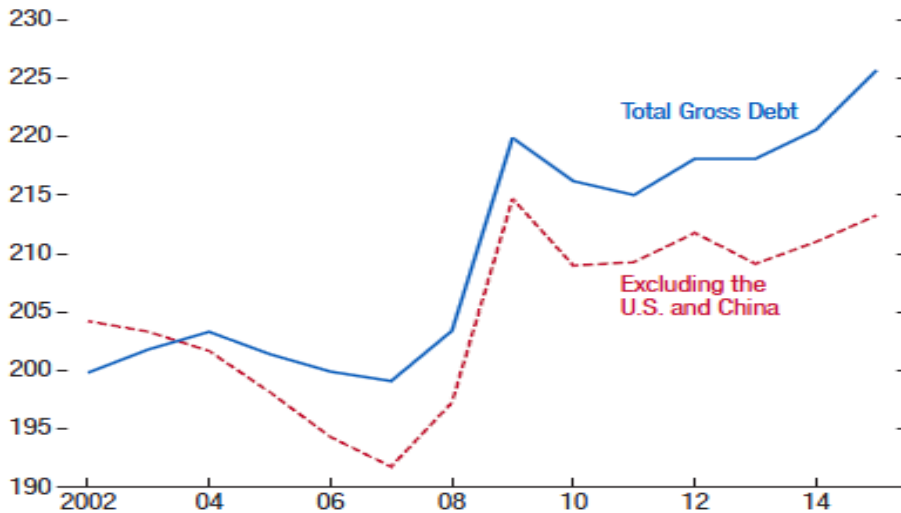
- (IMF 전망⁸⁾) 2016년 4월 발표된 Fiscal Monitor(FM)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의 재정지표가 악화되었고,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어 재정위험이 높아짐. 2016년 10월에 발표된 FM보고서에서는 높은 민간채무의 위험성을 지적
 - 신흥국과 중위소득 국가의 재정이 더 악화되었으며, 원자재 가격 하락, 엄격해진 금융조건 등으로 재정적자 폭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FM, 2016.4.)
 - 2009년부터 무역량이 감소하여 무역을 통한 세입 비중이 높은 신흥 및 중위소득 국가의 재정수입에 악영향을 미침
 -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 지정학적 위험, 투자자의 위험회피 경향 상승으로 신흥 및 중위소득국가들의 외부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워짐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불균형 조정, 공급요인으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하락
 - 무력분쟁, 테러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안보 및 난민관련 지출 증가

8) IMF의 Fiscal Monitor(2016.4.)와 FM(2016.10.)을 참고

- 2016년 세계 비금융부문⁹⁾ 채무는 사상 최대치인 GDP 대비 225%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3분의 2인 약 100조달러가 민간부문 부채로 구성. 부채가 과도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우려 존재(FM, 2016.10.)
 - 선진국의 민간채무는 금융 세계화 및 신용접근성 완화로 인해 증가했으며, 세계 금융위기까지 6년 동안 선진국 비금융 민간채무는 GDP 대비 35% 증가
 -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금융조건 완화는 일부 신흥시장(특히 비금융기업 부문)에서도 민간 채무 붐을 주도(평균적으로 GDP 대비 38% 증가)
 - 과잉채무는 저성장 및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 특히 방대한 규모의 채무를 고려할 때 거시경제적 디레버리징과 대차대조표 디레버리징의 조합이 필요

[그림 I -1] 2016년 10월 FM 보고서의 세계 총채무 추이

(단위: GDP 대비 %, 가중평균)



자료: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16, Figure 1.1.

9) 일반정부, 가계, 비금융기업

〈표 I-5〉 2016년 4월과 10월 FM보고서의 국가별 재정지표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율(%))

	2015			2016 (전망)			2017 (전망)		
	'16.4월 FM	'16.10월 FM	4월 전망과 차이	'16.4월 FM	'16.10월 FM	4월 전망과 차이	'16.4월 FM	'16.10월 FM	4월 전망과 차이
[경기조정 재정수지]									
선진국	-2.4	-2.5	-0.1	-2.5	-2.8	-0.3	-2.3	-2.7	-0.4
미국	-3.0	-3.3	-0.3	-3.4	-3.9	-0.5	-3.4	-3.7	-0.3
유로지역	-1.0	-1.0	0.0	-1.2	-1.3	-0.1	-1.0	-1.2	-0.2
프랑스	-2.5	-2.4	0.1	-2.4	-2.4	0.0	-2.0	-2.2	-0.2
독일	0.7	0.7	0.0	0.1	-0.1	-0.2	-0.1	-0.1	0.0
영국	-4.1	-4.0	0.1	-3.1	-3.2	-0.1	-2.2	-2.5	-0.3
일본	-4.6	-4.8	-0.2	-4.4	-4.9	-0.5	-3.5	-4.8	-1.3
한국	0.1	0.6	0.5	0.6	1.1	0.5	0.8	1.4	0.6
신흥·중위소득국	-3.6	-3.6	0.0	-3.7	-3.9	-0.2	-3.4	-3.7	-0.3
아시아	-3.0	-2.9	0.1	-3.4	-3.3	0.1	-3.1	-3.6	-0.5
중국	-2.4	-2.4	0.0	-2.9	-2.9	0.0	-2.6	-3.2	-0.6
인도	-7.1	-6.9	0.2	-7.0	-6.7	0.3	-6.6	-6.6	0.0
[국가채무]									
선진국	105.8	105.4	-0.4	107.6	108.6	1.0	107.0	109.2	2.2
미국	105.8	105.2	-0.6	107.5	108.2	0.7	107.5	108.4	0.9
유로지역	93.2	92.5	-0.7	92.5	91.7	-0.8	91.3	91.0	-0.3
프랑스	96.8	96.1	-0.7	98.2	97.1	-1.1	98.8	97.8	-1.0
독일	71.0	71.0	0.0	68.2	68.2	0.0	65.9	65.9	0.0
영국	89.3	89.0	-0.3	89.1	89.0	-0.1	87.9	88.8	0.9
일본	248.1	248.0	-0.1	249.3	250.4	1.1	250.9	253.0	2.1
한국	35.9	37.9	2.0	37.3	38.9	1.6	37.5	39.2	1.7
신흥·중위소득국	45.4	44.8	-0.6	47.5	47.3	-0.2	49.0	49.1	0.1
아시아	46.5	45.9	-0.6	48.5	48.4	-0.1	50.3	50.8	0.5
중국	43.9	42.9	-1.0	46.8	46.3	-0.5	49.3	49.9	0.6
인도	67.2	69.1	1.9	66.5	68.5	2.0	65.6	67.2	1.6

출처: IMF, Fiscal Monitor 2016.4, 2016.10.

- 전년 상승한 재정위험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 엄격해진 금융조건,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더 높아졌고, 특히 신흥 및 중위소득국가에서 더욱 악화¹⁰⁾
 - (명목성장 둔화) 명목성장이 둔화될 경우 재정 위험은 더 높고, 채무동학(debt dynamics) 역시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특히 인플레이션 목표를 밀도는 국가들에서 더욱 심각¹¹⁾
 - (유럽·일본) 낮은 인플레이션, 불완전한 구조개혁 과정, 부진한 투자 등으로 미미한 성장세 지속
 - (신흥·중위소득국가) 민간기업의 과도한 부채, 낮은 원자재가격 등이 중기성장 전망을 악화시킴
 - (저소득국가) 경제의존도가 높은 BRICS국가의 경기침체로 무역, 투자, 자금조달이 악화
 - (시장여건 악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재평가, 위험회피성향 확대, 유럽과 미국의 경제·통화 순환(economic and monetary cycles) 차이의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 환경이 더욱 엄격해지고 변동성이 커짐
 - (우발부채) 글로벌 경제 전망악화는 우발부채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 증가
 - (유럽) 저성장과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고 최근 시장 지분을 매각의 원인이 됨
 - (신흥국) 비금융기업의 기업부채는 지난 10년간 4배 증가
 - (저소득국가) 민간협력의 과거호황이 우발부채를 더욱 증가시켰고,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 인프라 개발은 채무건전성에 위협
 - (정치적 위험) 영국의 국민투표 또는 정책적 정체(political gridlock)로 정책집행에 난항

□ OECD 전망¹²⁾

- (재정수지) 2017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0.1%p 개선된 -3.0%, 2018년은 -2.9%로 전망¹³⁾

10) IMF, FM 2016.4.

11) 유가의 추가하락은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욱 낮추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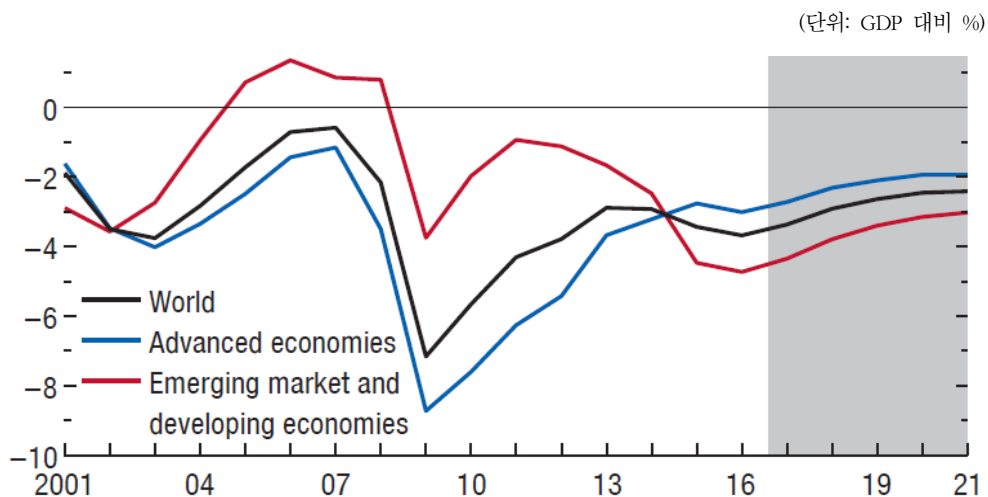
12) OECD, *Economic Outlook*, 2016.11.

나. 주요 국가별 재정 전망

□ IMF의 주요국 재정전망¹⁵⁾

- (미국) 2017년 미국의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GDP 대비 -3.7%로 지난 '16. 4월 FM 보고서 전망에 비해 0.3%p 악화되었고, 국가채무는 108.4%로 전망
- (유로지역) 2017년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1.2%로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고, 국가채무는 91.0%로 지난 '16. 4월 FM 보고서 전망 대비 0.3%p 감소할 전망
- (일본) 지난 '16. 4월 FM 보고서 전망에 비해 2017년 경기조정 재정수지 전망치는 1.3%p 악화된 -4.8%로 전망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253%에 이를 전망
- (중국) 2017년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3.2%로 지난 '16. 4월 FM보고서 전망 대비 0.6%p 악화되었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9%로 지난 전망 대비 0.6%p 상승
- (인도) 지난 4월 전망과 동일하게 2017년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6.6%로 전망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67.2%에 이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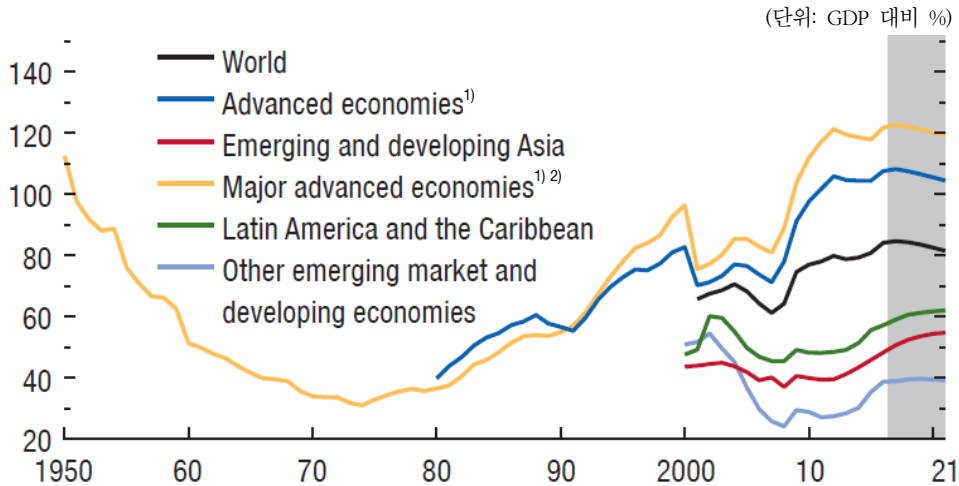
[그림 1-2] 재정수지 전망



자료: IMF, WEO 2016 10, Figure 1.15.

15) IMF, FM 2016.10.

[그림 1-3] 총 국가 채무 전망



주: 1) 2000년 자료까지는 미국 제외

2)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자료: IMF, WEO 2016 10, Figure 1.15.

□ OECD의 주요국 재정전망¹⁶⁾

- (미국) 신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재정 기조가 '17년에 중립에서 확장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채무는 소폭 증가할 전망
- (유로지역)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되어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7년 1.5%, 2018년 1.3%로 점차 감소할 전망
 - (프랑스) 지속적인 부채 관리 비용 감축과 일부 지출 억제, 지방정부 투자 감축 등으로 2018년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독일) 구조적 재정적자는 중기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영국) 초저금리로 인해 재정 여력이 증가해 온 가운데, 일부 재량지출이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지출되는 등 재정 기조가 완화될 전망
- (일본) 일본은 2016년 3건의 재정 패키지과 2017년 4월로 계획된 소비세 인상 지연으로 2015~2017년 동안 재정적자가 GDP 대비 5% 대를 유지할 전망

16) OECD, Economic Outlook, 2016.11.

- 국가채무는 2018년 GDP 대비 약 2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인프라 투자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7년 -2.3%, 2018년 -2.7%를 기록할 전망
- (한국) '15~'16년 추경이 중앙정부 지출을 상당히 진작시켰으나, '17~'18년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없다면 지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표 I-6〉 주요국의 재정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¹⁾					
OECD	-3.5	-3.0	-3.1	-3.0	-2.9
미국	-5.0	-4.4	-5.0	-4.9	-5.4
일본	-6.2	-5.4	-5.2	-5.2	-4.3
유로지역	-2.6	-2.1	-1.8	-1.5	-1.3
한국	1.3	1.4	1.9	2.5	2.6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OECD	115.1	115.5	116.3	116.7	116.5
미국	112.3	114.0	115.6	116.9	117.5
일본 ³⁾	227.7	229.9	233.7	237.5	239.7
유로지역	111.9	109.5	108.9	108.1	106.9
한국	43.7	44.2	44.2	43.3	42.7

주: 1) As a percentage of GDP

2)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As a percentage of GDP at market value)

3) Includes the debt of the Japan Railway Settlement Corporation and the National Forest Special Account from 1998 onward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6*

□ EU의 주요국 재정 전망¹⁷⁾

- (미국) 경기 부양책이 재정적자 및 채무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쳐 2017년에 GDP 대비 재정적자는 5.1%, GDP 대비 채무는 108.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국민계정체계 개편으로 GDP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GDP 대비 적자 및 채무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재정건전화는 지연될 것으로 보여 2017년 재정적자는 4.0%, 채무는 250.6%에 이를 전망
- (중국) 부적합한 자료로 인해 명확해진 않지만 재정 정책은 대체로 확장적일 전망이며,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2%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영기업과 지방정부를 통한 재정 부양책은 분석에 반영되지 못함
- (독일) 세입 증가 및 이자 지출 감소 등에 힘입어 2017년 0.4%의 재정흑자를 유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채무도 65.5%로 하락
- (영국) 과거보다 속도는 느려지지만 지출 중심의 재정건전화는 계속되어 재정적자가 2017년 2.8%로 감소하고 채무도 88.1%로 하락
- (프랑스) 성장률 상승과 지방세 및 환경세 증가로 재정적자가 2017년 2.9%로 개선되나 채무는 96.7%로 상승

〈표 I-7〉 EU의 국가별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일반정부 기준)

	재정수지			총 채무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미국	-4.8	-5.1	-5.7	107.3	108.5	109.6
일본	-3.7	-4.0	-3.8	248.8	250.6	252.0
독일	0.6	0.4	0.4	68.2	65.5	62.9
영국	-3.4	-2.8	-2.5	88.6	88.1	87.0
프랑스	-3.3	-2.9	-3.1	96.4	96.7	97.0

출처: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7.

17)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7.2.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

가. 통화정책

- IMF의 WEO(2016.10)에 따르면, 선진국은 경기 대응적인 통화정책의 운용이 필요하고 신흥국 역시 조기에 과도한 긴축정책을 펴지 않도록 해야 함
 - 선진국의 산출물 갭*(Output gap)은 여전히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약화된 임금압력과 향후 중앙은행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경기 대응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중요
 - *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
 - 신흥국 및 개도국의 경우 조기 과도한 긴축적 통화정책 운용을 회피함으로써,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OECD Economic Outlook(2016.11)에 따르면 많은 선진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통화 정책 여력이 소진된 상황이며,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기조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환율과 금리를 통한 파급효과가 전 세계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미국) 인플레이션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금리가 2018년 말까지 2%로 점차 상승할 전망이며 통화정책은 신중한 경로가 필요함
 -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율은 매우 서서히 상승할 것이며,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인 2%에 근접할 때까지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임
 - (일본)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통화 완화를 유지해야 함
 - (중국) 재정정책(정책은행을 통한 정책 포함)이 매우 확장적인 가운데 불균형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신중한 통화정책이 요구됨
 - (한국)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훨씬 밑돌아 완화된 통화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

나. 재정정책

□ IMF의 재정정책 권고

- (선진국) 2016년 10월 WEO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잠재 성장률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
 - 선진국에서는 수요와 성장 기대치가 줄어들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생산성, 투자, 인플레이션이 모두 낮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금리가 낮고,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통화정책과 더불어 재정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momentum)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기 성장률을 개선할 수 있는 성장 친화적인 조세정책과 지출정책이 요구됨
 - (조세정책) 노동 관련 세금 개혁, 법인세 개혁, 연구개발 투자 지원에 대한 조세 혜택, 노동참여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적 혜택
 - (지출정책)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해당 투자 증대, 교육과 보건에 투자하여 인적자본의 개선
- 단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세 · 지출정책과 더불어 은행 대차대조표 개선을 위한 노력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함
 - 회수 불능 용자(Nonperforming loan) 처리와 운용 효율성을 강화하여 은행 대차대조표 개선
 - 구조개혁의 긍정적 효과로 잠재 성장률이 개선되어 장기 소득기대를 증가시킬 경우 단기 민간수요가 증가하고, 중기 GDP 대비 채무 비율 상승을 막을 수 있음
- 세계 비금융 부문¹⁸⁾ 채무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여 과잉 채무가 문제되는데, FM 보고서(16.10)에 따르면, 과잉 채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화 완화정책의 유지, 은행 대차대조표 개선, 구조개혁 등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
-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 이하 수준인 국가에서는 통화 완화정책을 유지
- 은행이 손실을 인지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평가 및 감독 조치 등의 금융정책을 통해 대차대조표 복구를 용이하게 할 필요

18) 일반정부, 가계, 비금융기업

- 잠재성장률 향상 및 예산 제약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은 성장 친화적 재정정책을 보완할 수 있음
 - 과잉채무 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국가들은 호황기에 경기대응적(counter cyclical)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위기 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정여력을 구축해야 하며, 또한 규제 및 감독 정책이 수반될 필요
- (신흥국 및 개도국) 국민들의 소득 증대와 금융시장 회복력 개선이 공통적 정책 목표로 요구되고, 원자재 수출국은 가능한 한 성장 친화적인 재정건전화 필요(WEO 2016.10)
- 국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확산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개혁이 필요
 - 교육과 건강관리에 투자하여 인적 자본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 환율 변화를 가능하게 하면 충격을 흡수하고 장기간 작용하는 외부 압력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때로는 외환 개입으로 시장상황 정리와 환율 오버슈팅(overshooting) 방지가 필요
 - 대규모 재정 불균형 상황의 원자재 수출국은 적은 정부수입과 악화된 금융 조건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성장 친화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
- OECD Economic Outlook(2016.11)은 많은 선진국들이 예전의 재정 긴축 기조에서 성장률 제고 또는 재정건전화 계획 완화의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구조개혁 강화와 더불어 재정 여력의 효율적 활용을 권고
- 특히 미국 이외 국가들이 계획하고 있는 완화적 재정정책과 지출구조 조정은 성장 및 잠재생산 제고를 위해서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됨
 - (미국) 인프라 및 각종 투자(역량 강화, 구직 촉진 정책 등)에 대한 지출 제고로 핵심 노동연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및 불평등에 대응할 수 있음
 - 한편 한계세율 조정, 조세회피 방지 등을 통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개혁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유로지역)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을 회복하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이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함
 -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도 및 효율성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계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야 함
 - 재정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성장협약(SGP)의 투자 조항을 확대해야 하며, 경제재무이사회(ECOFIN)는 SGP를 적용 시 재량권 사용에 대해 일관된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함
 - (프랑스)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해 감세 계획을 세워야 하고 조세부담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혁을 통한 지출 통제가 필요
 - (독일) 이민자 통합, 장기 요양 급여, 보육 시설 및 투자에 대한 지출 증가를 반영하여 2017년과 2018년에는 재정 정책이 다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
- (영국) 인프라 투자 증대는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세시스템의 효율화는 자원배분 및 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것임
- (일본) 일본의 공공 재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과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중국) 정책은행의 대규모 부채 발행을 통한 인프라 투자 지원과 같이 빠른 공공투자의 확대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할 수 있음
- (한국)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점차 제한적임에 따라 적절한 총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1 캐나다(FY2016-17: 2016. 4. ~ 2017. 3.)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6년 11월 기준 2017년 실질 및 명목GDP 성장률은 각각 2.0%, 4.3%,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6.9%, 2.1%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6-17 재정적자는 251억캐나다달러, FY2017-18 재정적자는 278억캐나다달러로 기존 전망치(Budget 2016)보다 악화될 전망

〈표 II-1〉 캐나다 경제전망(2016년 11월 기준)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19	2020	2016-2020
실질GDP 성장률	1.2	2.0	1.8	1.8	1.8	1.9	1.7
명목GDP 성장률	1.8	4.3	3.7	4.0	3.9	4.0	3.5
실업률	7.0	6.9	6.8	6.7	6.5	6.2	6.8
CPI 상승률	1.6	2.1	1.9	2.0	1.9	2.0	1.9

출처: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6(2016.11), Table A1.3 일부 발췌

〈표 II-2〉 캐나다 재정전망(2016년 11월 기준)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총수입	295.5	291.1	303.3	313.2	326.2	339.5	335.0
총지출	296.4	316.1	331.0	339.1	345.4	356.3	369.6
재정수지	-1.0	-25.1	-27.8	-25.9	-19.3	-16.8	-14.6
연방채무	616.0	642.0	669.8	695.7	715.0	731.8	746.4

출처: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6(2016.11), Table A1.3 일부 발췌

□ 2016년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6-17 총세입은 개인소득세 수입 및 기타 수입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5% 감소한 2,911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7-18 총세입은 3,033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세출) FY2016-17 총세출은 3,161억캐나다달러(프로그램지출 2,913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 249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7-18 총세출은 3,310억캐나다달러(프로그램지출 3,065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 246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중산층 성장 및 경제 활성화

- FY2016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중산층 성장,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 FY2016 예산정책으로 인해 FY2016-17 실질GDP가 0.5% 상승하고 FY2017-18까지 10만개의 고용이 창출 또는 유지될 전망
 - (중산층 강화) 신규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 CCB) 도입을 통한 혜택 확대 및 아동 빈곤 구제, 중산층 감세(중산층 개인소득세를 기존 22%에서 20.5%로 인하), 청년 성공 지원, 고용보험 개선, 인프라 투자 등
 - (혁신적이고 깨끗한 경제) 고등교육기관 전략 투자 기금(Post-Secondary Institutions Strategic Investment Fund), 저탄소 경제기금(Low Carbon Economy Fund) 설립,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지원 등에 대한 투자
 - (포괄적이고 공정한 캐나다) 퇴역군인 및 노년층 지원, 원주민 지원 확대, 의료시스템 강화, 문화 부문 투자 등
 - (세계 속의 캐나다) 캐나다 이민자 지원, 평화·안보에 대한 국제적 지원, 캐나다 군인 편의 시설 개선 등
 -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 정부 업무 방식 및 서비스 개선, 세법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집행 보장 및 조세 시스템 무결성 개선을 위한 조치 제안 등

□ 재정건전화

- 캐나다는 2016년 예산안에서 2015년 예산안에서 제정된 연방 균형예산법(Federal Balanced Budget Act)¹⁹⁾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

- 이전 정부에서 제정된 균형예산법안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책임감 있게 균형예산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에 부합되지 않음
- 정부는 책임감 있고 실현 가능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장이 지속가능한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될 때 균형예산을 위한 계획을 설정할 것
- 국내외 채무관리를 위한 FY2016-17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 발표

2 일본(FY2017: 2017.4. ~ 2018.3.)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일본경제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의 추진으로 고용·소득환경 및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 전망
 - 2016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1.3%, 2017년도는 1.5%로 전망
- (재정전망) 2017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는 10.8조엔 적자가 예상되며, 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달성 불가 전망
- (국가채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도 보다 상승한 253%로 전망

〈표 II-3〉 일본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구 분	2015	2016	2017	전년 대비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5		2016		2017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532.2	540.2	553.5	2.8	1.3	1.5	1.3	2.5	1.5
취업자수 (만명)	6,388	6,449	6,477	0.4		1.0		0.4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	0.2	0.0	1.1						

자료: 내각부, 「平成29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7.1.20.

19) 자세한 내용은 『주요국 예산안 2016』 캐나다편 참조

〈표 II-4〉 일본 주요 재정지표

구분	2016 (당초)	2017 (예산안)	2018 (추정)	2019 (추정)	2020 (추정)
재정수입 (=조세 및 인지수입+기타수입)	62.3	63.1	64.0	67.2	71.5
재정지출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73.1	73.9 (+1.1%)	75.3 (+1.8%)	76.0 (+0.9%)	78.4 (+3.2%)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10.8	△10.8	△11.3	△8.8	△6.9

자료: 재무성, 「平成29年度予算の後年度歳出・歳入への影響試算」, 2017.1.

□ (예산기조) 「경제·재정재생계획」 2년차 예산으로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화 동시 달성을 목표로 편성

- '1억총활약사회'의 실현, 과학기술진흥비의 확대,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 공공사업관계비 중 경제성장 분야의 중점화를 추진

□ 예산안 내용

- (재정수입) 2017년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63조 1천억엔으로 전망
- 2016년 당초 예산안에 비해 소득세수 하락 전망
- (재정지출) 2017년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73조 9천억엔으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명목GDP 600조엔 실현을 통한 생산성 혁명·혁신 촉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산업구조 변화 → 국민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 (재정건전화) 사회보장비의 무분별한 확대 제한, 전략적 재원배분 추진
-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급여의 적정화 추진

3 프랑스(FY2017: 2017. 1. ~ 2017. 12.)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프랑스는 2012-14년 연평균 0.5%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 및 구조개혁 시행으로 경제의 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이 상승하여 2015년 경제성장률 1.3%에서 2016-17년 1.5%로 경기가 회복될 전망
- (재정수지) 재정적자는 2015년 GDP 대비 3.5%, 2016년 3.3%, 2017년 2.7%로 감소하여 2017년 재정적자는 EU의 기준인 3%이하 감축 목표를 달성할 전망
- (국가채무)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은 재정적자 감소와 경제활동의 회복으로 전년 96.1%보다 감소한 96.0%로 안정화될 전망되며, 2012-2017년 사이의 증가폭(6.4%p)이 2007-2012년 증가폭(25.2%p)보다 감소

〈표 II-5〉 프랑스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5	2016	2017
실질GDP 성장률(%)	1.3	1.5	1.5
물가상승률(%)	0.0	0.1	0.8
구조적 재정수지	-1.9	-1.6	-1.1
재정수지	-3.5	-3.3	-2.7
국가채무 ¹⁾	96.2	96.1	96.0
국가채무 ²⁾	93.1	93.1	93.1

주: 1)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포함(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

2)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제외

자료: PLF 2017

□ 예산기조

- 2017년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고용을 위한 개혁, 재정건전성 회복, 사회정의 강화’를 기조로 하며, 정책우선순위 분야는 보안, 고용, 청년과 교육, 불평등 감소, 투자

- 예산안은 3가지 기조에 따라 기업의 고용 증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며, 지출 통제 노력을 지속하고,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인하하여 사회 정의를 강화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7년 재정수입은 2016년 수정전망 대비 1.8% 증가한 3,070억유로로 전망
 -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2.3%(66억유로) 증가한 2,925억유로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2%(13억유로) 감소한 145억유로로 전망
- (세출) 2017년 재정지출은 3,817억유로로 2016년 수정전망 대비 1.9% 정도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장 크게 증액된 반면, 외교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

□ 주요 재정정책

- (복지지출 관리) 2017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 목표를 2016년보다 29억유로 감소한 42억유로로 설정하였으며, 의료보험지출 증가율(ONDAM)을 2016년 1.8%→ 2017년 2.1%로 제한하며, 이를 위해 41억유로를 절감할 계획
- (재정건전화) 2017년 예산안의 정부지출 절감은 2012년부터 시작된 5개년간 다방면의 지출 절감 노력과 공공관리 현대화 프로젝트, 부문별 절감을 기반으로 함
 - 보안, 고용, 교육 등 정책우선순위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다른 부문의 지출 절감을 시행
-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성장을 위한 정책은 가계의 구매력 강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지원을 위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에 중점을 둠

4 독일(FY2017: 2017. 1. ~ 2017. 12.)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연방은행의 2016년 12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실질GDP 성장률은 '16년 1.8%, '17년 1.8% '18년 1.6%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6-2020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17년 독일은 재정수지 균형과 지속적인 국가부채 감소 등으로 낙관적인 재정상황 지속

〈표 II-6〉 경제전망

(단위: %)

	2015	2016	2017	2018
실질GDP 성장률	1.5	1.8	1.8	1.6
실업률	6.4	6.1	5.9	5.8
소비자물가 상승률	0.1	0.3	1.4	1.7

자료: 연방은행,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2016.12.9.

〈표 II-7〉 FY2017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

	2016	2017 (정부안)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재정지출	3,169	3,287	3,311	3,433	3,493
전년 대비 증감률(%)	1.8	3.7	0.7	3.7	1.7
재정수입	3,169	3,287	3,311	3,433	3,493
조세수입	2,881	3,018	3,155	3,279	3,394
세외수입	228	269	156	154	99
신규차입	0	0	0	0	0
국가채무	68,25	65.75	63.5	61.25	59.5

자료: 연방재무부, *Bundshaushalt 2017 und Finanzplan bis 2020*(2017. 07)

- 연구 및 인프라, 외치·내치, 사회통합,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건전화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
 - (성장) 금년 교통 인프라에 약 128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2020년 동안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13억유로를 추가로 지출할 계획
 - (재정건전화) '14년에 달성한 재정균형은 '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채무 또한 '20년 50%대로 진입할 예정
 - (사회통합) '16-'18년 동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해소 및 사회통합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과 구직자들에게 주거·난방비를 통합적으로 지원

□ 예산안 내용

- (수입) '17년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16년 대비 3.7% 증가한 3,287억유로 편성,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지출) '17년 예산안은 총재정지출은 '16년 대비 3.7% 증가한 3,287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환경부, 교통인프라부, 국방부, 노동사회부의 증가가 두드러짐
 - (교육연구부)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지속가능한 경영, 에너지, 혁신적인 근무환경, 건강, 지능형 주행기술 등 6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
 - (경제협력개발부) 인도주의적 구호 및 국제기후변화금융의 지속적인 지원
 - (내무부) 연방경찰 지원 및 인력보강 등 국내치안 강화
 - (국방부) 국방구조계획 및 국제군사공조 지원강화
 - (환경부) 국제기후보호 이니셔티브 기금 및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
 - (에너지경제부) 초소형 전자공학 분야 등의 첨단기술지원 및 디지털 어젠다²⁰⁾를 위한 직업교육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
 - (교통·디지털 인프라부)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의 미래투자 프로그램(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을 통해 도로 건설 및 초고속 인터넷 확장에 투자할 계획

20) 디지털 어젠다: 독일정부는 2014년에 도입된 디지털 어젠다 프로그램은 독일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부가가치 창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함(BMVI, 2016)

- (노동사회부) 실업수당(ALG II; Arbeitslosengeld II), 연금보험지출, 주택 및 난방 보조, 구직자 지원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육아수당, 아동 돌봄, 난민어린이 지원을 확대할 계획
- (식품농업부) 독립적 농업사회보장제도 구축,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공동업무(GAK) 등의 농업지원정책 지원

□ 주요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우수대학 육성·지원 사업, 대학펀딩, 직업훈련 등의 교육·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
- (재정건전화) 2016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16(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6)은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정책 채택
-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정책) '17년 연방정부는 34.3억유로 규모의 에너지 및 기후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 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 할 계획
- (난민정책) 주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난민신청자 추가지원 승인

5 영국(FY2017-18: 2017. 4. ~ 2018. 3.)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EU탈퇴가 결정됨에 따라 기업투자 및 가계지출 감소가 예상되며, 11월 전망에서 2017년 실질GDP 성장률을 1.4%로 대폭 하향 조정
- (재정수지)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이 FY2016-17 3.5%, FY2017-18 2.9%로 점차 감소하나, 이번 의회 내에 재정흑자를 이룬다는 기존 목표는 달성 불가능
- (국가채무) 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FY2017-18에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이 최고치인 90.2%를 기록할 전망

〈표 II-8〉 영국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실적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GDP(%)	2.2	2.1	1.4	1.7	2.1	2.1	2.0
실업률(ILO)	5.4	5.0	5.2	5.5	5.4	5.4	5.4
공공부문 순차입	4.0	3.5	2.9	2.2	1.0	0.9	0.7
공공부문 순채무	84.2	87.3	90.2	89.7	88.0	84.8	81.6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1, Table 1.1 및 4.40.

□ 예산기조 : EU 탈퇴 결정에 대응하여 재정긴축 기조를 완화하고, 장기 생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경기부양을 예산기조로 설정

- (공공재정과 재정정책) 차기 의회 내에 재정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2% 이하로 감축,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의회 내에 하락세로 전환
- (생산성)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를 신규 조성하여 인프라 건설 및 혁신분야에 집중 투입
- (과세) 재정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개인의 과세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인하
- (공공지출) Spending Review 2015에서 설정한 지출 계획을 유지하며, FY2021-22까지 부처별 지출 증가율을 인플레이션율 수준으로 통제

□ 세입 및 세출

- (세입) FY2017-18 총경상수입은 7,380억파운드로 예상되며, 소득세 및 NICs 등의 세수 감소로 3월 예산안 대비 하향 조정
- (지출) FY2017-18 총관리지출 전망은 7,733억파운드이며, GDP 대비 총관리지출 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이번 의회 내에 재정흑자를 달성한다는 기존 목표는 포기하고, 차기 의회 내에 가능한 빨리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변경
 -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정 목표를 규정

- 추가적인 감축 없이 기존의 공공지출 감축계획을 유지하며, 지출 효율성 개선을 통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
- (경제성장)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를 신규 조성하고 법인세율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 계획 발표
 - 인프라 투자 5개년 계획(NIDP 2016 to 2021)을 중심으로 중기 투자를 시행하고,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를 신규 조성
 - 기존 법인세율 조정 계획을 수정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추가 인하

6 호주(FY2016-17: 2016.7. ~ 2017.6.)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호주 경제는 광산부 투자에서 생산 국면으로 전환기에 있으며, 광산 투자 하락으로 인한 하방 요인이 사라지면서 경제 성장이 예상됨
 - FY2016-17 실질GDP 성장률은 2.0%,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 실업률은 5.5%, 소비자물가지수는 1.75%로 전망(MYEFO 기준)

〈표 II-9〉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¹⁾ 전망

(단위: %)

	예측(Forecasts)						전망(Projections)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PEFO ²⁾	MYEFO ³⁾	PEFO	MYEFO	PEFO	MYEFO	PEFO	MYEFO	PEFO	MYEFO	
실질GDP 성장률	2.5	2.7	2.5	2.0	3.0	2.75	3.0	3.0	3.0	3.0	3.0
고용률	2.0	1.9	1.75	1.25	1.75	1.5	1.25	1.5	1.5	1.5	1.5
실업률	5.75	5.7	5.5	5.5	5.5	5.5	5.5	5.25	5.5	5.5	5.25
소비자물가지수	1.25	1.0	2.0	1.75	2.25	2.0	2.5	2.5	2.5	2.5	2.5
명목GDP 성장률	2.5	2.3	4.25	5.75	5.0	3.75	5.0	4.25	5.0	5.0	4.5

주: 1) 실질GDP 성장률과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증가율, 고용률과 소비자물가지수는 2사분기(June Quarter) 기준 연증가율, 실업률은 2사분기 기준

2) PEFO는 선거전경제재정보고서(5월발표), MYEFO는 반기경제재정보고서(12월발표)의 약어

3) MYEFO의 2015-2016는 실적치

출처: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The Treasury, 2016,5,20.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The Treasury, 2016,12,19.

(표 II-10)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6-17		2017-18		2018-19		2019-20	
	PEFO	MYEFO	PEFO	MYEFO	PEFO	MYEFO	PEFO	MYEFO
재정수입(Revenue) ¹⁾	416.9	411.1	449.5	441.2	484.4	473.1	515.1	502.7
GDP대비 비율	24.2	23.5	24.9	24.3	25.5	25.0	25.9	25.5
재정지출(Expenses) ¹⁾	450.6	448.6	464.8	460.4	489.3	483.6	511.6	504.0
GDP대비 비율	26.2	25.6	25.7	25.4	25.8	25.6	25.7	25.6
재정수지(Fiscal Balance) ²⁾	-37.1	-41.5	-18.7	-22.3	-9.8	-15.3	-2.1	-6.4
GDP대비 비율	-2.2	-2.4	-1.0	-1.2	-0.5	-0.8	-0.1	-0.3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³⁾	-37.1	-36.5	-26.1	-28.7	-15.4	-19.7	-5.9	-10.0
GDP대비 비율	-2.2	-2.1	-1.4	-1.6	-0.8	-1.0	-0.3	-0.5
순채무(Net debt)	326.1	317.2	347.1	343.0	356.7	359.0	355.4	363.8
GDP대비 비율	18.9	18.1	19.2	18.9	18.8	19.0	17.8	18.4

주: PEFO는 선거전경제재정보고서(5월발표), MYEFO는 반기경제재정보고서(12월발표)의 약어

1) 발생주의 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 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출처: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The Treasury, 2016.5.20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The Treasury, 2016.12.19

- (재정전망) FY2016-17 예산수지 적자는 365억호주달러(GDP 대비 2.1%)로 전망되며, FY2018-19까지 100억호주달러(GDP 대비 0.5%)로 적자폭이 감소할 전망
- 예산기조 : FY2016-17 예산안은 과거의 광산 투자 붐에서 더 강하고 다양화된 새로운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1) 일자리 창출과 성장 촉진, 2) 조세시스템 개선, 3) 균형예산과 장기 채무 감축에 초점
 - (기업과세)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
 - (퇴직연금 개혁) 고소득층 등 부유층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중간소득층 세금우대 상한선 상향 조정
 - (조세 및 급여의 공정성 확보) 다국적 기업 탈세 방지법(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 육아휴직급여(parental leave pay) 중복 수혜 금지, 복지급여 부정 수급 단속, 노인연금에 대한 자산심사 기준 및 taper rate 변경 등

- (아이디어 붐 투자) 11억호주달러 규모의 혁신개혁안 NISA(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 등²¹⁾
- (청년고용 패키지) 8.4억호주달러 규모의 청년고용패키지를 통해 향후 4년간 12만명의 고용 유지
- (균형예산) 지출 제한을 통해 예산적자는 FY2015-16 GDP 대비 2.4%에서 FY2019-20에 GDP 대비 0.3%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FY2020-21에 예산 회복

□ 예산안 내용

- (수입) FY2016-17 재정수입은 4,111억호주달러(GDP 대비 23.5%)이며, FY2019-20에 5,027억호주달러(GDP 대비 25.5%)로 개선될 전망
- (지출) FY2016-17 재정지출은 4,486억호주달러(GDP 대비 25.6%)이며, 정부지출은 예산균형을 위한 지출통제로 전망기간 동안 25.6% 수준을 유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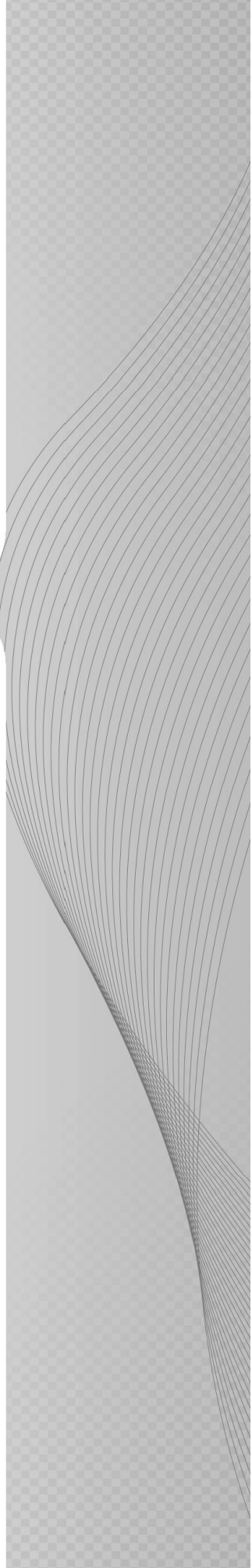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예산 흑자 달성을 위한 중기재정전략(Medium-term fiscal strategy)을 유지
 - FY2020-21에 균형예산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건전화 속도는 연평균 GDP 대비 0.5% 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개혁관련) 혁신개혁안 NISA(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 핀테크 산업 육성 등

21) 자세한 세부 내용은 격주 「재정동향」 2017년 4월 2호에 실림

제 2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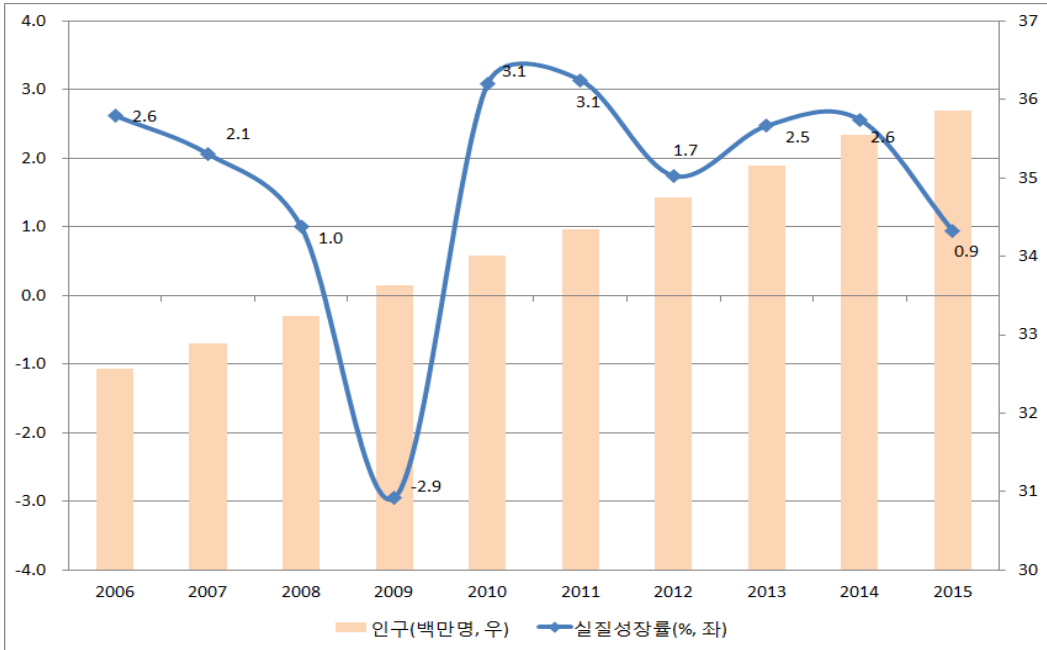
각국 예산안 분석



I. 캐나다

- FY2016-17: 2016. 4. ~ 2017. 3.
- 출처
 - Budget 2016(2016. 3.)
 - Supplementary Estimates(A) 2016-17(2016. 5.)
 -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6(2016. 6.)
 - Supplementary Estimates(B) 2016-17(2016. 11.)
 - Fall Economic Statement(2016. 11.)
 - * 캐나다의 예산안은 통상 매년 4월에 발표되므로 『주요국 예산안 2017』 중 캐나다의 내용은 2016년 예산(Budget 2016) 및 2016년 11월에 발표된 가을 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에 포함된 경제 및 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verview)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 Supplementary Estimates(C) 2016-17(2017. 2.)
- 환율: 1캐나다달러 = 876.3원(2016년 평균)
- 경제규모: 2015년 경상 GDP 1조 5,847억달러(우리나라 약 0.91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15년 기준 65.5%(우리나라는 약 84.8%)
- 인구: 약 3,585만명(2015년)

□ GDP 및 인구추이 :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6. 2.	FY2016-17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C) 발표	2016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FY2016-17 세출예산안(Estimates) 발표		
2016. 3.	FY2016-17 예산안(Budget 2016) 발표		
	FY2016-17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보고서(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 RPPs) 발표		
2016. 5.	FY2016-17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A) 발표		2016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The Fiscal Monitor(2015.4~2016.3) 발표		
2016. 6.	의회예산처(PBO), 「2016년 재정지속가능성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발표		
2016. 10.	FY2015-16 결산보고서(Annual Financial Report) 발표		
2016. 11.	가을 경제 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발표		
	FY2016-17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B) 발표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2016. 11)

- (경제전망) 2017년 실질 및 명목GDP 성장률은 각각 2.0%, 4.3%,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6.9%, 2.1%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6-17 재정적자는 251억캐나다달러, FY2017-18 재정적자는 278억캐나다달러로 기존 전망치(Budget 2016)보다 악화될 전망

□ 예산기조

- FY2016 예산안은 「중산층의 성장(Growing the Middle Class)」을 주제로 하며, 캐나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산층 및 중산층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조치를 포함
- FY2016 예산안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 창출 등 중산층을 위한 기회를 창출시키는 투자를 목표로 함

□ 세입 및 세출 (2016. 11)

- (세입) FY2016-17 총세입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911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4%), FY2017-18 총세입은 3,033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4%)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4.1% 상승 전망
- (세출) FY2016-17 총세출은 3,161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1-22 3,550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나, GDP 대비 비중은 FY2016-17 15.6%에서 FY2021-22 15.0%로 감소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중산층 성장 및 경제활성화) FY2016 캐나다 예산안에서 발표한 중산층 성장,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FY2016-17 실질GDP가 0.5% 상승하고 FY2017-18까지 10만개의 고용이 창출 또는 유지될 전망
- (재정건전화) 캐나다는 2016년 예산안에서 2015년 예산안에서 제정된 연방 균형예산법(Federal Balanced Budget Act)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

1 경제 및 재정전망²²⁾

가. 경제전망

- (실질 GDP 성장률) 2017년 실질GDP 성장률은 Budget 2016의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된 2.0%로 전망
 - 2016~2020년 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Budget 2016의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된 1.7%로 전망

- (명목 GDP 성장률) 2017년 명목GDP 성장률은 Budget 2016의 전망치 대비 0.3%p 하향 조정된 4.3%로 전망

(표 I-1) 캐나다 경제전망(2016년 11월 기준)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6-20
실질GDP 성장률	Budget 2016	1.4	2.2	2.2	2.0	1.9	-	1.9
	2016 Fall Update	1.2	2.0	1.8	1.8	1.8	1.9	1.7
명목GDP 성장률	Budget 2016	2.3	4.6	4.3	4.2	4.1	-	3.9
	2016 Fall Update	1.8	4.3	3.7	4.0	3.9	4.0	3.5
실업률	Budget 2016	7.1	6.9	6.5	6.4	6.3	-	6.6
	2016 Fall Update	7.0	6.9	6.8	6.7	6.5	6.2	6.8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Budget 2016	1.6	2.0	2.0	2.0	2.0	-	1.9
	2016 Fall Update	1.6	2.1	1.9	2.0	1.9	2.0	1.9

출처: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6(2016.11), Table A1.1 일부 발췌

22) 본 장의 내용은 「Fall Economic Statement(2016.11)」 중 캐나다 재무부에서 15개 그룹 민간부문 전문가* 대상 경제전망 서베이(2016.9) 결과를 수정 발표한 제3장 경제 및 재정 전망(Economic and Fiscal Overview)을 위주로 작성

*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IHS Global Insight, Industrial Allianc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c., Laurentian Bank Securities, National Bank Financial Markets,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Program)

- (실업률) 2017년 실업률은 Budget 2016 전망치와 동일한 6.9%로 전망
 - 향후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여 2021년에는 6.2%까지 하락할 전망이며, 2016~2020년 평균 실업률은 Budget 2016의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된 6.8%로 전망
- (물가상승률) 201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Budget 2016 전망치 대비 0.1%p 상향 조정된 2.1%로 전망
 - 2017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 내외 수준을 유지할 전망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경제전망 하향 조정에 따라 재정전망 또한 하향 조정되어 FY2016-17 재정적자는 예산안 전망치 대비 43억캐나다달러 감소한 251억캐나다달러, FY2017-18 재정적자는 12억캐나다달러 감소한 278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총세입) FY2016-17 총세입은 개인소득세 수입 및 기타 수입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5% 감소한 2,911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7-18 총세입은 3,033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총세출) FY2016-17 총세출은 3,161억캐나다달러(프로그램지출 2,913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 249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7-18 총세출은 3,310억캐나다달러(프로그램지출 3,065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 246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²³⁾ 비율은 FY2016-17와 FY2017-18에 31.8%를 기록할 전망이며, FY2018-19 이후 점차 하락하여 FY2021-22에는 30.4%에 이를 전망

23) 공식채무지표로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자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표 I-2〉 캐나다 재정전망(2016년 11월 기준)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5-16	Projection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총수입	295.5	291.1	303.3	313.2	326.2	339.5	335.0
총지출	296.4	316.1	331.0	339.1	345.4	356.3	369.6
프로그램지출	270.8	291.3	306.5	313.2	317.2	326.0	336.5
이자지출	25.6	24.9	24.6	25.9	28.2	30.3	33.1
재정수지	-1.0	-25.1	-27.8	-25.9	-19.3	-16.8	-14.6
연방채무 ¹⁾	616.0	642.0	669.8	695.7	715.0	731.8	746.4
GDP 대비 비중(%)							
총수입	14.9	14.4	14.4	14.3	14.4	14.4	14.5
총지출	15.0	15.6	15.8	15.5	15.2	15.1	15.0
프로그램지출	13.7	14.4	14.6	14.3	14.0	13.8	13.7
이자지출	1.3	1.2	1.2	1.2	1.2	1.3	1.3
재정수지	0.0	-1.2	-1.3	-1.2	-0.8	-0.7	-0.6
연방채무	31.1	31.8	31.8	31.9	31.5	31.0	30.4

주: 1) FY2016-17 연방 채무 전망치에 기타 포괄 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6(2016.11), Table A1.3.

〈표 I-3〉 2016년 예산안 재정전망치 대비 조정내역

(단위 : 십억캐나다달러)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Budget 2016 재정수지		-5.4	-29.4	-29.0	-22.8	-17.7	-14.3	n/a
경제 및 재정적 요인에 의한 조정	Add(+): 총수입	4.2	-2.6	-4.7	-8.1	-9.2	-10.9	
	Less(-): 프로그램지출	0.1	0.1	-1.9	-4.6	-3.0	-2.8	
	Less(-): 이자지출	0.1	0.8	1.9	3.5	4.6	5.2	
2016 Fall Update 재정수지		-1.0	-25.1	-27.8	-25.9	-19.3	-16.8	-14.6

출처: 캐나다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6(2016.11), Table A1.2.

2 예산기조(Budget 2016)²⁴⁾

- FY2016 예산안은 ‘중산층의 성장(Growing the Middle Class)’을 주제로 하며, 캐나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산층 및 중산층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조치를 포함
 - FY2016 예산안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 창출 등 중산층을 위한 기회를 창출시키는 투자를 목표로 함
- 2016년 예산안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중산층 강화, 고용창출, 경제 성장에 집중
 - 기존 제도보다 간편하고 보편적이며 중산층 대상 혜택이 더욱 확대된 신규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 도입
 - 향후 10년 동안 1,200억캐나다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개선
 - 첫 단계로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시스템, 공공주택, 기후 변화에 대해 기존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개보수 등에 향후 5년간 119억캐나다달러를 투자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활기찬 도시, 농촌 및 산간 지역 등에 대한 인터넷 확대, 안전하고, 건강하며 번영하는 지역사회 창출 등에 장기적인 추가 투자
 - 학생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규 투자를 실시하여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 장려, 비즈니스 성장 촉진, 청정기술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캐나다 위상 확립
 - 2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저탄소 경제기금(Low Carbon Economy Fund) 설립 등 기후 변화, 대기질, 깨끗한 물과 토양 문제에 대처하는 청정 기술에 투자
 - 캐나다 원주민 대상 교육, 인프라 및 직업훈련 등 분야에 향후 5년간 84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하고, 원주민 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들이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24)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6, 2016.3.

- 보건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 리더십 발휘, 노년층의 존엄하고 안정된 은퇴 실현 지원,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CPP) 강화, 퇴역군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캐나다 건설
-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및 중산층 성장을 위해 2016년 30만명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이는 등 세계무대에서의 캐나다 위상 제고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²⁵⁾

- 2016년 11월 발표된 가을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FY2016-17 총세입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911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4%), FY2017-18 총세입은 3,033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4%)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4.1% 상승 전망
- (조세수입) FY2016-17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11억캐나다달러(0.5%) 감소한 2,416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2.0%)로 전망되며, FY2017-18 조세수입은 2,52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2.0%)로 전망
 - － (개인소득세) FY2016-17 개인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12억캐나다달러(0.8%) 감소한 1,437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7-18에는 1,532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 전망,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전망
 -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득세 최고세율 33%²⁶⁾가 적용되기 전 2015 과세연도의 고소득자 세무계획 영향에 기인하여 FY2016-17 개인소득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
 - 개인소득세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개인소득 세제시스템의 누진적인 성격과 예상실질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명목GDP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

25) 출처: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6, 2016.11.

26) 2016년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45,283~90,563캐나다달러 구간의 세율을 기존 22%에서 20%로 낮추고, 140,389~200,000캐나다달러인 소득계층은 기존 29%의 세율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200,000캐나다달러 이상 소득계층의 세율을 기존 29%에서 33%로 높임

- (법인세) FY2016-17 법인세 수입은 낮은 기업수익에 기인하여 전년과 동일한 414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7-18에는 417억캐나다달러로 전망, 향후 5년간 연평균 3.2% 증가 전망
 - 이월결손금 공제, 수익 성장 전망에 기인하여 법인세 수입은 명목GDP 성장률보다 낮게 증가할 전망
- (비거주자 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비거주자 소득세는 FY2016-17에는 전년 대비 2억캐나다달러 감소한 63억캐나다달러, FY2017-18에는 66억캐나다달러로 전망, 향후 5년간 연평균 3.9% 증가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FY2016-17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수입은 과세 소비 대상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7% 증가, 향후 5년간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관세) FY2016-17 관세수입(Customs import duties)은 전년 대비 4.4%, FY2017-18에는 전년 대비 11.3% 감소할 전망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2.2% 성장 전망
 - 관세 수입은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도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도입 가능성에 기인하여 FY2016-17에 이어 FY2017-18에도 감소 전망
- (기타 소비세) FY2016-17 기타 소비세(Other Excise Taxes/Duties)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116억캐나다달러, FY2017-18에는 117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2.2% 성장 전망
- (고용보험) FY2016-17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EI) 수입은 2017년 7년 손익분기율 메커니즘(seven-year break-even rate mechanism)²⁷⁾ 도입으로 인해 전년 대비 3.1%, FY2017-18에는 전년 대비 5.0% 감소할 전망
 - 7년 손익분기율 메커니즘(seven-year break-even rate mechanism)에 따라 2017년 고용보험료율은 1.63%로 전년(2016년 1.88%) 대비 하락
- (기타 세입) FY2016-17 기타 세입은 국영기업 수익 하락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8.8% 감소한 271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7-18에는 292억캐나다달러로 전망

27) 고용보험료 수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용보험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7년 손익분기율 전망을 기반으로 매년 보험료율을 설정

〈표 I-4〉 세입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5-16	Projection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총소득세(A)	192.8	191.4	201.4	207.7	216.9	226.7	237.1
개인소득세	144.9	143.7	153.2	158.7	165.8	173.4	180.9
법인세	41.4	41.4	41.7	42.3	44.1	46.1	48.6
비거주자소득세	6.5	6.3	6.6	6.8	7.0	7.3	7.6
총소비세(B)	49.8	50.2	51.4	52.5	54.0	55.6	57.4
재화 및 용역세	33.0	33.5	35.1	36.1	37.4	38.9	40.5
관세	5.4	5.1	4.6	4.6	4.7	4.8	5.0
기타소비세	11.5	11.6	11.7	11.8	11.8	11.9	11.9
총조세수입(C=A+B)	242.7	241.6	252.8	260.3	270.9	282.3	294.5
고용보험(D)	23.1	22.3	21.2	22.1	22.8	23.7	24.6
기타 세입(E)	29.7	27.1	29.2	30.8	32.4	33.4	35.9
총세입(F=C+D+E)	295.5	291.1	303.3	313.2	326.2	339.5	355.0
GDP 대비 비중(%)							
개인소득세	7.3	7.1	7.3	7.3	7.3	7.3	7.4
법인세	2.1	2.1	2.0	1.9	1.9	2.0	2.0
재화 및 용역세	1.7	1.7	1.7	1.7	1.6	1.6	1.7
총조세수입	12.2	12.0	12.0	11.9	11.9	12.0	12.0
고용보험	1.2	1.1	1.0	1.0	1.0	1.0	1.0
기타 세입	1.5	1.3	1.4	1.4	1.4	1.4	1.5
총세입	14.9	14.4	14.4	14.3	14.4	14.4	14.5

출처: 캐나다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6(2016.11), Table A1.5.

나. 세출²⁸⁾

- 2016년 11월 발표된 가을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FY2016-17 총세출은 3,161억캐나다 달러에서 FY2021-22 3,550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GDP 대비 비중은 FY2016-17 15.6%에서 FY2021-22 15.0%로 감소 전망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 지출은 FY2016-17 912억캐나다달러, FY2017-18 959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1-22에는 1,098억캐나다달러까지 꾸준히 증가 전망
 - － (노인지원) 노인지원지출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노령인구 증가 전망, 2016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소득보장보조금 지원 확대²⁹⁾에 기인하여 FY2016-17 484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1-22 639억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 노인지원지출은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소득보장보조금 및 수당 지급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and Allowance payments)으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노인지원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할 전망
 - － (고용보험) FY2016-17 고용보험지출은 2016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관련 정책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8.2% 증가한 210억캐나다달러, FY2017-18에는 218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연평균 1.4%의 증가율로 완만히 증가할 전망
 - － (아동지원) 아동지원지출은 아동 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과 아동복지급여(Universal Child Care Benefit)를 대체하는 신규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 도입에 기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FY2016-17 아동지원지출은 218억캐나다달러, FY2017-18 아동지원지출은 229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2020년부터 아동복지급여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될 예정에 따라 FY2021-22에는 231억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 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은 FY2016-17 685억캐나다달러, FY2017-18 702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1-22에는 802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28) 출처: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6, 2016.11.

29)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층 노년층에게 매월 추가로 제공되는 비과세 보조금으로, 2016년 예산안에서는 이를 연간 최대 947캐나다달러로 상향조정할 것을 발표

- (캐나다 보건지출) 캐나다 보건지출(Canada Health Transfer: CHT)은 FY2016-17 361억캐나다달러, FY2017-18 371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1-22에는 431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FY2017-18부터 캐나다 보건지출은 명목GDP 성장률의 3년 이동 평균에 따라 증가할 전망
- (사회보장지출) 사회보장지출(Canada Social Transfer: CST)은 매년 3% 증가를 법에서 규정, FY2016-17 133억캐나다달러, FY2017-18 137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1-22에는 155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연료세 기금) 연료세기금(Gas Tax Fund)은 FY2016-17, FY2017-18에는 21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1-22에는 22억캐나다달러를 나타낼 전망
- (직접프로그램지출) 직접프로그램지출은 FY2016-17 1,316억캐나다달러, FY2017-18 1,404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1-22에는 1,465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직접프로그램지출 증가의 주요인은 부처 이전지출경비의 증가
 - (운영비용) 100개 이상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용은 FY2016-17 846억캐나다달러, FY2017-18 889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1-22에는 909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부처 이전지출경비) 부처 이전지출경비는 FY2016-17 417억캐나다달러, FY2017-18 457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1-22에는 489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자본상각) 자본상각(capital amortization) 비용은 현재·미래 투자 및 기존 연방 정부 자본 증가 등에 기인하여 FY2016-17 54억캐나다달러, FY2017-18 58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1-22에는 67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이자 지출) 이자지출은 낮은 이자율 전망에 기인하여 FY2016-17, FY2017-18에는 전년 대비 감소한 249억캐나다달러, 246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20-21에는 331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표 I-5〉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5-16	Projection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A) (Major Transfers to persons)	82.9	91.2	95.9	98.5	101.7	105.6	109.8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45.5	48.4	51.2	54.1	57.1	60.3	63.9
고용보험(EI benefits)	19.4	21.0	21.8	21.8	22.2	22.6	22.9
아동지원(Children's benefits)	18.0	21.8	22.9	22.6	22.4	22.6	23.1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B)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65.9	68.5	70.2	72.4	74.9	77.4	80.2
건강관련(Canada Health Transfer)	34.0	36.1	37.1	38.4	39.9	41.4	43.1
사회보장관련(Canada Social Transfer)	13.0	13.3	13.7	14.2	14.6	15.0	15.5
재정균등화 교부금(Equalization)	17.3	17.9	18.3	18.9	19.6	20.4	21.2
준주 교부금(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3.6	3.6	3.7	3.8	3.9	4.0	4.1
연료세기금(Gas Tax Fund)	2.0	2.1	2.1	2.2	2.2	2.2	2.2
기타 재정협정(Other Fiscal Arrangements) ¹⁾	-4.0	-4.5	-4.8	-5.0	-5.3	-5.5	-5.8
직접프로그램지출(C) (Direct Program Expenses)	122.1	131.6	140.4	142.3	140.6	143.0	146.5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34.9	41.7	45.7	46.8	45.0	46.5	48.9
자본상각(Capital amortization)	4.7	5.4	5.8	6.1	6.3	6.5	6.7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82.5	84.6	88.9	89.5	89.4	90.0	90.9
총 프로그램지출(A+B+C) (Total Program Expenses)	270.8	291.3	306.5	313.2	317.2	326.0	336.5
GDP 대비 비중(%)							
개인에 대한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4.2	4.5	4.6	4.5	4.5	4.5	4.5
정부부문간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3	3.4	3.3	3.3	3.3	3.3	3.3
직접프로그램비용 (Direct Program Expenses)	6.2	6.5	6.7	6.5	6.2	6.1	6.0
총 프로그램지출 (Total Program Expenses)	13.7	14.4	14.6	14.3	14.0	13.8	13.7

주: 1) 퀘벡 주에 대한 청소년 수당 회복 및 상설프로그램 대체 지불, 법정 보조금, 2005년 해외협약에 따른 지급금, 상환 가능한 Floor loan 조건 확립, 증권감독 당국에 대한 지급금, FY2015-16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에 대한 재정안정화 지급금 등

출처: 캐나다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16(2016.11), Table A1.6.

〈참고 I-1〉 캐나다 추경예산 내용

- FY2016-17 추경예산은 2016년 5월 10일 추경(A), 2016년 11월 3일 추경(B), 2017년 2월 14일 추경(C)가 상정되어 총 3회 편성
- FY2016-17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A)는 약 12.6억캐나다달러 규모로 편성
 - 의결지출 약 69.8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 약 -57.2억캐나다달러로 편성
 - (의결지출) 대중교통, 녹색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및 기존 프로그램 등 약 17억캐나다달러, 임대주택(affordable housing) 및 사회기반시설프로젝트 약 16억캐나다달러, 연방인프라 유지 및 개선 약 5억캐나다달러 등
 - (법정지출) 이동복지급여(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중단에 기인하여 법정지출 감소
- FY2016-17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B)는 42.6억캐나다달러 규모로 편성
 - 의결지출 약 38.8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 약 3.8억캐나다달러로 편성
 - 중동지역 위기에 대한 자금지원 약 3.8억캐나다달러, 윈저-디트로이트 국제교량 건설을 위한 운영 및 자금 수요에 대한 자금 약 3.5억캐나다달러, 고등교육기관 전략 투자 자금(FY2016 예산안) 약 2.5억캐나다달러 등
- FY2016-17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C)는 약 15.1억캐나다달러 규모로 편성
 - 의결지출 약 24.7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 약 -9.6억캐나다달러로 편성
 - 연방정부행정 서비스 및 고용 조건 조정을 위한 자금 5.5억캐나다달러, 연방 수자원 인프라 이전자금 3.5억캐나다달러, 캐나다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자금 1.8억캐나다달러 등

〈표 I-6〉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 분		일반 예산(Budgetary)	투융자 예산(Non-Budgetary)
추경(A)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6,984	3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5,719	0
	합 계	1,265	30
추경(B)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3,881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375	0
	합 계	4,256	0
추경(C)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2,472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964	-431
	합 계	1,508	-431

출처: 캐나다 재무위원회, Supplementary Estimates(C), 2016-17(2017,2)

4 주요 재정정책

가. 중산층 성장 및 경제활성화

- FY2016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중산층 성장,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 FY2016 예산정책으로 인해 FY2016-17 실질GDP가 0.5% 상승하고 FY2017-18까지 10만개의 고용이 창출 또는 유지될 전망
 - (중산층 강화) 신규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 CCB) 도입을 통한 혜택 확대 및 아동 빈곤 구제, 중산층 감세(중산층 개인소득세를 기존 22%에서 20.5%로 인하), 청년 성공 지원, 고용보험 개선, 인프라 투자 등
 - － (신규 아동복지급여) 기존 제도보다 간편하고 수급 대상이 확대된 신규 아동복지급여(CCB) 도입을 통해 90%의 가족의 혜택이 증가할 것이며, 다수의 아동이 빈곤에서 구제될 것
 - 신규 아동복지급여(CCB)는 매달 한 번 지급되고 모든 급여가 비과세로 전환되며, 저소득 및 중산층 급여가 확대되고 보다 보편적으로 변화
 - － (중산층 감세) 중산층 개인 소득세를 기존 22%에서 20.5%로 인하, 1인 가구는 연평균 330캐나다달러, 2인가구는 연평균 540캐나다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 － (청년 성공 지원) 저소득 및 중위소득 학생 대상 고등교육 지원 확대, 학생 채무부담 완화, 캐나다 여름 직업 프로그램(Canada Summer Jobs program) 규모 두 배 확대, 청년 고용 전략(Youth Employment Strategy) 개선, 실무 직업교육 기회 강화 등
 - － (고용보험 개선) 2017년 1월부터 고용보험 대기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 대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 혜택 확대
 - － (인프라 투자) 중산층을 위한 고용 창출 및 캐나다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10년 동안 1,200억캐나다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계획 시행
 - 장기 인프라 계획 1단계는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시스템, 공공 주택, 기후 변화에 대해 기존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개보수 등에 즉각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19억캐나다달러 지원

- 장기 인프라 계획 2단계는 현대적이고 깨끗한 경제, 포괄적인 사회, 세계 무역 잠재력을 이용하기 좋은 경제 등을 위한 투자
- (혁신적이고 깨끗한 경제) 고등교육기관 전략 투자 기금(Post-Secondary Institutions Strategic Investment Fund), 저탄소 경제기금(Low Carbon Economy Fund)설립,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지원 등에 대한 투자
 - 고등교육기관 전략 투자 기금(Post-Secondary Institutions Strategic Investment Fund)에 3년간 20억캐나다달러,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지원에 4년간 8억캐나다달러, Genome 캐나다, 캐나다 우주국 지원 등
 - 저탄소 경제기금(Low Carbon Economy Fund)설립에 2년간 20억캐나다달러, 해양 및 민물 연구 지원에 5년간 약 2억캐나다달러, 청정 기술 개발에 5년간 1.2억 캐나다달러 등
- (포괄적이고 공정한 캐나다) 퇴역군인 및 노년층 지원, 원주민 지원 확대, 의료시스템 강화, 문화 부문 투자 등
 - 상이군인(disabled veterans)에 대해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 보장 등 퇴역군인 지원 확대,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³⁰⁾ 확대,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하향 조정(67세→65세)등 노년층 지원 확대
 - 원주민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 및 변화를 위해 5년간 84억캐나다달러 투자, 식품안전 보장, 백신 활용 및 보급 개선 등 각종 보건 정책 등을 포함한 의료 시스템 강화, 예술 및 문화 관련 부문에 5년간 19억캐나다 달러 투자
- (세계 속의 캐나다) 캐나다 이민자 지원, 평화·안보에 대한 국제적 지원, 캐나다 군인 편의 시설 개선 등
 - 캐나다 이민 시스템 처리기간 단축 및 정착 프로그램 기금 증가, 평화·안보 및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통해 세계에서 캐나다 입지 강화, 캐나다 군인 편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캐나다 국민 안전 보장 등
-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 정부 업무 방식 및 서비스 개선, 세법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집행 보장 및 조세 시스템 무결성 개선을 위한 조치 제안 등

30) 캐나다에 거주하고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층 노년층에게 매월 추가로 제공되는 비과세 보조금

〈표 I-7〉 FY2016 예산조치(Budget 2016 Measures)의 경제 및 고용 효과

(단위: %, 명)

	FY2016-17	FY2017-18
주택 투자 조치 (Housing investment measures)	0.1	0.1
인프라 투자 (Infrastructure investment)	0.2	0.4
개인소득세 조치 (Personal income tax measures)	0.0	0.0
중위소득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 (Measures for modest- and low-income households)	0.2	0.4
기타 지출 조치 (Other spending measures)	0.1	0.2
법인소득세 조치 (Corporate income tax measures)	0.0	0.0
총 GDP 효과	0.5	1.0
고용 효과(고용 창출 또는 유지)(명)	43,000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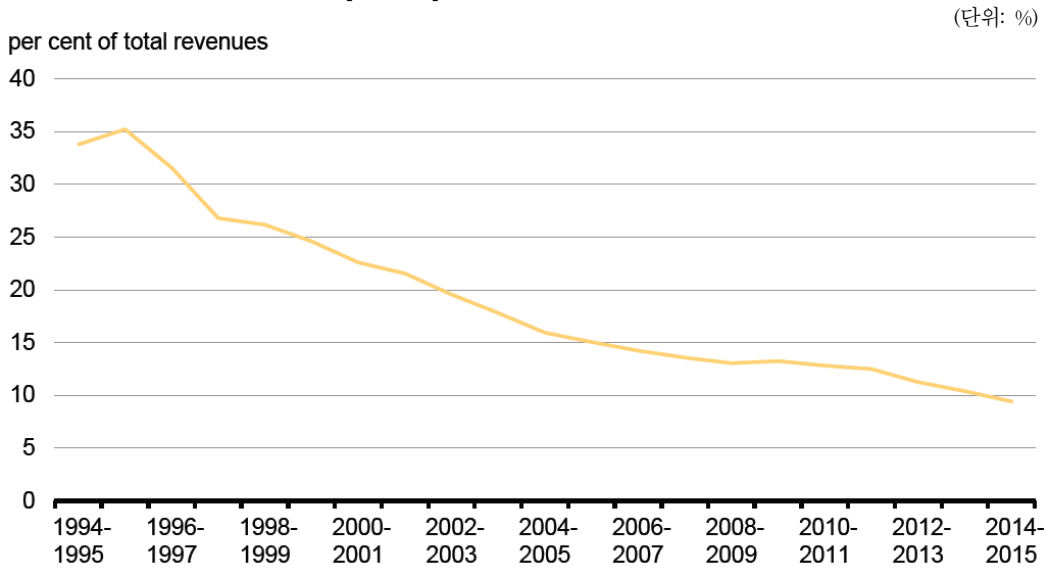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6(2016.3.), Table 2.

나. 재정건전화

- 캐나다는 2016년 예산안에서 2015년 예산안에서 제정된 연방 균형예산법(Federal Balanced Budget Act)³¹⁾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
 - IMF와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국가들에 이용 가능한 재정여력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는 현재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많은 번영을 보다 많은 캐나다인에게 전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
 - 낮은 채무부담, 사상 최저 수준의 세입 대비 이자지출 및 금리 등 캐나다의 재정 상황은 투자를 시행하기에 적정

31) 균형예산법에서 재정적자는 전쟁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특수상황이나 경기 침체에만 실행 가능하며, 적자 실행 시 재무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하원 재정상임위원회에 출석하고 균형재정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주요국 예산안 2016』 캐나다편 참조

[그림 1-1] 세입 대비 이자지출 추이



Source: Public Accounts of Canada.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6(2016.3.), Chart 27.

- 이전 정부에서 제정된 균형예산법안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책임감 있게 균형예산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에 부합되지 않음
 - FY2016-17에 즉시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목GDP 대비 1% 규모의 재정 건전화 필요
 - 정부는 책임감 있고 실현 가능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장이 지속가능한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될 때 균형예산을 위한 계획을 설정할 것
- FY2016-17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
-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국내외 채무, 기타 금융부채 및 관련자산의 관리에 대한 목표·전략·계획을 설정, 채무관리의 기본 목표는 캐나다 정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저비용으로 조달하는 것

- FY2016-17 연말기준 총시장채무³²⁾는 7,060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단기국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채무 전체의 리파이낸싱(refinancing) 및 차환(rollover) 위험이 감소할 전망
 - (유가증권 및 단기국채) FY2016-17 유가증권은 약 5,440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6-17 단기국채는 약 1,340억캐나다달러로 회계연도 말까지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
 - (소매채무 및 외채) FY2016-17 외채는 약 240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6-17 소매채무는 약 50억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I-8〉 FY2016-17 시장채무(Market Debt)

(단위: 연말기준, 십억캐나다달러)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추정)	2016-17 (전망)
유가증권(Marketable bonds)	469	473	488	503	544
단기국채(Treasury bills)	181	153	136	136	134
외채(Foreign debt)	11	16	20	24	24
소매채무(Retail debt)	7	6	6	6	5
총 시장채무	668	649	649	669	706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6(2016.3.), Table A3.2.

다. 기타

□ 의회예산처(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³³⁾ 2016 발표(2016.6.28)³⁴⁾

- (인구 및 경제전망) 노인인구부양비율은 2015년 23.8%에서 2040년에는 40.0%까지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90년에는 46.6%에 이를 전망이며, GDP 성장률은 2016~2021년 연평균 1.8%에서 2022~2090년 연평균 1.6%로 하락할 전망

32) 캐나다의 총채무(Gross debt) 중 시장채무(Market deb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시장채무관리를 주로 다룸

33) 캐나다 연방정부, 지방정부,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를 위해 의회예산처의 중기재정분석을 확장한 보고서로, 향후 75년간(2016~2090)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

34)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http://www.pbo-dpb.gc.ca/web/default/files/Documents/Reports/2016/FSR_2016/FSR_2016_EN.pdf

- (인구 전망) 인구 증가율은 자연증가율의 감소로 인해 2041년에는 0.6%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노인인구부양비율은 2015년 23.8%에서 2040년 40.0%, 2065년 43.5%, 2090년 4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경제 전망) GDP 성장률은 2016~2021년 연평균 1.8%에서 2022~2090년 연평균 1.6%로 하락할 전망이다
 - 2022~2090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1%로 가정, CPI 인플레이션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목표인 연평균 2.0%가 유지된다고 가정

〈표 1-9〉 장기 경제전망

(단위: %)

구 분	1982-2015	2016-2021	2022-2090
실질GDP 성장률	2.4	1.8	1.6
노동투입 증가율	1.2	0.6	0.5
노동생산성 증가율	1.1	1.2	1.1
명목GDP 성장률	5.1	3.8	3.7
CPI 상승률	2.8	2.1	2.0
3개월 만기 단기 국채 금리	5.3	2.1	3.5
10년 만기 국채 금리	6.6	3.2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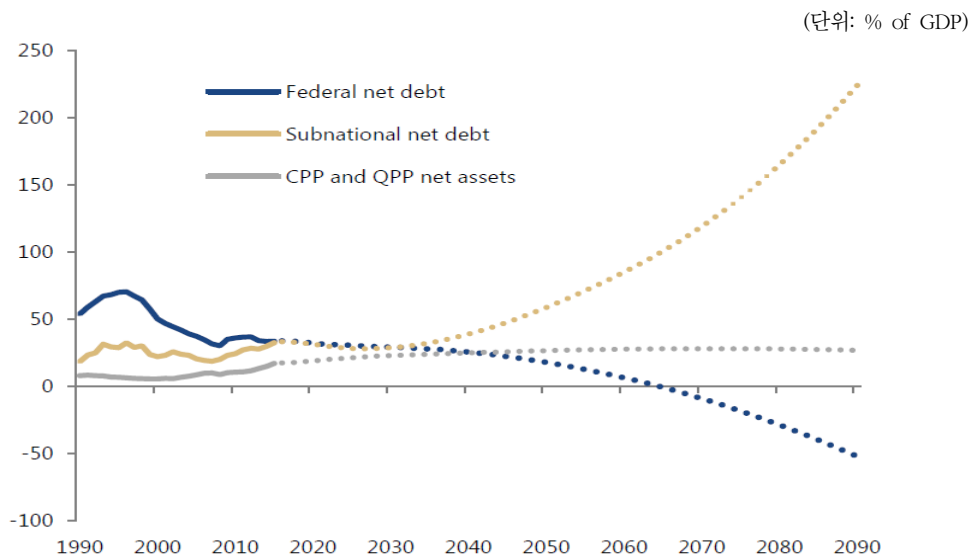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및 캐나다 통계청

- (재정지속가능성 평가)³⁵⁾ 캐나다의 총 일반정부 부문(연방정부, 지방정부, 공적연금)은 지속적인 자체 수입 증가 또는 GDP 대비 0.6%p의 프로그램 지출 감소 없이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전망이다
 - (연방정부) 연방정부의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에 따라 연방정부는 2090년 GDP 대비 0.9%의 재정여력이 발생할 전망으로, 이는 전년 대비 0.5%p 감소한 수준

35) PBO의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재정지속가능성을 재정갭(Fiscal gap)으로 평가. 재정갭은 장기적으로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 또는 프로그램지출의 변화를 의미하며, 재정여력(Fiscal room)은 음(negative)의 재정갭을 의미(공적연금의 재정갭은 장기적으로 GDP 대비 순자산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 또는 프로그램지출의 변화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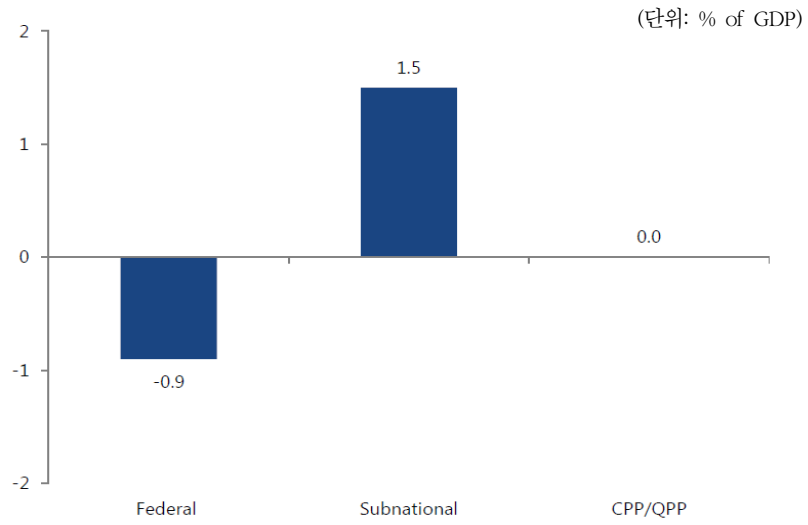
-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program) 수급연령 하향조정(67세 → 65세)에 따른 높은 장기 비용, 기존 아동급여 폐지 및 신규 아동급여(Canada Child Benefit) 도입, 신규 인프라 투자계획 등 Budget 2016의 지출 정책으로 인해 전년 대비 재정여력이 감소
-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순채무가 불안정할 전망에 따라 2090년 GDP 대비 1.5%의 재정갭이 발생할 전망으로, 이는 전년 대비(GDP 대비 1.4%) 소폭 증가한 수준
 - 전년 대비 재정갭이 소폭 증가한 것은 2015년 프로그램 지출이 기존 전망보다 증가함에 기인
 - 연방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 증가, 수입 증가, 프로그램 지출 등에 의한 조정은 즉시 필요하지 않으나, 조정이 지연될수록 재정갭은 더욱 증가할 것
- (공적연금) 공적연금(캐나다국민연금(CPP), 퀘벡주민연금(QPP))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전망
 - 공적연금의 경우 자산수익률이 인구고령화로 인한 순현금흐름 감소 예상분을 초과할 전망에 따라, 공적연금의 GDP 대비 순자산은 2015년 17.1%에서 2067년 28.0% 증가한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그림 1-2] 정부 부문별 순채무 장기전망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6.

[그림 1-3] 2090년 정부 부문별 재정갭 전망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6.

II. 일 본

□ FY2017: 2017.4. ~ 2018.3.

□ FY2017 예산편성 일지

- 2016.9.6. FY2017 각 부처의 개산요구
- 2016.11.29. FY2017 예산편성 기본방침 각의 결정
- 2016.12.22. FY2017 예산 정부안 각의결정
- 2017.1.20. FY2017 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

□ 출처

- 600 兆円経済実現に向けて(2016.4.25.)
- 平成28年度補正予算(2016.5.13.)
- 平成28年度補正予算(第2号)(2016.8.24.)
-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2016.7.26.)
- 働き方改革実現会議の状況(2016.9.30.)
- 日本の財政関係資料(2016.10.)
- 平成29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2016.11.29)
- 平成28年度補正予算(第3号)(2016.12.22)
- 平成29年度予算政府案(2016.12.22.)
- 我が国の財政事情(平成 29年度予算政府案), (2016.12.)
- 平成29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2017.1.20)
-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2017.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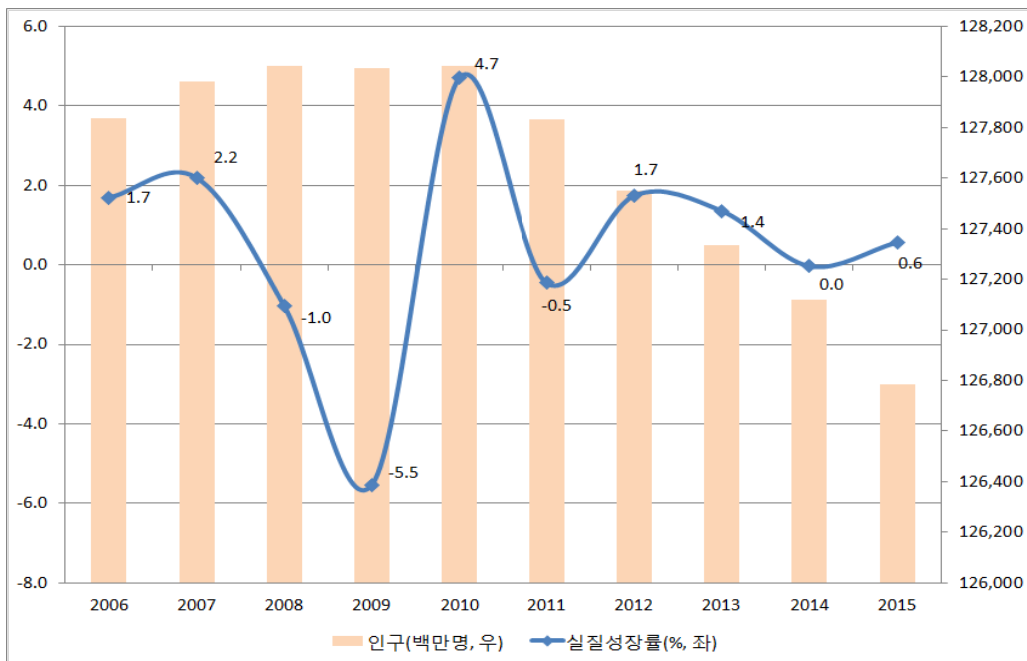
□ 환율: 100엔 = 약 1068.17원(2016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5년 경상GDP 4조 8,687억달러 추정(우리나라 약 2.8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15년 기준 36.7%(우리나라 84.8%)

□ 인구: 1억 2,678만명(2015년 기준)

□ 지난 10년 간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되나, 해외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자본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리스크 요인 존재해 2017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1.5%으로 전망
- (재정수지) 2017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는 10.8조엔 적자가 예상되며, 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달성 불가 전망
-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도보다 상승한 253.0%로 전망

□ 예산기조

- '1억총활약사회'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사회보장비'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

□ 예산안 내용

- (재정수입) 2017년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63조 1천억엔으로 전망
- (재정지출) 2017년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73조 9천억엔으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명목GDP 600조엔 실현을 통한 생산성 혁명·혁신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변화→ 국민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 (재정건전화)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5,000억엔으로 제한, 전략적 자원배분 추진
-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금여의 적정화 추진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 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6. 4.25.	명목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방안 제시	2016년 5월 제2호 「재정동향」
2016. 5.17.	FY2016 1차 추경예산 발표	2016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6. 6. 1.	소비세율 인상 연기 결정	
2016. 6. 2.	2016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각의결정	
2016. 7.26.	'중장기 경제 재정전망' 발표	2016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6. 8. 2.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 발표	
2016. 9.30.	근무방식 개혁 실현 논의	
2016.10.21.	사회보장비 제한 논의	
2016.12.22.	'FY2016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17년 1월 제2호 「재정동향」
	'FY2017 정부예산안' 발표	
2017. 1.20.	2017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용의 기본자세' 각의결정	NEW
2017. 1.25.	'중장기 경제 · 재정전망' 발표	2017년 2월 제1호 「재정동향」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일본경제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의 추진으로 고용·소득환경 및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되나, 해외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자본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리스크 요인 존재
- (성장률) 2017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1.5%, 명목GDP 성장률은 2.5%로 전망
 - 일본경제는 ‘2017년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자세’를 바탕으로 내수위주의 경기회복이 전망
 - － (민간최종소비지출)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 전망
 - － (민간주택투자)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 전망
 - － (정부지출) 경제대책의 지속적 실시와 사회보장관계비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6% 정도 증가
 - － (순수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성장률에 대한 수출기여도는 0.1%로 전망
- (물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2016년도는 소비자물가는 0.0% 정도로 전망하였지만, 경기회복에 따라 2017년도는 1.1%정도로 전망
 - GDP 디플레이터는 계속 상승해 전년 대비 0.9%p정도로 상승
- (고용) 고용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여성, 고령자를 중심으로 노동 참가율 확대로 고용자 수는 전년 대비 0.8%p 증가한 5,777만명으로 전망, 완전실업률은 다소 감소한 2.9%로 전망

〈표 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구 분	2015	2016	2017	전년 대비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5		2016		2017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532.2	540.2	553.5	2.8	1.3	1.5	1.3	2.5	1.5
민간최종소비지출	299.9	301.0	305.8	0.5	0.5	0.4	0.7	1.6	0.8
민간주택투자	15.9	16.7	17	2.7	2.7	5.1	5.4	1.7	0.1
민간설비투자	81.2	82.3	86.3	1.1	0.6	1.3	2.1	4.8	3.4
민간재고품증가 (기여도)	2.4	1.6	1.8	(0.3)	(0.4)	(△0.2)	(△0.2)	(0.1)	(0.0)
정부지출	132.8	134.0	137.2	1.0	1.2	1.0	1.1	2.4	1.6
재화·서비스수출	91.7	85.9	91.0	△0.7	0.8	△6.3	0.8	5.9	3.2
(공제) 재화·서비스수입	91.6	81.3	85.7	△9.2	△0.2	△11.3	△1.2	5.3	2.6
내수기여도	/			1.1	1.1	0.7	1	2.3	1.4
민간				0.8	0.8	0.4	0.7	1.7	1.0
공공				0.3	0.3	0.2	0.3	0.6	0.4
외수기여도				1.7	0.2	0.9	0.3	0.1	0.1
국민총소득	552.1	558.8	573.6	2.8	2.7	1.2	1.5	2.7	1.7
노동·고용	만명			%					
노동력인구	6,605	6,654	6,669	0.2		0.7		0.2	
취업자수	6,388	6,449	6,477	0.4		1.0		0.4	
고용자수	5,662	5,732	5,777	1.0		1.2		0.8	
완전실업률(%)	3.3	3.1	2.9						
생산	%								
광공업생산지수 (증감률)	△1.0	1.0	2.7						
물가	%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율)	△3.2	△2.0	2.0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	0.2	0.0	1.1						
GDP디플레이터	1.4	0.2	0.9						
국제수지	조엔			%					
무역·서비스수지	△0.6	4.2	5.1						
무역수지	0.5	5.6	6.1						
수출	73.1	68.2	72.4	△3.3		△6.7		6.1	
수입	72.6	62.7	66.4	△11.7		△13.7		5.9	
경상수지	18.0	20.2	23.6						
GDP대비 경상수지(명목,%)	3.4	3.7	4.3						

자료: 내각부, 「平成29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7.1.20.

<http://www5.cao.go.jp/keizai1/mitoshi/2017/0120mitoshi.pdf>

나. 재정전망

- (재정수입) 2017년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63조 1천억엔으로 전망
 - 2016년 당초 예산안에 비해 소득세수 하락 전망
- (재정지출) 2017년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73조 9천억엔으로 전망
- (재정수지) 2017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는 10.8조엔 적자가 예상되며, 중앙·지방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4%를 기록할 전망
 - 2020년 GDP 대비 중앙·지방 기초재정수지는 8.3조엔 적자(GDP 대비 -1.4%)로 이전 2016년 7월 발표된 수치보다 적자가 2.8조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³⁶⁾
 - 2018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을 약 1% 정도로 억제한다는 중간목표 달성 곤란
 - (원인) 2016년도는 엔화강세로 인해 법인세수가 감소하면서 2016년도 세수 전망치가 당초전망치(57.6조엔)에 비해 하락(55.9조엔)할 것으로 전망되어 예측 값에 변동이 발생

〈표 II-2〉 주요 재정지표 추이

(단위: 조엔, () 기호는 전년 대비 비율)

구 분	2016(당초)	2017(예산안)	2018(추정)	2019(추정)	2020(추정)
재정수입 (=조세 및 인지수입+기타수입)	62.3	63.1	64.0	67.2	71.5
재정지출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73.1	73.9 (+1.1%)	75.3 (+1.8%)	76.0 (+0.9%)	78.4 (+3.2%)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10.8	△10.8	△11.3	△8.8	△6.9
GDP대비 국채비율 ⁴⁾	250.4	253.0	-	-	-

주: 1)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는 2018년도 이후는 2017년도의 예산의 제도·정책을 전제로 추계한 세출액에 사회보장 충실 등을 기계적으로 계산

2) 조세는 2019년 10월1일 소비세율을 7.8%(중앙·지방 총 10%)로 올리고, 경감세율제도 실시에 따른 세수금액의 변화를 포함

3) 재정지표의 추이는 경제성장 3.0%를 전제

4) GDP대비 국채비율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016년 10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정부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자료: 재무성, 「平成29年度予算の後年度歳出・歳入への影響試算」, 2017.1.

36) 위 전망은 경제재생 case의 전망으로 디플레이션 탈피 및 경제재생을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가정(실질 2%, 명목 3% 성장, 소비자물가지수 약 2%, 소비세율 2019년 10월 8%→10% 전제), 기준 case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장기가 추이함을 가정

〈표 II-3〉 중장기 재정전망

(단위: %, 조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17년 1월 전망												
경제 재생 가정	기초재정수지 (명목GDP 대비 %)	-15.8 (-3.0)	-20.0 (-3.7)	-18.6 (-3.4)	-13.8 (-2.4)	-12.1 (-2.1)	-8.3 (-1.4)	-7.0 (-1.1)	-5.3 (-0.8)	-3.3 (-0.5)	-0.9 (-0.1)	1.6 (0.2)
	재정수지 (명목GDP 대비 %)	-23.8 (-4.5)	-28.1 (-5.2)	-27.2 (-4.9)	-21.5 (-3.8)	-20.6 (-3.5)	-18.6 (-3.0)	-19.7 (-3.1)	-21.3 (-3.2)	-23.2 (-3.4)	-25.1 (-3.5)	-26.8 (-3.6)
	국채발행잔고 (명목GDP 대비 %)	186.0	189.5	188.5	186.7	183.5	180.1	177.3	174.8	172.7	171.0	169.6
2016년 7월 전망												
경제 재생 가정	기초재정수지 (명목GDP 대비 %)	-15.8 (-3.2)	-15.9 (-3.1)	-11.7 (-2.2)	-10.5 (-1.9)	-8.7 (-1.6)	-5.5 (-1.0)	-2.8 (-0.5)	-1.3 (-0.2)	0.6 (0.1)	3.7 (0.6)	-
	재정수지 (명목GDP 대비 %)	24.5 (-4.9)	25.5 (-5.0)	20.9 (-4.0)	19.7 (-3.6)	19.2 (-3.4)	18.4 (-3.2)	18.7 (-3.1)	20.6 (-3.3)	22.3 (-3.4)	22.9 (-3.4)	-
	국채발행잔고 (명목GDP 대비 %)	198.6	198.7	197.7	194.7	190.8	186.8	183.2	180.0	177.0	174.2	-

주: 1) '중앙의 기초재정수지'의 2015년도는 결산기준, 2016년도는 추경예산 정부안 제3호, 2017년도는 정부예산안을 따르며, '지방의 기초재정수지'의 2015년도는 결산에 의함

2) 중앙·지방의 기초재정수지는 복구·부흥대책 비용과 재원금액 제외

자료: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7.1.25.

_____,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6.7.26.

2 예산기조

□ FY2017 예산의 포인트(2016.12.22.)³⁷⁾

- 2017년 예산은 「경제·재정재생계획」 2년차 예산으로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FY2017 세출총액 97조 4,547억엔 규모의 예산을 편성
- (경제활성화)
 - － '1억총활약사회'를 실현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화

37) 재무성, 「平成29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6.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fuan29/01.pdf

- 보육교사·간병인 등의 처우개선, 보육시설 대기아동 해소, 연금 수급자격기간 단축,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고용보험료의 경감, 급부형 장학금 신설 등을 추진
- (보육교사·간병인 처우개선) 모든 보육직원을 대상으로 2%의 임금인상을 통해 2013년 이후 총 10%의 개선을 시행
- (연금) 연금수령수급 자격기간을 기존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 (교육) 급부형장학금을 2018년도부터 신설해 최소 월 3만엔 지급(70억엔), 저소득 가구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무이자장학금의 성적기준을 실질적으로 철폐해 지급(885억엔)
-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방안을 추진
 - 과학기술진흥비의 확대, 제 4차 산업혁명의 추진, 공공사업관계비 중 경제성장 분야의 중점화를 추진
- 업무방식 개혁추진
 - 임금인상 환경정비를 위한 평가제도를 갖추고 임금인상에 참여하는 기업구조마련 (39억엔)
 - 근무휴식시간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4억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670억엔)
- 재정건전화)
 - 일반세출 증가를 2년 연속 '경제·재정재생계획' 기준에 따라 5,300억엔으로 억제해 편성
 -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관계비의 증가를 5,000억엔으로 억제
 -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급여의 적정화로 고액 요양비, 고액 개호(간호,간병)서비스비의 재검토
 -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 경감특례의 재검토, 개호납부금의 총보수비율의 도입 등의 개혁을 추진
 - 신규 국채발행액은 현재 34.4조엔에서 지속적으로 감축 노력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7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97조 4,547억엔으로 전망
 -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57조 7천억엔으로 전망되나 GDP 대비 비중은 10.4%로 2016년 10.7%에 비해 하락
 - 기타수입은 14.7% 증가한 5조 4천억엔으로 전망

〈표 II-4〉 FY2017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억엔, %)

구 분		FY2016 당초	FY2017 정부안	증감액	증감률
세 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576,040	577,120	1,080	0.2
	2. 기타 수입	46,858	53,729	6,871	14.7
	3. 국채발행액 ¹⁾	344,320	343,698	△ 622	△ 0.2
	(1) 공채금(건설국채)	60,500	60,970	470	0.8
	(2) 특례공채금(적자국채)	283,820	282,728	△ 1,092	0.4
합 계		967,218	974,547	7,329	0.4
세 출	1. 국채비	236,121	235,285	△ 836	△ 0.4
	2.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731,097	739,262	8,165	1.1
	(1) 일반세출	578,286	583,591	5,305	0.9
	사회보장관계비	319,738	324,735	4,997	1.6
	사회보장관계비 외	258,548	258,856	308	0.1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²⁾	152,811	155,671	2,860	1.9
합 계		967,218	974,547	7,329	0.8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³⁾		△108,199	△108,413	△214	0.2
국채의존도 ¹⁾		35.6%	35.3%	-	-
GDP대비 국채비율 ⁴⁾		250.4	253.0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은 지방세수 증가 등을 반영

3) 일반회계기초재정수지=조세 및 인지수입+기타수입-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4) GDP 대비 국채비율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6년 10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정부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자료: 재무성, 「平成29年度予算フレーム」, 2016.12.22.

「我が国の財政事情(参考2)」, 2016.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fuan29/01.pdf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fuan29/04.pdf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fuan29/04.pdf

- 국채발행액은 전년 대비 하락한 34조 4천억엔으로 전망하며, 국채의존도는 2016년 도 35.6%보다 하락한 35.3%로 전망

〈표 II-5〉 FY2017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세 목 (일반회계)	FY2016		FY2017	전년 대비			
	예산 (당초)	추경	예산안	예산 (당초)		추경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50,590	146,560	148,740	△1,850	△1.2	2,180	1.5
신고소득세	29,160	30,540	30,740	1,580	5.4	200	0.7
(소득세 계)	(179,750)	(177,100)	(179,480)	(△270)	(△0.2)	(2,380)	(1.3)
법인세	122,330	111,360	123,910	1,580	1.3	12,550	11.3
상속세	19,210	21,100	21,150	1,940	10.1	50	0.2
소비세	171,850	168,010	171,380	△470	△0.3	3,370	2.0
주 세	13,590	13,590	13,110	△480	△3.5	△480	△3.5
담배세	9,230	9,230	9,290	60	0.7	60	0.7
휘발유세	23,860	23,860	23,940	80	0.3	80	0.3
석유가스세	90	90	80	△10	△11.1	△10	△11.1
항공기연료세	520	520	520	0	0.0	0	0.0
석유석탄세	6,880	6,880	6,880	0	0.0	0	0.0
전원개발촉진세	3,200	3,200	3,130	△70	△2.2	△70	△2.2
자동차증량세	3,850	3,850	3,700	△150	△3.9	△150	△3.9
관 세	11,060	9,190	9,530	△1,530	△13.8	340	3.7
톤 세	100	100	100	0	0.0	0	0.0
인지수입	10,520	10,520	10,920	400	3.8	400	3.8
합계	576,040	558,600	577,120	1,080	0.2	18,520	3.3

자료: 재무성, 「平成 29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16.12.26.

나. 세출

- FY2017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97조 4,547억엔, 일반세출은 전년 대비 0.9%증가한 58조 3,591억엔으로 편성
 - (국채비) 전년 대비 0.4% 감소한 23조 5천억엔으로 편성
 - (기초적재정수지대상경비) 전년 대비 0.9% 증가한 58조4천억엔 편성
 - (지방교부세교부금) 전년 대비 1.9% 증가한 15조6천억엔 편성
- FY2017 분야별 세출
 - (사회보장비) 일반회계 세출 중 56%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는 「경제·재정 재생계획」 기준에 따라 증가액을 제한해 32조 4,735억엔 편성

〈표 II-6〉 FY2017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단위: 억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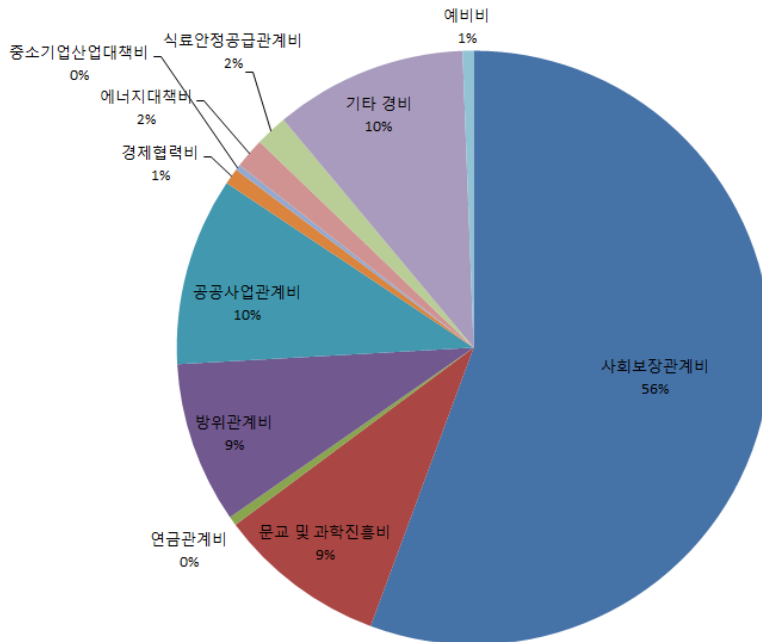
구 분	FY2016 (A)	FY2017 (B)	증감액 (B-A)	증감률
국채비	236,121	235,285	△836	△0.4
일반회계 세출	578,286	583,591	5,305	0.9
사회보장관계비	319,738	324,735	4,997	1.6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580	53,567	△13	△0.0
과학기술진흥비	(12,930)	(13,045)	(116)	0.9
연금관계비	3,421	2,947	△474	△13.9
방위관계비	50,541	51,251	710	1.4
공공사업관계비	59,737	59,763	26	0.0
경제협력비	5,161	5,110	△51	△1.0
중소기업산업대책비	1,825	1,810	△14	△0.8
에너지대책비	9,308	9,635	327	3.5
식료안정공급관계비	10,282	10,174	△108	△1.0
기타 경비	61,193	61,098	△95	△0.2
예비비	3,500	3,500	-	-
지방교부세교부금	152,811	15,5671	2,860	1.9
합 계	967,218	974,547	7,329	0.8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平成 29年度一般會計歳出概算主要経費別内訳」, 2016.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7/seifuan29/01.pdf

- (과학기술진흥비) 민간투자를 이끌어 경제성장력을 높이는 연구개발에 중점배분하면서 과학기술진흥에 전년 대비 0.9% 증가한 1조 3,045억엔 편성
- (공공사업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10%를 차지한 공공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5조 9,737억엔 편성
 - － 호우·태풍재해에 대비한 방재대책, 민간투자를 유발하고 성장력을 높이는 사업의 중점화 추진
 - －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유발하는 공공투자의 시기를 평준화하면서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향상

[그림 II-1] FY2017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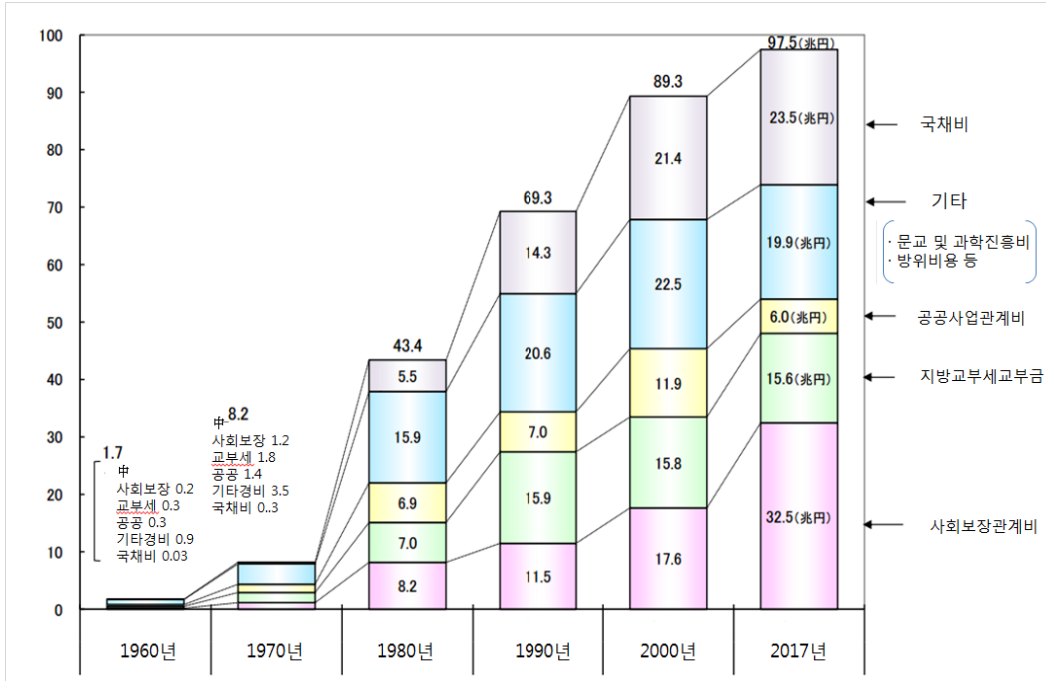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재무성, 「平成 29年度一般会計歳出概算主要経費別内訳」, 2016.12.22. 재구성

[그림 II-2] FY2017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경비별 추세

(단위: 조엔)



출처: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平成29年度予算政府案)」, 2016.12.22.

〈참고 II-1〉 FY2016 추경예산

- (1차) 구마모토 지진 복구지원을 위해 7,780억엔 편성(2016.5.17.)
 - 주택의 건설과 생활재건 지원등을 위해 재난구조 관련경비로 780억엔을 증액하였으며, 구마모토 지진보구 예비비로 7,000억엔을 신설함

〈FY2016 1차 추경예산 프레임〉

(단위: 억엔)

세 출		세 입
1. 재난구조 관련경비	780	-
(1) 재난구조 비용 등 부담금	573	
(2) 이재민 생활지원보조	201	
(3) 재해조위금 등 부담금	6	
2. 구마모토 지진복구 예비비	7,000	
3. 국채비	△7,780	
합 계	-	-

- (2차) '1억총활약사회' 실현 및 구마모토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4조 5,221억엔을 편성 (2016.8.24.)

- 세출을 통해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간병 환경정비, 저소득층 현금지급,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구마모토 지진피해 복구 등을 시행할 예정
- 재원은 건설국채 2조 7,500억엔 발행 및 국채이자지급비 감액, 구마모토 지진피해복구 예비비로 감당할 예정

〈FY2016 2차 추경예산 프레임(일반회계)〉

(단위: 억엔)

세 출		세 입	
세출총액	41,143	1. 건설국채	27,500
(1) 1억총활약사회	7,119	2. 세외수입	2,844
(2)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14,056	(1) 공공사업비 부담금 수입	1,061
(3) 브렉시트 대응 및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지역경제지원	4,307	(2) 재정투융자 사업 특별회계 수입금	1,244
(4) 구마모토 지진 등의 복구 및 방재대응	14,389	(3) 중소 소매·유통 등 합리화 촉진 기금	539
(5) 동일본 대지진 복구 특별 회계로 이월	1,272	3. 전년도잉여금수입	2,525
2. 기본경비 감액	△8,275		
(1) 국채이자지급비	△4,175		
(2) 구마모토 지진복구 예비비	△4,100		
합 계	32,869	합 계	32,869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경제대책관련 중앙·지방세출: 7.5조엔 중 국채: 6.2조엔

(中 일반회계) 2016년도 3조 9,871억엔, 국고채무부담행위 1,493억엔, 2017년도 이후 0.3조엔

(中 특별회계) 2016년도 5,350억엔(동일본대지진 특별회계, 노동보험 특별회계 및 자동차 안전 특별회계), 2017년 이후 0.2조엔, 2017년 이후 보험료 경감 1조엔

자료: 재무성, 「平成 28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2号)フレーム」, 2016.8.24.

□ (3차) 재해대응 및 안보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발표(2016.12.22.)

- 건설공채 및 특별공채 등을 재원으로, 2천억엔 규모로 추경편성
 - (재해대책비) 8월 말에 발생한 홋카이도 태풍 재해 등에 대한 대응 및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재해 폐기물 처리비용의 부족분 등으로 1,955억엔 편성
 - (국제기구분담금) 유엔 PKO 분담금과 중동의 테러·사회안정지원 등 난민 지원에 1,685억엔 편성
 - (방위비)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과 경계 감시태세 강화 등 자위대의 안정적인 운용태세 확보를 위해 1,706억엔 편성
 - 초계기, 잠수함 등의 구매에 1,131억엔, 장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리비 등에 464억엔 편성

〈 FY2016 3차 추경예산 프레임 (일반회계)〉

(단위: 억엔)

세 출		세 입	
1. 재해대책비	1,955	1. 세외수입	1,047
〈홋카이도 동북 호우·태풍 재해 복구〉		2. 공채금(건설국채)	1,014
공공 토목시설 등의 재해복구	1093	3. 세수	△17,440
출하장, 축사, 하우스 등의 재건지원	61	4. 공채금(특별국채)	17,512
〈구마모토 지진 복구〉			
재해 등 폐기물 처리	281		
보조금	183		
2. 국제분담금 및 출연금 등	1,685		
3. 자위대의 안정적인 운용태세 확보 등	1,706		
4. 기타경비	879		
세 출 소 계	6,225		
5. 지방교부세교부금	5,437		
(1) 세수감소에 따른 일반회계의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의 보전	5,365		
(2) 지방법인세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의 감액 보전	72		
6. 지정경비 감액	△ 3,501		
7. 구마모토 지진복구 등 예비비의 감액	△ 163		
8. 예비비의 감액	△ 500		
9. 지방교부금교부세의 감액	△ 5,365		
합 계	2,133		2,133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平成28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3号)等について」, 2016.12.22.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명목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방안 제시³⁸⁾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명목GDP 600조엔 달성을 통해 생산성 혁명·혁신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구조 변화→국민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 (결혼·출산·육아지원) 젊은 세대가 정상적 결혼, 출산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육아정책 지원 등을 추진
 - － 희망출산율 1.8명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희망 취업자를 위한 인적투자 확충을 추진
 - － 65세 이상 고령자 채용기업 지원 확대, 여성 취업 촉진을 위해 시간제사원제도 조성금(커리어업 조성금³⁹⁾) 활용
- (성장전략의 가속) 인재·설비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올리고, TPP에 대응해 해외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
 - － (성장이 유망한 시장의 창출 및 확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민관 연구개발 투자액을 GDP 대비 4% 이상을 목표로 제시
 - － (해외시장과의 연계강화) TPP를 계기로 무역·투자의 국제핵심거점이 되기 위해 외국기업진출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 행정절차를 근본적으로 단순화해 1년 내로 해결
- (소비의 확대) 임금·가처분 소득의 인상, 고령사회 소비수요인 건강·장수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 관광·여행 소비의 활성화, 부동산 활용을 통한 소비 및 투자 확대를 실시
 - － 최저임금을 매년 3% 인상, 2020년까지 전국 평균 1,000엔 달성
 - － 도시재생기구(UR)를 통해 젊은 층과 육아세대의 주택부담금 경감대책 마련, 일본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실시해 소비를 확대

38) 2016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각의 결정(2016.6.2.)

39) 기존 근로자(파트타임·계약직 근로자)를 단시간 정사원으로 전환하거나,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기반 마련)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효율개선, 중소기업 친환 경사업 지원 등을 추진

□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

- 일본정부는 구조개혁과 사회보장 개혁 등 미래에 대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종합 적이고 대담한 경제대책을 발표
 - － ‘1억총활약사회’ 실현, 21세기형 인프라정비, 브렉시트 대응 및 중소기업 · 영세사 업자 지역경제활성화, 지진 부흥 및 안전 방재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며 재정건전 화 목표는 지속
- ‘1억총활약사회’ 실현, 육아 · 간병 서비스 정비, 청소년 지원 확충, 여성활약 추진, 사회 전체의 소득 · 소비 수준 향상
 - － (육아 · 간병 서비스 환경정비) 보육시설 대기 아동을 없애기 위한 인재확보, 교사 의 처우개선, 간병 인력의 즉각적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 육아 휴직 기간의 연장 등을 검토
 - － (사회 전체의 소득과 소비수준 향상) 연금수급 자격기간의 단축, 고용보험제도의 재검토, 기존주택의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등을 시행
- (구조개혁) 산업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노동시장 개혁, 인재육성의 일체적 개혁을 실시
 - － (노동시장 개혁)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을 준비, 고령자의 취 업 촉진을 위해 재취업 지원, 외국인력 활용,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3%)을 통한 소비 진작 도모
- (경제대책 효과) 이번 경제조치로 투자 · 소비 진작 및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 · 소득 환경의 개선을 수반하는 경제 성장이 기대되어 단기적으로 실질GDP 1.3% 제고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표 II-7〉 경제대책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규모

(단위: 조엔)

	주요 추진과제	사업 규모	재정조치		
			국비+ 지방비	재정투 용자	합계
1억총활약사회 실현가속	(1) 육아·간병 서비스 환경 정비 (2) 청소년 지원 확충, 여성활약 추진 (3) 사회 전체의 소득·소비 수준 향상	3.5	2.5	0.9	3.4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1) 관광 인프라 정비 (2)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과 농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3) 리니어중앙신칸센 정비 가속 (4)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5) 생산성 향상	10.7	1.7	4.4	6.2
브렉시트 리스크 관리 및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1)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 (2)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경영력 강화·생산성 제고 (3) 지방 창생(지역경제활성화) 추진 (4) 위험에 대한 대응	10.9	0.6	0.7	1.3
지진 부흥 및 방재 대응 강화	(1) 구마모토 지진 복구·부흥 (2) 동일본 대지진 부흥 가속화 (3) 재해 대응 강화·인프라 노후화 대책 (4) 안전확보	3.0	2.7	-	2.7
합계		28.1	7.5	6.0	13.5

자료: 내각부, 「未来への投資を実現する経済対策」, 2016.8.2.

□ 근무방식 개혁

- (배경) 근무방식 개혁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노동 시장 개혁을 통해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정책
- (9개 항목) 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② 임금인상, ③ 장시간 근무 근절, ④ 이직·재취업 지원, ⑤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형태, ⑥ 여성·청년이 활약하기 쉬운 환경, ⑦ 고령자 취업촉진, ⑧ 질병·육아·간병과 일의 병행, ⑨ 외국 노동자 채용에 관한 검토 진행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한 현 상황을 바로 잡기위해 일본정부가 연내에 격차 사례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계획⁴⁰⁾

〈참고 II-2〉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 물가안정목표를 조기실현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2016년 1월 29일 도입
 -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도 용자나 국채구입을 하게 되어 시중금리 전체가 하락하여,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회복, 디플레이션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금리하락은 은행의 수익을 압박하고, 보험회사나 연금기금도 자금운용난을 겪을 수 있는 부작용 존재
 - 일본은행은 2016년 9월에 재빨리 금융정책의 틀을 전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장기금리를 제로로 유도하는 장단기금리조작정책을 새로이 도입

나. 재정건전화

- 사회보장비 무분별한 확대 제한⁴¹⁾
 - 아소다로 재무장관은 '경제·재정 일체개혁'에 따라 사회보장개혁 조기실시 의사를 밝힘
 - (주요내용) ① 고액의료비의 공적부담 완화를 위해 70세 이상의 자기부담액 상한을 인상, ②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특례조치의 폐지, ③ 간호간병(개호)서비스 자기부담 상한 인상 실시
 - (전망) 개호보험제도에서 통상 10%인 서비스 자기부담금을 개호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대상으로 20%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 예상⁴²⁾

40)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일본경제주간동향」, 2016.10.4.

41) 2017년도는 「경제·재정 재생계획」에서 정하는 집중개혁의 2년째 되는 해로 일반세출 증가를 5,300억엔, 사회보장관계비의 증가를 5,000억엔으로 제한한다고 밝힘

42)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일본경제 주간동향(10,22-28)

<http://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economy/dai/index.jsp>

□ 전략적 재원배분 추진⁴³⁾

- (경제·재정일체개혁) 재정부출의 효과성(wise spending) 제고를 위해 지출효과를 사전에 분석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재원배분
 - － 의무지출도 과거 데이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수명 연장, 주민서비스 광역화, IT화 진척 등을 감안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정
 - － 국고지출금의 성격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량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 설정, 주기적 평가 필요

43) 2016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각의 결정(2016.6.2.)

III. 프랑스

□ FY2017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출처

- 2017년 예산법안(PLF 2017: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 2017년 예산안 관련 부속서류
 - Dossier de presse -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7, chiffres clés du PLF 2017, Évaluation des voies et moyens,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등
- 2017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LFSS 2017: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FY2016 수정예산안(PLFR: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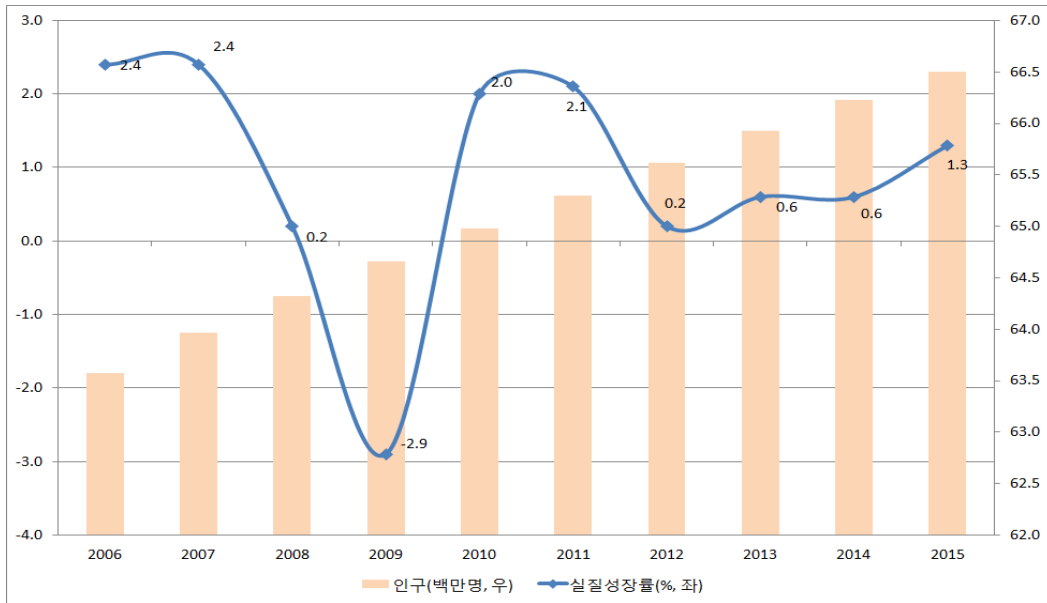
□ 환율 : 1유로 = 약 1283.3원(2016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5년 경상GDP 2조 7,270억달러(우리나라 1.6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 2015년 기준 61.4%(우리나라는 84.8%)

□ 인구 : 약 6,650만명(2015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 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6년 4월 13일	2016-2019 안정화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발표	2016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6년 5월 26일	FY2015 결산보고서 발표	
2016년 6월 7일	FY2015 사회보장예산 결산 발표	
2016년 9월 23일	FY2017 사회보장예산법안(PLFSS) 발표	2016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6년 9월 28일	FY2017 예산법안(PLF) 발표	
2016년 11월 8일	FY2016 1~9월 예산집행결과 발표	
2016년 11월 18일	FY2016 수정예산안(PLFR) 발표	
2016년 12월 5일	FY2017 사회보장예산법안 의회 최종 승인	
2016년 12월 20일	FY2017 예산법안(PLF) 의회 최종 승인	
2016년 12월 22일	FY2016 수정예산안(PLFR) 의회 최종 승인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성장) 2012-14년 연평균 0.5%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지난 4년간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및 구조개혁 시행으로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2015년 경제성장률 1.3%에서 2016-17년 1.5%로 경기가 회복될 전망
- (재정전망) 2017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9%정도 증가한 3,817억유로이며,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070억유로로 전망

□ 예산기조

- 2017년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고용을 위한 개혁, 재정건전성 회복, 사회정의 강화'를 기조로 하며, 정책우선순위 분야는 보안, 고용, 청년과 교육, 불평등 감소, 투자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7년 재정수입은 3,070억유로이며 이중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925억유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145억유로로 전망
- (지출) 2017년 재정지출은 3,817억유로로 2016년 수정전망 대비 1.9% 정도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장 크게 증액된 반면, 외교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

□ 주요재정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성장을 위한 정책은 가계의 구매력 강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지원을 위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에 중점을 둠
- (재정건전화) 2017년 예산안의 정부지출 절감은 2012년부터 시작된 '5개년간 전방위적 지출 절감 노력'과 공공관리 현대화 프로젝트, 부문별 절감을 기반으로 함
- (복지지출 관리) 2017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 목표를 전년 대비 29억유로 감소한 42억유로로 설정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프랑스는 2012-14년 연평균 0.5%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지난 4년간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및 구조개혁 시행으로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2015년 경제성장률 1.3%에서 2016-17년 1.5%로 경기가 회복될 전망
- (물가)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6년 인플레이션은 거의 제로(0.1%)에 근접하지만 2017년에는 에너지제품소비세 인상과 유가 동결로 인플레이션이 0.8%로 회복될 전망
- (소비) 가계소비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인하 등을 통한 정부의 소비진작책으로 활력을 보이며 2016년 1.8%, 2017년 1.6%로 전망
- (기업투자) 2016-17년 기업투자는 생산적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기업의 수익률 개선에 의해 각각 4.9%, 4.5%로 지지될 전망
- (무역) 수출은 대외수요 회복(2016년 2.7%, 2017년 3.6%)으로 2016년 0.9%에서 2017년 3.5%로 호전될 전망

〈표 III-1〉 거시경제 전망

(단위: %)

	2015	2016	2017
실질GDP성장률	1.3	1.5	1.5
물가상승률	0.0	0.1	0.8
가계소비	1.5	1.8	1.6
기업투자 ¹⁾	3.7	4.9	4.5
수출	6.1	0.9	3.5
수입	6.6	2.1	4.0

주: 1) 건설투자 제외

자료: chiffres clés du PLF 2017

나. 재정전망

1) 세입 및 세출전망

- (지출) 2017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3,743억유로) 1.9% 정도 증가한 3,817억유로로 계획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2015년 55.5%의 정점에서 2016년 55.0%로 감소하며, 이후에도 2017년 54.6%, 2018년 53.8%, 2019년 52.8%의 하락세를 지속하다 2020년 51.8%에 도달할 계획
 - 2016년 명목지출 증가율은 지출 통제의 지속으로 2002-12년 3.6%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1.4%이며, 이후 2017-18년 1.6%, 2019-20년 1.8%로 제한할 계획
- (수입) 2017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3,017억유로) 1.8% 증가한 3,070억유로로 전망되며, 이 중 조세수입은 2,925억유로, 세외수입은 145억유로
- 조세부담률은 2013-14년 44.8%의 정점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6-17년 44.5%, 2018년 44.3%, 2019년 44.2%, 2020년 43.8%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
 - 2017년 전년 대비 안정화되는 조세부담률(44.5%)은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 공제(CICE), 책임·연대 협약을 통한 가계와 기업의 감세정책에 기인

〈표 III-2〉 FY2017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15 결산	2016		2017 예산법안
		본예산	수정	
재정지출(Dépense nettes)	366.7	377.2	374.3	381.7
재정수입(Recettes nettes)	294.5	303.5	301.7	307.0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80.1	287.9	285.9	292.5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4.4	15.6	15.8	14.5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72.2	-73.7	-72.6	-74.7
부속예산(Solde du budget annexes)	0.0	0.0	0.0	0.0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1.6	1.4	2.7	5.4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70.5	-72.3	-69.9	-69.3

자료: PLF 2017

〈표 III-3〉 2015-2020년 재정지표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조세부담률	44.7	44.5	44.5	44.3	44.2	43.8
재정지출	55.5	55.0	54.6	53.8	52.8	51.8
명목지출 증가율	0.8	1.4	1.6	1.6	1.8	1.8
실질지출 증가율	0.8	1.3	0.8	0.2	0.0	0.0

자료: PLF 2017-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2) 재정수지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6년 3.3%, 2017년 2.7%로 전망되어 2017년 재정적자는 2014-2019 중장기 예산법안, 2015.4월과 2016.4월의 안정화프로그램의 목표와 일치하게 EU의 기준인 3% 이하를 달성할 전망
- 구조적 재정적자는 2000년대 수준을 회복하여 2015년 1.9%, 2016년 1.6%, 2017년 1.1%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0년 0.1%의 흑자로 돌아설 전망

〈표 III-4〉 2015-2020년 재정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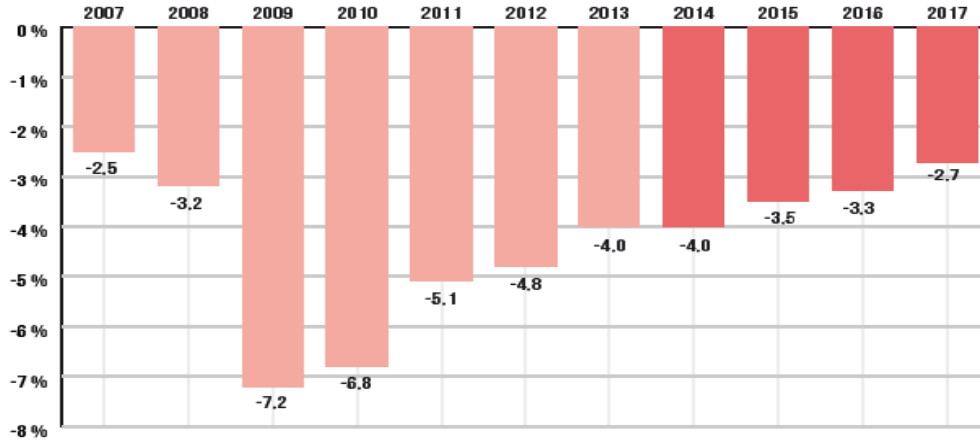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구조적 재정수지	-1.9	-1.6	-1.1	-0.6	-0.1	0.1
재정수지	-3.5	-3.3	-2.7	-2.0	-1.2	-0.6

자료: PLF 2017-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그림 III-1] 2007년 이후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PLF 2017

3) 채무비율

- 국가채무 증가세는 공공계정의 회복으로 2012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96.1%에서 2017년 96.0%로 안정화될 전망
 - 2012-2017년 사이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6%p)이 2007-2012년 증가 폭(25%p)보다 감소⁴⁴⁾

〈표 III-5〉 2015-2020년 채무비율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가채무 ¹⁾	96.2	96.1	96.0	95.1	92.9	90.1
국가채무 ²⁾	93.1	93.1	93.1	92.2	90.2	87.5

주: 1)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 포함(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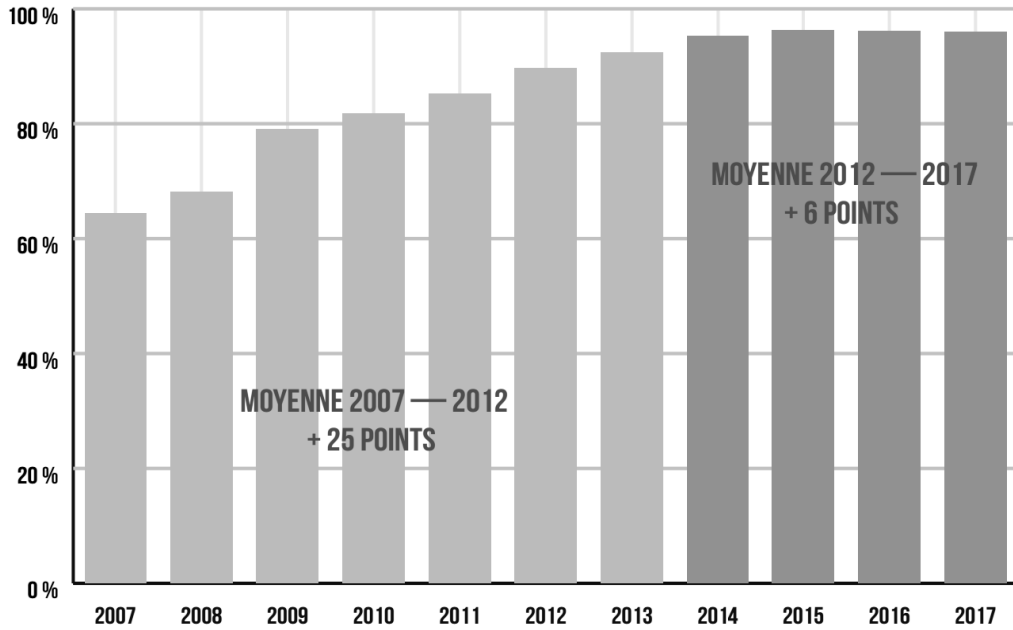
2)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 제외

자료: PLF 2017-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44)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포함(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

[그림 III-2] 2007년 이후 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PLF 2017

2 예산기조

- 2017년 예산안은 2012년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 시작된 '5개년 경제전략'에 부합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을 위한 개혁, 재정건전성 회복, 사회정의 강화'를 기조로 하며, 정책우선순위 분야는 보안, 고용, 청년과 교육, 불평등 감소, 투자
- 예산안은 3가지 기조에 따라 기업의 고용 증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지출증가 속도의 역사적 추세 이하 유지 및 정책우선순위의 재원마련을 위해 지출통제를 지속하며,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인하하여 사회 정의를 강화
 - 특히, 정책우선순위 분야 중 미래를 위한 준비로 보안(20억유로), 고용(20억유로), 교육(30억유로)에 총 70억유로를 추가 투입할 계획
 - (보안)
 - 2017년 내무부의 테러대응 장비 확충을 위해 6억유로를 할당하고 2,286명의 경찰, 헌병대 신규 고용을 통한 보안인력 충원
 - 법무부에서도 테러대응 보안인력 확충을 위해 2,100개의 일자리 창출, 법원의 기능 향상과 급진주의 대응을 위해 2017년 예산을 3억유로 증액
 - 2017년 국방부 미션 예산을 6억유로 증액하여 324억유로로 할당, 박물관의 외곽을 포함하는 보안 장치의 강화를 위해 추가 자금 지원
 - (고용)
 - 2016.1월 실업 긴급대책에서 기발표된 중소기업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신규 채용 시 1인당 분기별 500유로) 지급 기한을 2016년 말에서 2017년 말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8억유로 증액
 - 15만명의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보장제도(La Garantie Jeunes)⁴⁵⁾의 일반화로 청년 통합을 촉진 등
 - (청년과 교육)
 - 2017년 교육부에 11,712개, 대학에 9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5년간 교육과 연구부문에 6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2012)이 지켜질 것으로 예상

45)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하는 18~26세의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의 보조금을 지급(2016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KIPF 참고)

- 이러한 새 일자리 창출 계획은 2013.7.8.일에 발표된 학생 정원 증원, 교사훈련 시스템 개선, 교육 개혁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 재건 지침 및 계획 법(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fondation de l’école de la République)’의 이행을 반영
- 2017년 시민자원봉사 단체(Service Civique)에 대한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유로(30%) 증액하여 15만명 청년의 봉사활동 참여 촉진 등
- (불평등 감소)
 - 2013년에 발표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에 대한 다년간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2017년 예산에는 특정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의 인상(5년간 가족보조금 50% 및 가족지원수당 25% 인상)을 계획 등
- (투자)
 - 2017년 새로운 미션인 ‘미래 투자(Investissement d’avenir)’에 100억유로를 배정하여 제3차 미래투자프로그램⁴⁶⁾을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2억유로에 달하는 융자 제공

46) 2015.9.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제3차 미래투자프로그램은 교육 및 연구(29억유로), 연구의 촉진(30억유로), 기업 현대화(41억유로)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

3 예산안 내용(PLF 2017)

- 2017년 예산법안(PLF 2017: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7)은 2016년 9월 28일에 발표되어 12월 20일 예산법(LF 2017: Loi de finance 2017)으로 통과

가. 세입내역

- 2017년 재정수입은 2016년 수정전망 대비 1.8% 증가한 3,070억유로로 전망
 - 2017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2.3%(66억유로) 증가한 2,925억유로로 전망
 - － 조세수입 중 경제성장에 의한 자연증가분은 97억유로(3.4%)이며, 주로 가계소비와 투자 활력에 따른 부가가치세(40억유로)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세(26억유로) 증가에 기인
 - －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증가분(97억유로)은 2017년 새로운 조세정책(-3억유로), 2016년 예산안 이전 조치의 효과(-15억유로), 기타 이전(transfert) 수입(-14억유로) 감소에 의해 상쇄
 - 2017년 새로운 조세정책에 의한 세수감소(-3억유로)는 중산층의 소득세 인하(-10억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3억유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5억유로), 주택 저축 계획의 자본소득 과세 범위 확대(4억유로)를 포함
 - －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51.1%, 소득세 25.1%, 법인세 10.1% 순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2017년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약 3.0%(44억유로) 증가, 소득세는 전년 대비 2.7%(19억유로) 증가, 법인세는 전년 대비 약 3.6%(-11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2%(13억유로) 감소한 145억유로로 전망

〈표 III-6〉 FY2017 세입전망

(단위: 십억유로)

	2015 결산	2016 본예산	2016 수정	2017 예산법안
I. 재정수입	294.5	303.5	301.7	307.0
II. 조세수입	280.1	287.9	285.9	292.5
소득세	69.3	72.1	71.5	73.4
법인세	33.5	32.8	30.5	29.4
부가가치세	141.8	144.6	145.0	149.4
에너지제품소비세	13.8	15.9	15.9	16.2
기타 세입	21.7	22.4	23.0	24.1
III. 세외수입	14.4	15.6	15.8	14.5

자료: PLF 2017

나. 세출내역

□ 2017년 재정지출은 3,817억유로로 2016년 수정전망 대비 1.9% 정도 증가

- 일반공공행정, 이민 및 통합정책, 노동 및 고용,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 지방재정지원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외교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 (예비비, 정부재정관리 제외)
 - － 일반공공행정 분야: 2017년 총선과 대선 실시, 범죄예방기금의 이전금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한 23억유로
 - － 외교 분야: 해외 국유자산의 평가와 합리화 지속, 평화유지활동(PKO)과 국제기구 분담금 11%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한 29억유로
 - － 이민 및 통합정책 분야: 난민 30,000명 수용, 프랑스 외무부 산하의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국(OFPRA)과 이민 통합국(OFIG)에 대한 보조금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1억유로
 - － 노동 및 고용 분야: 청년 고용지원 정책에 7억유로 배정 등 전년 대비 13.6% 증가한 153억유로
 - －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 분야: 2017년 청년 15만명을 타깃으로 시민자원봉사 단체(Service Civique)의 지원 예산 전년 대비 30% 증액, 해외영토의 스포츠시설 확충 1,000만유로 등 전년 대비 13.9% 증가한 7억유로

- 지방재정지원 분야: 취약한 지자체를 위한 도시연대 보조금 개혁,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 시정을 위해 수직적 균등화 보조금의 증대, 2016년 설립된 지방 공공투자 지원 기금의 갱신(추가 2억유로) 등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31억유로

〈표 III-7〉 2017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십억유로)

31개 미션 ¹⁾ (지불예산(credit de paiement, CP)) ²⁾	2016 본예산 (A)	2017 예산법안 (B)	B-A (%)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3.07	2.88	-6.19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2.02	2.32	14.85
농업·임업·수산업(Agricultur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2.94	3.12	6.12
정부개발원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2.48	2.62	5.65
퇴역군인 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2.61	2.55	-2.30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50	0.51	2.00
예비비(Crédits non répartis)1)	0.04	0.02	-50.00
문화(Culture)	2.53	2.70	6.72
국방(Défense)	31.84	32.44	1.88
국가정책방향(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1.34	1.37	2.24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E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	8.92	8.99	0.78
경제(Économie)	1.63	1.64	0.61
주택 및 건설(Égalité des territoires et logement)	17.97	18.11	0.78
정부재정관리 - 부채 관리·국채발행 등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2)	0.63	0.57	-9.52
교육(Enseignement scolaire)	47.97	50.06	4.36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8.24	8.17	-0.85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0.94	1.06	12.77
법무부(Justice)	6.60	6.89	4.39
언론(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0.56	0.57	1.79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2.02	2.03	0.50

〈표 III-7〉의 계속

31개 미션 (지불예산(credit de paiement, CP))	2016 본예산 (A)	2017 예산법안 (B)	B-A (%)
균형발전정책(Politique des territoires)	0.73	0.69	-5.48
의회·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0.99	0.99	0.00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5.93	26.75	3.16
복지 및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32	6.25	-1.11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1)	2.92	3.14	7.53
건강 복지(Santé)	1.32	1.26	-4.55
치안(Sécurités)	12.54	12.98	3.51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6.90	17.65	4.44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0.65	0.74	13.85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3.47	15.30	13.59
미션별 합계	226.62	234.37	

주: 1. 의회 예비비 제외

2.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에 대한 부담금과 채무부담을 제외

1) 2017년 새로운 미션인 〈미래 투자(Investissement d'avenir)〉가 생성되었으며, 투입승인(autorisation d'engagement, AE)만 부여

2) 투입승인(AE)은 투자될 수 있는 예산지출상한액이며, 지불예산(CP)은 투입승인의 한도 내에서 체결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출명령이 될 수 있거나 지불될 수 있는 지출상한액을 의미(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자료: PLF 2017

〈참고 III-1〉 프랑스 수정예산안 내용

- FY2016 수정예산안(PLFR: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16) 발표 (2016.11.18)⁴⁷⁾
 - (경제전망) 2016년 경제성장률은 2016년 본예산 대비 0.1%p 하향 조정된 1.4%, 2017년은 1.5%로 2016년 본예산 전망치를 유지
 - (재정전망) 재정적자는 2016년 GDP 대비 3.3%, 2017년 2.7%로 2016년 본예산 전망치와 동일
 - (재정수지) 재정적자는 2016년 본예산 대비 24억유로 감소한 699억유로
 - (지출) 재정지출은 본예산 대비 4억유로 증가한 3,776억유로
 - (수입) 재정수입은 본예산 대비 17억유로 감소한 3,018억유로

〈표 III-8〉 FY2016 수정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15 (실적)	2016 본예산(A)	2016 수정예산(B)	B-A
총지출	366.7	377.2	377.6	0.4
총수입	294.5	303.5	301.8	-1.7
조세수입	280.1	287.9	285.3	-2.6
세외수입	14.4	15.6	16.5	0.9
특별회계	1.6	1.4	5.8	4.5
재정수지	-70.5	-72.3	-69.9	2.4

출처: PLFR 2016

- (주요 내용) 부유세 회피 방지를 위해 전문적 자산의 개념 명확화 및 조세포탈 대응 지속, 헌법과 EU공동체에 부합한 프랑스 세법 개정, 경제 및 문화 활동 지원과 환경성과 강화, 공적개발원조 지원 강화 등 정책 포함

47) 2016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2017년 성장 및 고용 지원 정책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에 중점을 둠
 - 가계의 구매력 강화
 -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20% 인하
 - 2014년부터 시작된 가계의 감세조치를 2017년에도 지속하여 10억유로 규모의 추가 소득세 감세(2014년부터 총 60억유로)를 통해 5백만 가구(2014년부터 총 12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가구의 근로자 고용시(예, 가사도우미) 고용비의 50% 세제혜택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17년 10억유로를 투입
 - 이 세제혜택의 수혜자는 주로 은퇴자이며 13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총 400억유로 규모의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와 책임·연대 협약 조치를 통해 기업 고용 및 생산 지원
 -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7%로 인상
 -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URSSAF(가족수당 및 사회보장세 징수 연합)에 납부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을 10억유로 규모 축소
 -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28%로 단계적 인하
 - 2017년에 연간 매출액 75,000유로 이하 모든 중소기업, 2018년에는 연간 매출액 50만유로 이하 기업, 2019년에는 연간 매출액 10억유로 이하 기업, 2020년에는 모든 기업에게 법인세율 28% 적용
 - 8년 미만 신생 혁신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비용의 15%를 세금면제 등

〈표 III-9〉 400억유로 규모의 기업지원 정책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CICE	-11	-17	-18	-19
책임·연대 협약				
사회보장부담금 인하		-5.5	-9	-10
사회연대분담금세(Contribution Sociale de Solidarité des Sociétés, C3S)1) 축소		-1	-2	-2
법인세 특별 부담금2) 폐지			-3	-3
법인세 인하				-0.5
중소기업 투자계획		-0.5	-1.5	-1.5
고용 계획			-2	-3
농민 사회보장부담금 경감			-0.5	-0.5
합 계	-11	-24	-36	-39.5

주: 1) 연간 매출액 76만유로 이상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0.16% 부과

2) 연간 매출액 2억 5천만유로 이상 대기업에 대해 특별 부담금 부과

자료: PLF 2017

나. 재정건전화

- 2017년 예산안의 정부지출 절감은 2013년부터 시작된 ‘5개년간 전방위적 지출 절감 노력’의 지속과 공공관리 현대화 프로젝트, 부문별 절감을 기반으로 함
 - 2013년부터 매해 지출 절감 노력을 지속하여 2017년 총재정지출을 2013년 대비 69억유로 절감

〈표 III-10〉 5개년간 지출 절감 노력

(단위: 십억유로, CP)

구 분	2013	2017	2017/2013 증감
연금과 이자비용제외 재정지출	303.2	298.6	-4.6
총재정지출	395.2	388.3	-6.9

출처: PLF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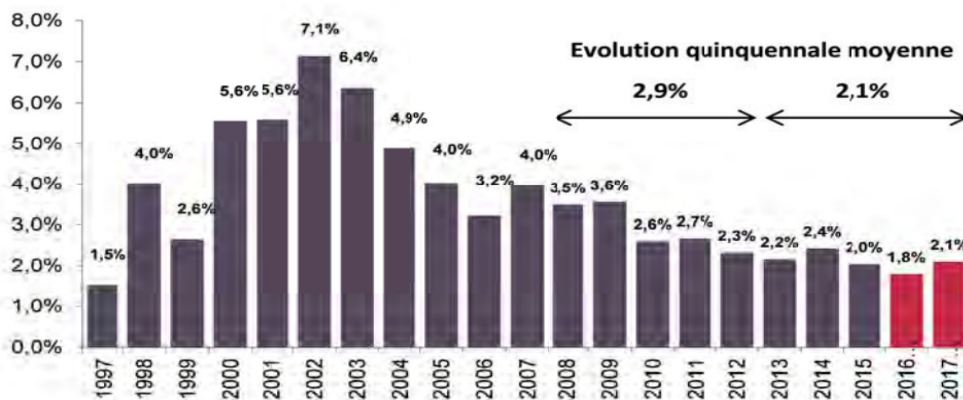
- 공공관리 현대화를 위해 국유재산정책의 개혁, 국가와 사용자 간 교류의 디지털화(Dématérialisation), 정부조달 기능의 강화를 통한 조달비용 6억 5,000만유로 절감
- 2017년 5월과 6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총선 선거운동의 디지털화(Dématérialisation de la propagande électorale)⁴⁸⁾로 16억 8,900만유로의 비용절감
- 비우선순위 정책부문의 인력감축을 위해 국가(État)에서 2,715개, 국가의 집행자(opérateurs de l'Etat)에서 476개의 일자리를 폐지할 예정
- 2017년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28억유로 축소 등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FY2017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17)에서 2017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 목표를 전년 대비 29억유로 감소한 42억유로로 설정
- 2017년 사회보장예산의 하위부문인 의료보험 부문, 법정연금기금 부문, 가족지원금 부문의 수지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산재보험 부문 수지는 전년 동일

[그림 III-3]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 추이 및 전망

(단위: %)



출처: PLFSS 2017

48) 선거 선전의 디지털화(Dématérialisation de la propagande électorale)는 후보자의 선거광고 전단지과 투표용지를 종이문서로 보내지 않고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의미

- 2017년 의료보험지출 증가율(ONDAM)을 2.1%로 제한하며, 이를 위해 의료지출의 자연증가율(4.3%) 대비 41억유로를 절감할 계획
- 나머지 사회보장부문에서 수입확충과 지출절감의 여러 조치를 통해 15억유로 규모의 사회보장수지를 개선할 계획
 - 3억 3,000만유로의 수입확충: 담배 유통업체의 매출액에 기여금 부과 등
 - 5억유로의 사회분담금(cotisations sociales)과 사회수당 포탈 대응
 - 최근 일부 개혁에서 3억 5,000만유로의 지출절감: 새로운 출산휴가 수당의 당초 전망치보다 더딘 증가, 노령연금과 독립노동자 및 농업근로자 사회보장제도의 연금 통합 체제 구축 등
 - 사회보장기관 관리 비용 2억 7,000만유로 절감
- 중기적으로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2017년 42억유로, 2018년 5억유로로 감소하며 이후 흑자로 전환되어 2019년 33억유로, 2020년 77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표 III-11〉 사회보장부문 예산 수지 전망

(단위: 십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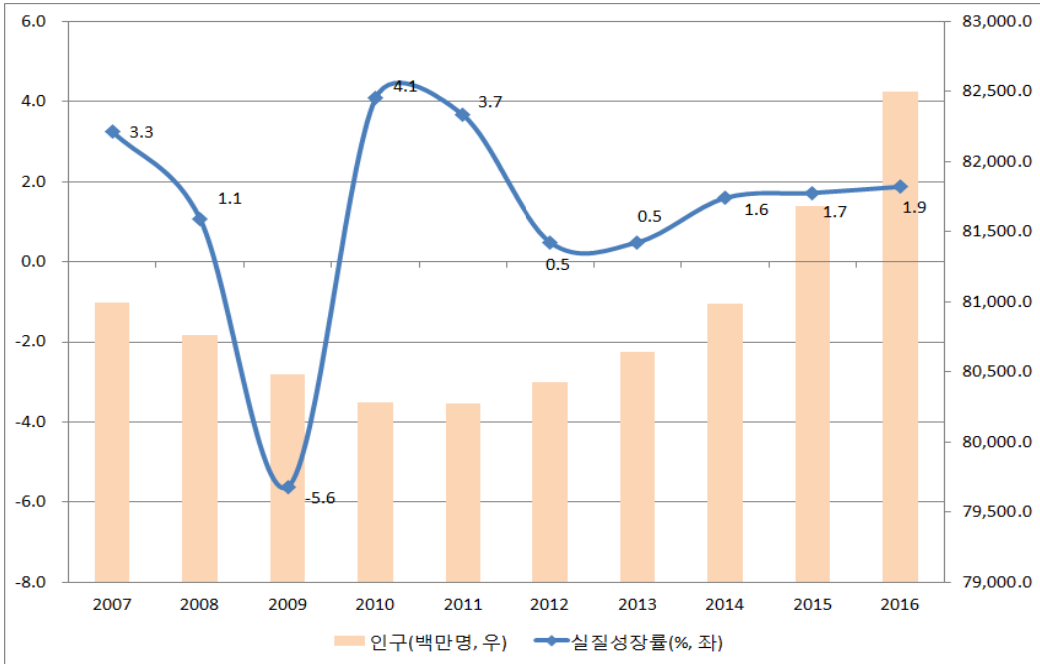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보험(Maladie)	-4.1	-2.6	-0.9	1.3	3.7
산재보험(AT-MP)	0.7	0.7	1.6	1.8	1.6
법정연금기금(Vieillesse)	1.1	1.6	0.6	0.7	1.1
가족지원금(Famille)	-1.0	0.0	0.7	0.8	1.0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수지	-3.4	-0.4	2.1	4.6	7.4
노령연대기금(FSV)	-3.8	-3.8	-2.6	-1.3	0.3
총재정수지(RG+FSV)	-7.2	-4.2	-5	3.3	7.7

출처: PLFSS 2017

IV. 독일

- FY2017: 2017.1. ~ 2017.12.
- FY2017 예산편성 일지
 - (2016.3.23.) FY2017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내각 결의
 - (2016.7.6.) FY2017 예산안 및 FY2016-20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2016.12.16.) FY2017 예산안 및 FY2016-20년 중기재정계획 의회 통과
- 출처
 - 재무부: Haushaltsgesetz 2017, 2016.7.
Finanzplan des Bundes 2016 bis 2020, 2016.7.
Finanzbericht 2017, 2016.8.
 - 연방은행: Monatsbericht Dezember 2016, 2016.12.
- 환율: 1유로 = 약 1,283.30원(2016년도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2016년 경상GDP 4조 477억달러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16년 기준 84.2%(2015년 한국은 84.8%)
- 인구: 약 8,250만명(2016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요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연방은행의 2016년 12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17년 1.8%, 실업률은 5.9%,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로 집계됨
- (재정전망) FY2016-2020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17년 독일은 재정수지 균형과 지속적인 국가부채 감소 등으로 낙관적인 재정상황 지속

□ 예산기조: 교육·연구, 외치·내치, 난민 통합,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

- '14년에 달성한 재정균형은 '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채무 또한 '20년 50%대로 진입할 예정
- 금년 교통 인프라에 약 128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2020년 동안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13억유로를 추가로 지출할 계획

□ 예산안 내용

- (수입) '17년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16년 대비 3.7% 증가한 3,287억 유로 편성,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지출) '16년 대비 3.7% 증가한 3,287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환경부, 교통인프라부, 국방부, 노동사회부의 증가가 두드러짐

□ 주요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우수대학 육성·지원 사업, 대학펀딩, 직업훈련 등의 교육·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
- (재정건전화) 2016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16은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정책 채택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6. 1. 13.	FY2015 잠정결산 발표	2016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6. 1. 27.	경제에너지부, '16년 경제전망보고서 발표	
2016. 2. 23.	'15년 통합재정수지 발표	
2016. 3. 23.	FY2017 예산안 및 FY2016-2020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내각 결의	
2016. 4. 13.	'16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채택	
2016. 4. 14.	독일 4대 경제 연구소, 2016년 경제전망 발표	
2016. 5. 4.	세수 추계 결과 발표	
2016. 5. 20.	FY2016 5월 재정동향 발표	
2016. 6. 8.	안정화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2016. 6. 3.	연방은행, '16~'17년 경제전망 발표	
2016. 7. 6., 11. 22., 12. 16.	FY2017 예산안 및 FY2016-2020 중기재정계획안 의회 상정 및 통과	2016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6. 09. 14.	연방내각, '19년까지 주·지방정부에 2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원 법안 승인	
2016. 10. 07.	에너지경제부, 가을경제전망(Herbstprojektion) 발표	
2016. 10. 12.	연방내각, 기본소득면세액 기준, 자녀면세액 기준, 자녀수당, 자녀추가수당인상 채택	
2016. 11. 02.	연방내각, 주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난민신청자 추가지원 승인	
2016. 11. 04.	재무부, 제149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발표	
2016. 11. 30.	지방정부의 교육시설 투자를 위한 추경예산안(Nachtragshaushalts) 의회 상정 및 통과	
2016. 12. 09.	연방은행, 2017~2018년 경제전망 발표	
2016. 12. 12.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es), 제14차 회의 개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연방은행의 2016년 12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17년 1.8%, 실업률은 5.9%,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로 집계됨
 - (경제전망) 실질GDP 성장률은 '16년 1.8%, '17년 1.8% '18년 1.6%로 전망
 - － 노동시장의 호황과 가계소득 상승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난민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적 조치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었고, 완만한 경제성장으로 '17년 5.9%, '18년 5.8%로 낮게 유지될 전망
 - (물가상승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17년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
 - － 향후 가계소비는 다소 낮아질 전망
 - (위험요인)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경제성장 부진이 하방위험으로 존재하며,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및 부동산시장의 하향조정 또한 위험요인으로 지적

〈표 IV-1〉 경제전망

(단위: %)

	2015	2016	2017	2018
실질GDP 성장률	1.5	1.8	1.8	1.6
실업률	6.4	6.1	5.9	5.8
소비자물가 상승률	0.1	0.3	1.4	1.7

자료: 연방은행,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2016.12.9.

〈참고 IV-1〉 2017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7)⁴⁹⁾

- (배경) 연방정부는 1967년 제정된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법⁵⁰⁾에 따라 동 보고서를 매년 하원과 상원에 제출
- (경제전망) 강건한 국내수요와 수출증가에 기인하여 '17년 경제성장률은 1.4%, 실업률은 6.0%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25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 기록
 - 연방은행의 '16년 12월 월간보고서에는 실질 GDP 성장률은 '16년 1.8%, '17년 1.8% '18년 1.6%로 전망
- (정책방향) 교통·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지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복지지출 확대를 통한 포용적 성장 기조임
 - 연방교통인프라계획 2030⁵¹⁾의 일환으로 금년 약 128억유로 규모의 교통인프라 투자와 초고속 인터넷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

〈표 IV-2〉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2015	2016	2017(전망)
실질 GDP 성장률	1.7	1.9	1.4
실업률	6.4	6.1	6.0

자료: 에너지경제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17*, 2017.1.27., p.7.

49) 에너지경제부, 2017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7) 2017.01.25.

https://www.bmwi.de/Redaktion/EN/Publikationen/annual-economic-report-2017.pdf?__blob=publicationFile&v=7

50) StWG;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51) 연방교통인프라계획(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FTIP): 교통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2030년까지 도로, 철도, 수로 등에 약 2,645억유로를 투입할 계획

나. 재정전망

- FY2016-2020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17년 독일은 재정수지 균형과 지속적인 국가부채 감소 등으로 낙관적인 재정상황 지속
 - (재정지출) '17년 예산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3,287억유로이며, 향후 약 2%대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금번 예산안은 연구·인프라, 외치·내치, 난민통합 등에 중점
 - (재정수입) '17년 재정수입은 3,287억유로이며 2020년까지 점진적인 세수증액을 통해 3,493억유로 증가시킬 계획
 - －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137억유로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9억유로 감소 예상
 - (구조적 재정수지) 재정균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2020년까지 GDP 대비 60% 이내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표 IV-3〉 FY2017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

	2016	2017 (정부안)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재정지출	3,169	3,287	3,311	3,433	3,493
전년 대비 증감률(%)	1.8	3.7	0.7	3.7	1.7
재정수입	3,169	3,287	3,311	3,433	3,493
조세수입	2,881	3,018	3,155	3,279	3,394
세외수입	228	269	156	154	99
신규차입	0	0	0	0	0
국가채무	68.25	65.75	63.5	61.25	59.5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 2017 und Finanzplan bis 2020*(2017.07.)

〈참고 IV-2〉 FY2016 추가경정예산

- 지방정부의 교육시설 투자를 위한 추경예산안(Nachtragshaushalts) 의회 상정 및 통과(2016.11.30.)
 - 연방내각은 교육시설 투자를 위해 지방정부에 35억유로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표 IV-4〉 FY2016 추경예산안

(단위: 억유로, %)

	당초예산	추경안	2016년 예산
재정지출	3,169		3,169
투자	315	350	350
재정수입	3,169		3,169
조세수입	2,881		2,881
신규차입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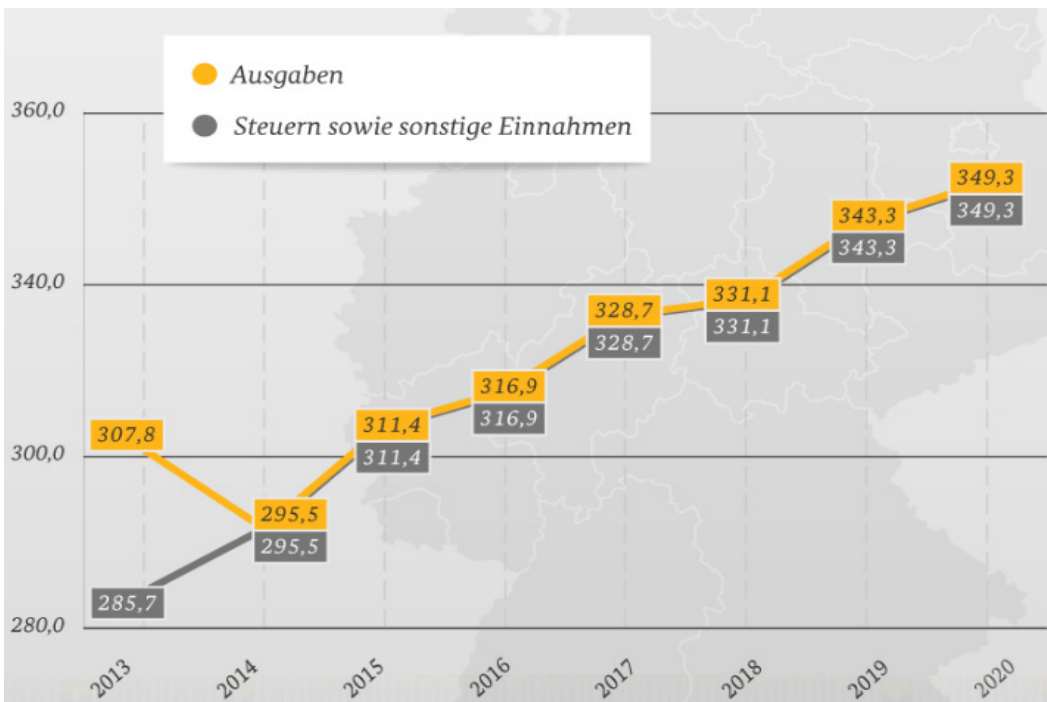
자료: 연방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6.11.30.

2 예산기조

- 연구 및 인프라, 외치·내치, 난민 통합, 교통인프라 등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
 - (재정건전화) '14년에 달성한 재정균형은 '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채무 또한 '20년 50%대로 진입할 예정
 - (성장) 금년 교통 인프라에 약 128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2020년 동안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13억유로를 추가로 지출할 계획

[그림 IV-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간 격차

(단위: 십억유로)



자료: 연방재무부, *Bundshaushalt 2017 und Finanzplan bis 2020*(2017.07.)

〈참고 IV-3〉 FY2016 잠정결산⁵²⁾

□ 재무부, FY2016 잠정결산 발표(2017.1.12.)

- (재정지출) 2016년 재정지출은 3,112억유로로 기준 지출목표 대비 57억유로 감소
- (재정수입)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3,174억유로 집계, 이는 목표 대비 5억유로 높은 수치이며 재정지출 대비 62억유로 높게 기록
 - 난민관련 지원을 위해 90억유로의 추가 지원 예상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적자를 기록, 이는 「채무제한법」상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목표⁵³⁾ 대비 0.25%p 높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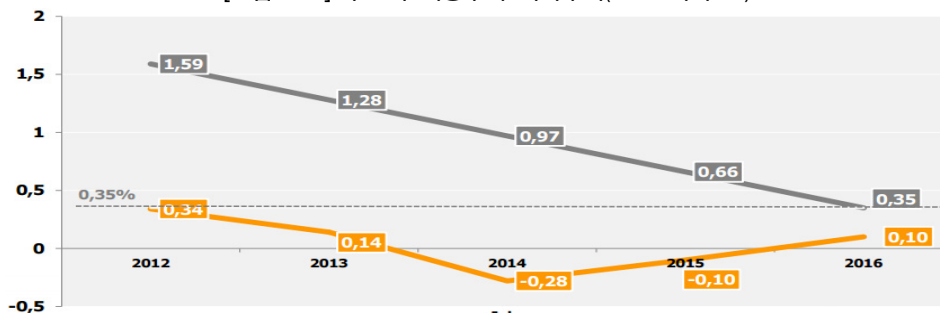
〈표 IV-5〉 FY2016 잠정결산

(단위: 억유로)

	2016(목표)	2016(결산)	목표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3,169	3,112	-57
재정수입	3,169	3,174	5
조세수입	2,881	2,890	9
세외수입	227	285	57
예비비	61	0	-61
신규차입	0	0	-

자료: 연방재무부,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2016*

[그림 IV-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추이(GDP 대비 %)



주: • 2010년 여름에 설정된 적자 감축 목표, • 2012~2013: 적자, 2014~2015: 흑자, 2016년: 잠정적자, --- : 「채무제한법」상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목표('16년부터 GDP 대비 0.35% 이하 달성)

자료: 연방재무부,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2016*

5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7.1 No.2」, 2017.1.

53) Schuldenbremse(Debt Brake): 2016년부터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주 정부에 대해서는 2020년에 구조적 균형을 이루어야 함(참고: 『정책분석 14-03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161).

3 예산안

가. 재정수입

- '17년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16년 대비 3.7% 증가한 3,287억유로 편성
- (조세수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가하여 '17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3,108억유로 규모임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수수료와 요금,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6년 대비 0.37% 증가한 269억유로 규모임

〈표 IV-6〉 항목별 재정수입

(단위: 억유로, %)

	2016 (A)	2017 정부안 (B)	증감률 [(B-A)/A]
조세수입	2,901	3,108	4.03
소득세 ¹⁾	1,005	1,065	5.97
소득세·법인세 ²⁾	218	239	9.63
부가가치세	1,108	1,169	5.51
수입부가가치세	17	18	5.88
담배세	145	144	-0.69
코냑세	21	20	-4.76
에너지세	320	319	-0.31
전기세	66	66	0.00
기타연방세	1	-23	-2400.00
세외수입	268	269	0.37
재정수입	3,169	3,287	3.72

주: 1) 해당 소득세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분과 연말정산분을 의미

2) 해당 소득세는 분리과세분과 이자원천징수분을 의미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7*, 2016.8., p.75.

나. 재정지출

- FY2017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16년 대비 3.7% 증가한 3,287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환경부, 교통인프라부, 국방부, 노동사회부의 증가가 두드러짐
- (교육연구부)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지속가능한 경영, 에너지, 혁신적인 근무환경, 건강, 지능형 주행기술 등 6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교육연구부 예산은 전년 대비 4.6%(약 12억유로) 증가한 약 176억유로 편성⁵⁴⁾
 - (경제협력개발부) 인도주의적 구호(Humanitäre hilfe) 및 국제기후변화금융(Internationale Klimaschutzfinanzierung)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7.8%(5.8억유로) 증액된 79.8억유로 편성
 - (내무부) 연방경찰 지원 및 인력보강 등 국내치안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6.9%(5.3억 유로) 증액된 83.3억유로 편성
 - (국방부) 국방구조계획 및 국제군사공조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8%(23억유로) 증액된 366억유로로 편성
 - (환경부) 국제기후보호 이니셔티브 기금 및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20%(9.1억유로) 증액된 54.5억유로로 편성
 - (에너지경제부) 초소형 전자공학 분야 등의 첨단기술지원 및 디지털 아젠다⁵⁵⁾를 위한 직업교육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 전년 대비 -2.5%(1.8억유로) 감액된 74.3억유로 편성
 - (교통·디지털 인프라부)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의 미래투자 프로그램(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이행을 위해 도로 건설 및 초고속 인터넷 확장에 투자할 계획, 전년 대비 9.2%(22.5억유로) 증액된 268억유로의 예산 편성
 - (노동사회부) 실업수당(ALG II; Arbeitslosengeld II), 연금보험지출, 주택 및 난방 보조, 구직자 지원 등을 위해 6.7%(87억유로) 증액된 1,386억유로 편성

54) 교육연구부, 2017 예산안 설명

<https://www.bmbf.de/en/education-and-research-priority-areas-of-federal-government-policy-1410.html>

55) 디지털 아젠다: 독일정부는 2014년에 도입된 디지털 아젠다 프로그램은 독일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부가가치 창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함(BMVI, 2016)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육아수당, 아동 돌봄, 난민어린이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0.9억유로) 증액된 91억유로 배정
- (식품농업부) 독립적 농업사회보장제도 구축,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공동업무 (GAK) 등의 농업지원정책으로 전년 대비 5.38%(3억유로) 증액된 58.9억유로 편성

〈표 IV-7〉 부문별 재정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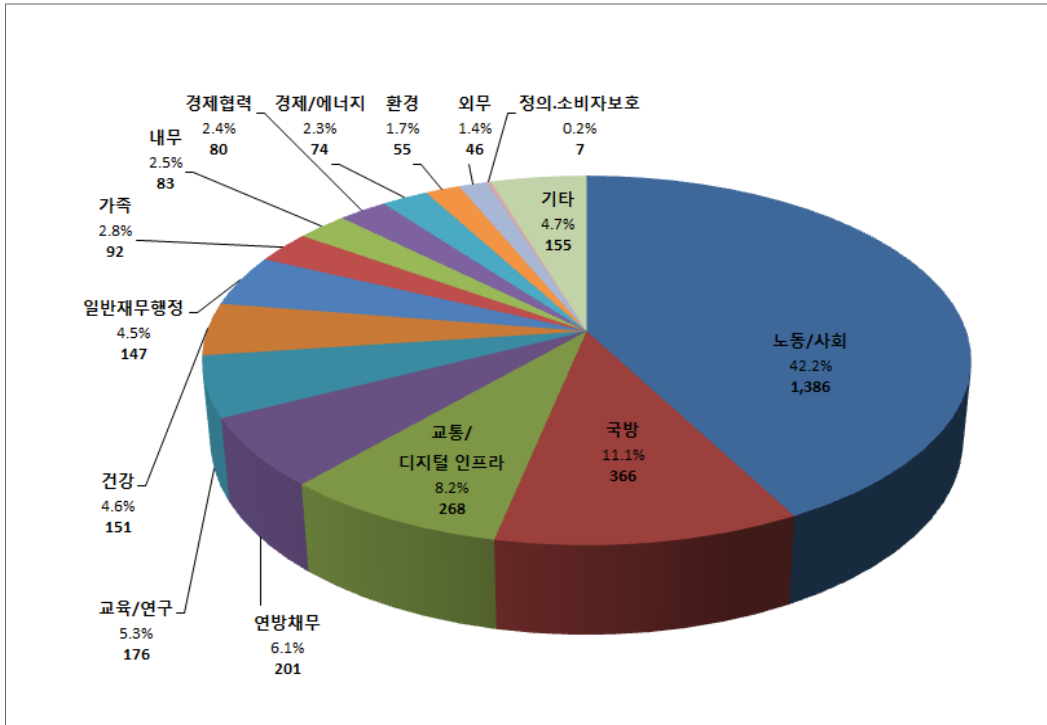
(단위: 천유로, %)

구 분	2016 (A)	2017 정부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대통령실	34,320	36,093	1,773	5.17
연방하원	856,981	849,686	-7,295	-0.85
연방상원	24,996	28,173	3,177	12.71
총리실	2,413,099	2,481,400	68,301	2.83
외무부	4,810,140	4,604,160	-205,980	-4.28
내무부	7,801,488	8,338,282	536,794	6.88
법무부	745,492	735,239	-10,253	-1.38
재무부	5,885,151	5,996,408	111,257	1.89
에너지경제부	7,621,783	7,432,777	-189,006	-2.48
식품농업부	5,595,168	5,896,086	300,918	5.38
노동사회부	129,888,984	138,613,794	8,724,810	6.72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24,571,659	26,821,234	2,249,575	9.16
국방부	34,287,847	36,611,620	2,323,773	6.78
보건부	14,572,911	15,096,146	523,235	3.59
환경부	4,544,396	5,455,423	911,027	20.05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9,103,673	9,195,827	92,154	1.01
헌법재판소	29,191	31,053	1,862	6.38
회계검사원	148,610	148,424	-186	-0.13
자료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위원회	13,716	15,031	1,315	9.59
경제협력개발부	7,406,751	7,986,985	580,234	7.83
교육연구부	16,400,265	17,557,454	1,157,189	7.06
연방채무	25,227,120	20,115,370	-5,111,750	-20.26
일반조세행정	14,916,259	14,653,335	-262,924	-1.76
재정지출	316,900,000	328,700,000	11,800,000	3.72

자료: 연방재무부, *Hausaltsgesetz 2017*, 2016.8., p.28.

[그림 IV-3] 2017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비중

(단위: %, 억유로)



〈참고 IV-4〉 FY2017 예산안 연방하원 통과

- '16년 11월 22일, 하원은 지난 7월 6일 편성된 3,287억유로의 예산안에 약 4억유로 증액된 3,291억유로 규모의 예산안 통과(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
 - 인프라, 교육·연구, 외치·내치 분야에 추가적인 지원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 (교육·연구)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지속가능한 경영, 에너지, 혁신적인 근무환경, 건강, 지능형 주행기술 등 6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독일 연구기관 연구지원금을 전년 대비 3% 증액된 59억유로로 편성⁵⁶⁾
 - 우수대학 육성·지원 사업(Excellence Initiative)⁵⁷⁾을 통한 대학지원 강화
 - 경쟁력 있는 독일의 과학시스템을 위해 젊은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강화
 - 대학에서의 아이디어, 지식, 기술 등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혁신적 대학펀딩 사업(Inovative university funding initiative) 채택
 - 고등교육협정(Higher education pact)의 일환으로 주정부의 대학지원을 위해 25억 유로 편성
 - 디지털 교육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직업훈련(digital media in vocational training) 프로그램 예산을 1,400만유로 편성
 - 디지털 아젠다 목표달성을 위해 초소형 전자기기, 서비스 연구, 빅데이터, 고성능 전산, 사이버 보안, 의료정보학 등에 집중 투자
- (인프라 투자) 금년 교통 인프라에 전년 대비 5억유로 증액된 128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2020년 동안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13억유로를 추가로 지출할 계획
 - 도로, 철도, 수로 확장 및 운송 인프라 발전 등에 128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독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18년까지 전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을 확대할 계획

56) 연방교육연구부, 2017년 교육연구부예산 설명자료

<https://www.bmbf.de/en/education-and-research-priority-areas-of-federal-government-policy-1410.html>

57) 우수대학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2014년 9월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 및 독일연구시스템에 미친 영향 등을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평가함(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2016.)

나. 재정건전화

□ 2016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16(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6)*은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정책 채택⁵⁸⁾

* EU 회원국들은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매년 4월 동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경제재무이사회(ECOFIN Council)에 제출

- (경제전망)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임금인상, 저유가의 지속으로 실질GDP 성장률은 '16년 1.7%, '17년 1.5%로 전망
- (재정전망) 2012년 달성된 일반정부 재정수지 균형이 2020년까지 유지되며, 국가부채 수준도 안정성장협약 상한선인 GDP 대비 60%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
 - － (구조적 재정수지) 2015년 GDP 대비 0.8%의 일반정부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2012년부터 실행된 독일의 중기목표인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0.5% 기준은 2020년까지 유지될 전망
 - － (국가부채) 2016년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2.95%p 감소한 68.25%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부채감축 노력으로 2020년에는 부채비율이 50%대에 진입할 전망
- (재정정책)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growth friendly consolidation) 정책으로 교육, 과학, 연구, 교통인프라에 집중 투자
 - － 또한, 광대역 통신망 투자와 난민수용 및 사회통합 관련 지출 확대

〈표 IV-8〉 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GDP 성장률	1.7	1.7	1.5	1.6	1.6	1.6
재정수지	0.7	0	0	0	0	0
구조적 재정수지	0.8	0	0	0	0	0
국가부채	71.2	68.25	65.75	63.5	61.25	59.5

자료: 연방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6*, 2016.4.13.

58) 연방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 제13차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 회의에서는 독일재정, 주정부의 재정건전화 지원금 및 구조개혁에 대해 언급⁵⁹⁾

* 동 위원회는 부채제한법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회의는 통상적으로 연 2회 개최

- (재정) '15년 GDP 대비 0.6%(구조적 0.8%)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추가난민 유입에도 불구하고 '20년까지 법적지출한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일반정부)
- (건전화 지원금) 연방정부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5개 주정부(베를린, 브레멘, 자란트,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작센 안할트)에 대해 '20년 부채제한법상의 균형재정 달성위반 지원금 지급
- (구조개혁) 동 지원금 수급주 중 4개 주정부(베를린, 브레멘, 자란트,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중 브레멘, 쉘레스비히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조개혁 프로그램 이행 차질

□ 제14차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es) 회의에서는 세계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조세수입, 성장친화적 금융정책에 대해 언급⁶⁰⁾

- (재정) '16년 GDP 대비 0.75% 수준의 구조적 재정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국가채무 또한 GDP 대비 68%를 기록할 전망
- (건전화 계획⁶¹⁾) 베를린,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자알란트, 브레멘 등 4개 주의 건전화 보고서 검토결과 긴급 상황으로 인한 예산증액을 필요 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베를린,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건전화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브레멘, 자알란트 주는 향후 추가적인 재건 노력이 필요
- (통독연대협약) 2005~2015년 동안 통독연합연대II(Solidarpakts II)⁶²⁾에 따른 신연방주에 대한 지원금 중 90% 지급 완료

59) 독일 안정화위원회, 13. Sitzung des Stabilitätsrates

60) 독일 연방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6.12.12.

61) 안정화위원회는 연방 및 각 주의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연방·주정부에 대해 건전화계획을 수립. 현재 4개 주에 대한 건전화계획이 2016년까지 수립되어 있음

62) 통독연대협약 I 은 동독 재건을 위해 5개 신연방주에 2004년까지 총 945억유로를 지원하였고, 2005년 체결된 통독연대협약 II는 2019년까지 총 1,560억유로를 지원하는 것임

다. 에너지 정책⁶³⁾

□ '17년 연방정부는 34.3억유로 규모의 에너지 및 기후기금⁶⁴⁾을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독일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

- (수입) 탄소배출권 수입금(13.8억유로) 및 연방정부 지원금 증액으로 전년 대비 4.9% 상승
- (지출) 에너지 효율적 도시 재개발(14.3억유로) 및 기후 변화 프로그램(3.2억유로) 지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표 IV-9〉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입	32.7	34.3	43.0	44.8	44.9
탄소배출권 수익금	12.6	13.8	14.2	12.3	13.4
연방정부 지원금	7.1	8.8	28.8	32.5	31.5
준비금	13.0	11.8			
지출	32.7	34.3	43.0	44.8	44.9
CO ₂ 저감 건물 보수지원 및 에너지 효율적 도시 재개발	8.9	9.4	12.9	16.2	16.8
전기자동차 프로그램	2.1	2.2	2.1	2.1	2.1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8.9	14.3	18.1	18.5	18.4
기후 변화 프로그램	1.6	3.2	3.2	3.2	3.2
에너지 집약 기업 보조	2.5	3.0	3.1	3.3	3.3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2	3.5	1.4	1.0
준비금전입	8.7				

출처: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7*, pp. 52-53.

63)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7*, pp. 52-53.

64) 2011년 이후 에너지 및 기후기금(EKF; Energie- und Klimafonds)을 통한 안전하고 환경적인 재생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라. 난민정책

- 연방내각, '19년까지 주·지방정부에 200억유로 규모의 재정지원 법안 승인⁶⁵⁾
 - '16~'18년 동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해소 및 사회통합비용(Kosten der Integ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과 구직자들에게 주거·난방비를 통합적으로 지원
 - '16~'18년 동안 주정부에 사회통합비용 20억유로를 매년 지원하고, '17년, '18년에 각각 5억유로를 주택기금(Wohnungsbau Mittel)에 지원
 - '18년에는 지방정부에 50억유로를 추가 지원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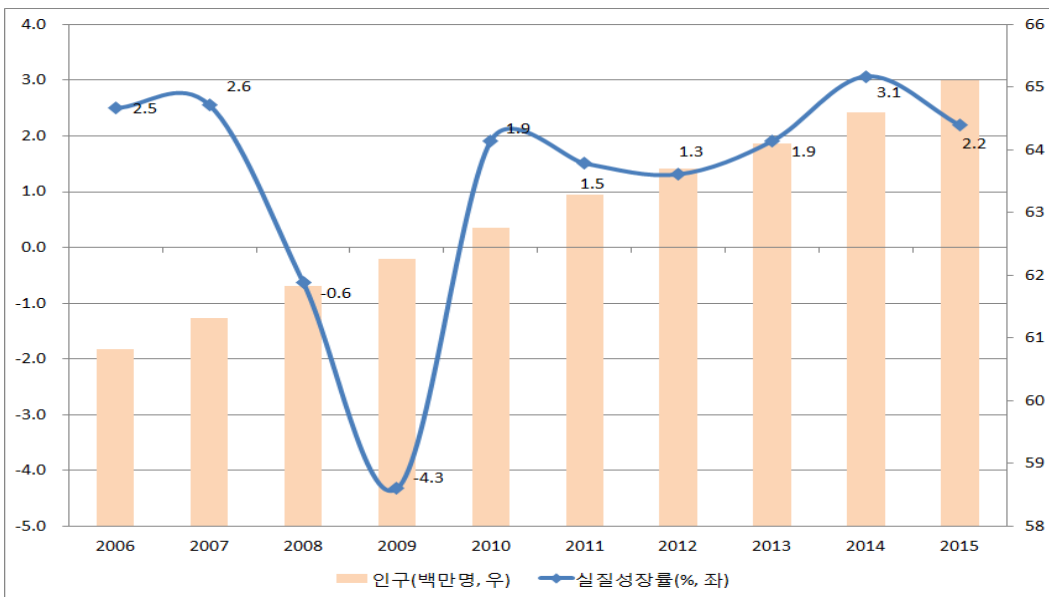
- 연방내각, 주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난민신청자 추가지원 승인⁶⁶⁾
 - 동 지원은 난민 수용시설 마련과 돌봄 등 망명지원자복지법 이행을 위한 추가 지원으로 '16년 25억 5천만유로, '17년 11억 6천만유로 추가 지원 결정

65) 독일 연방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6.09.14.

66) 독일 연방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6.11.2.

V. 영국

- FY2017-18 : 2017년 4월 ~ 2018년 3월
- 출처 : HM Treasury, *Budget 2016*, 2016.3.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6*, 2016.11.
 HM Treasury, *Business tax road map*, 2016.3.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3.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1.
- 환율 : 1파운드 = 약 1572.18원(2016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5년 경상GDP 2조 7,202억달러(우리나라 약 1.5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14년 기준 56.9%(우리나라 84.8%)
- 인구 : 6,511만명(2015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EU탈퇴가 결정됨에 따라 기업투자 및 가계지출 감소가 예상되며, 11월 전망에서 2017년 실질GDP 성장률을 1.4%로 대폭 하향 조정
- (재정수지)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이 FY2016-17 3.5%, FY2017-18 2.9%로 점차 감소하나, 이번 의회 내에 재정흑자를 이룬다는 기존 목표는 달성 불가능
- (국가채무) 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FY2017-18에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이 최고치인 90.2%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 재정긴축 기조를 완화하고, 장기 생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경기부양을 예산 기조로 설정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7-18 총경상수입은 7,380억파운드에 예상되며, 소득세 및 NICs 등의 세 수 감소로 3월 예산안 대비 하향 조정
- (지출) FY2017-18 총관리지출 전망은 7,733억파운드이며, GDP 대비 총관리지출 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차기 의회 내에 가능한 빨리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 재정목표 변경
 - 예산책임헌장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정목표를 규정. 추가적인 지출감축 없이 기존의 공공지출감축 계획을 유지
- (경제성장)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를 신규 조성하고 법인세율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 계획 발표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 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6.2.10.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2015-16) 발표	2016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6.3.16.	2016 예산안(Budget 2016) 발표	
2016.3.26.	FY2014-15 결산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4-15) 발표	
2016.5.20.	FY2016-17 본세출예산안(Main Supply Estimates 2016-17) 발표	
2016.6.24.	국민투표 실시로 영국 EU 탈퇴 확정	
2016 8.4.	영국은행 경기부양 패키지 발표	2016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6.11.23.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 2016) 발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예산책임청(OBR)은 3월 *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서 영국의 2017년 실질GDP 성장률을 2.2%로 전망하였으나, 11월 전망에서는 1.4%로 대폭 하향 조정
 - EU 탈퇴가 결정됨에 따라 기업투자 및 가계지출 감소로 단기 성장률이 둔화되고, 투자가 위축되어 오랫동안 지속된 영국경제의 생산성 저하 문제가 더욱 악화될 전망

〈표 V-1〉 2016년 3월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단위: %)

	실 적		전 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안(3월)	2.9	2.2	2.0	2.2	2.1	2.1	2.1	-
가을보고서(11월)	-	2.2	2.1	1.4	1.7	2.1	2.1	2.0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3.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1.

- (물가) 2016년 0.7%인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2017년 2.3%로 점차 상승하여, 영란은행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전망
 - 2016년 물가상승률은 파운드화 가치절상(appreciation)에 따른 유류 및 수입상품 가격하락으로 0.7%의 낮은 수준으로 전망
 - 파운드화 가치절하(depreciation)와 연료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2017년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실업률) 2015년 5.4%인 실업률은 2016년 5.0%, 2017년 5.2%로 감소하지만, 이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경제활동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책임청(OBR)은 2017년 실업률 전망치를 5.0% (3월 전망)에서 5.2%로 상향조정
 - 고용자수는 2021년 3,230만 명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표 V-2〉 주요 경제전망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전 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GDP	2.2	2.1	1.4	1.7	2.1	2.1	2.0
- 가계소비	2.5	2.8	1.2	1.1	2.1	2.0	2.0
- 정부소비	1.5	1.0	0.6	0.5	0.3	0.6	0.8
- 기업투자	5.1	-2.2	-0.3	4.1	5.3	4.1	3.6
- 정부투자	-2.0	2.3	3.3	2.1	1.9	8.8	3.3
물가상승률(CPI)	0.0	0.7	2.3	2.5	2.1	2.0	2.0
실업률(ILO)	5.4	5.0	5.2	5.5	5.4	5.4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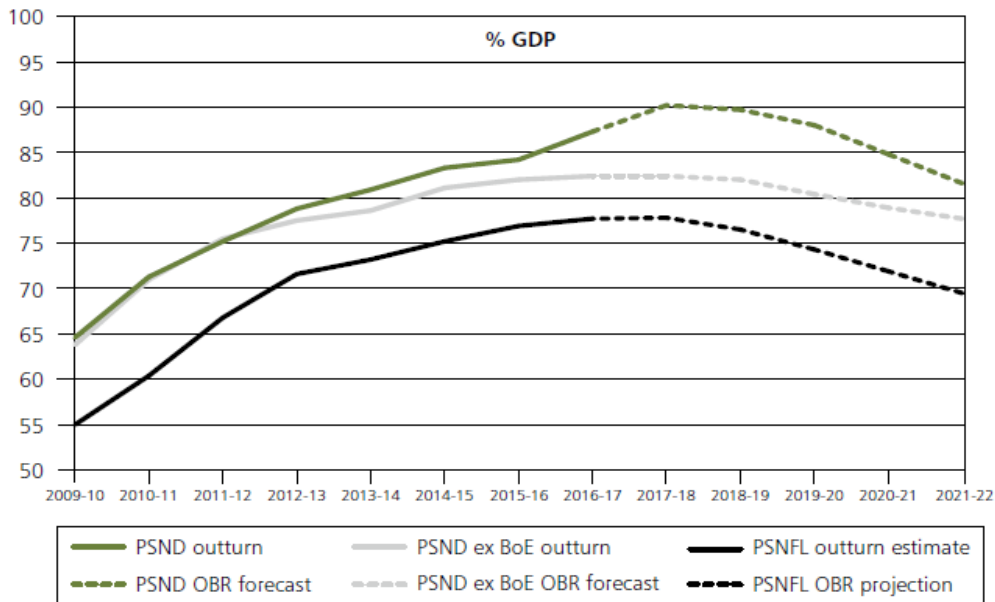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1., Table 1.1.

나. 재정전망

- (재정적자) FY2019-20부터 공공부문 순차입(PSNB; Public Sector Net Borrowing) 흑자 전환을 이룬다는 기존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
 - 세입증가율 감소, 지방정부 지출 증가, 복지수당 확대에 의해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가 Budget 2016 전망치 대비 1,220억 파운드(943억파운드 → 2,163억파운드) 증가

- FY2015-16 GDP 대비 4.0%였던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가 FY2016-17에 3.5%, FY2017-18에 2.9%로 점차 감소하나, 흑자전환 달성은 전망 기간 내에 불가능
 - 재정수지 흑자 전환은 2020년 예정된 차기 의회 구성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달성 하도록 노력
- (국가채무) 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FY2017-18에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PSND; Public Sector Net Debt) 비율은 90.2%를 기록할 전망
-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17-18에 최고치인 90.2%를 기록한 후 감소 세로 전환될 전망
 - FY2018-19부터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새롭게 설정된 보완적 재정목표(supplementary target)⁶⁷⁾를 충족

[그림 V-1] 공공부문 순채무(PSND)



주: Public Sector Net Financial Liabilities(PSNFL)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6*, 2016.11., Chart 1.4.

67) 2016년 11월 가을보고서에서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수정을 제안, FY2020-21까지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추세가 감소로 전환되도록 하는 채무준칙을 보완적 재정목표로 설정

〈표 V-3〉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단위: GDP 대비 %)

	실적	전 망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세입 · 세출							
경상세입(a)	36.1	36.4	36.9	36.9	37.0	37.0	37.1
총관리지출(TME)(b)	40.1	39.9	39.8	39.1	38.0	38.0	37.8
공공부문 경상지출(c)	36.3	35.9	35.6	35.0	34.0	33.5	33.3
공공부문 순투자(d)	1.8	1.9	2.0	1.9	1.9	2.3	2.3
감가상각(e)	2.1	2.1	2.2	2.2	2.2	2.2	2.2
재정목표 및 보완적 목표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3.8	3.3	2.6	1.8	0.8	0.8	0.7
공공부문 순채무	84.2	87.3	90.2	89.7	88.0	84.8	81.6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4.0	3.5	2.9	2.2	1.0	0.9	0.7
경상적자(c+e-a)	2.3	1.6	0.9	0.3	-0.9	-1.4	-1.6
안정성장협약(SGP) 기준							
일반정부 적자 ¹⁾	4.0	3.6	2.9	2.2	1.1	1.0	1.0
일반정부 채무 ¹⁾	87.8	88.7	89.2	88.7	87.2	85.5	84.2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1., Table 4.40.

〈참고〉 EU탈퇴가 영국 재정에 미치는 영향

- OBR은 이민자 감소, 경제 성장률 감소, 순환적 경기둔화(Cyclical slowdown), 인플레이션 상승, 저금리를 재정수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
 - 이민자 수 감소로 관련 복지지출 비용이 줄어드나, 세수 감소 효과가 이를 상쇄하여 FY2020-21에 59억파운드의 차입증가 효과 발생
 - 경기 성장이 둔화되면서 근로소득세 및 국민보험기여금(NICs) 감소, 소비 위축에 따른 VAT 감소, 기업 이윤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입 감소
 - 인플레이션과 연동된 공적연금 지급액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개인 소득공제 상한선 상향 조정 등으로 세수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차입이 증가
- EU 탈퇴 결정의 영향으로 FY2016-17년 35억의 차입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FY2020-21년에는 152억파운드로 증가할 전망
 - EU 탈퇴로 인한 차입증가 규모가 전체 공공부문 수차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Y2016-17 5.1%에서 FY2020-21 73.4%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

〈표 V-4〉 EU탈퇴로 인한 차입증가 효과

(단위: 십억파운드)

요 인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이민자 감소	0.8	1.9	3.0	4.4	5.9
경제 성장률 감소	0.0	1.2	4.2	5.5	7.2
순환적 경기둔화	2.3	7.6	8.6	5.4	2.3
인플레이션 상승	0.9	2.7	2.3	2	2.2
저금리	-0.5	-1.1	-1.3	-1.6	-1.8
기타 요인	0.0	-2.5	-1.5	-1.1	-0.6
차입증가 효과	3.5	9.9	15.4	14.7	15.2
공공부문 순차입 (비중)	68.2 (5.1%)	59.0 (16.6%)	46.5 (32.9%)	21.9 (66.7%)	20.7 (73.4%)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1., Table B.1.

2 예산기조

- 가을보고서에서는 EU 탈퇴 결정에 대응하여 재정긴축 기조를 완화하고, 장기 생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경기부양을 예산기조로 설정
 - 공공재정과 재정정책(Public finances and fiscal policy)
 - － 차기 의회 내에 가능한 빨리 재정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GDP 대비 구조적 재정 수지적자를 2% 이하로 감축,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의회 내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을 잠정목표로 설정
 - － 차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집중적(highly-targeted) 인프라 및 혁신 투자에 한해 허용하며, 기타 신규사업은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
 - 생산성(Productivity)
 - － 국가생산성투자펀드(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를 신규 조성하여 향후 5년간 230억파운드를 인프라 건설 및 혁신분야에 집중 투입
 - － 신규주택 건설 72억파운드, 과학 및 혁신 분야 연구개발 47억파운드, 도로 건설 26억파운드, 통신 10억파운드, 기타 분야 70억파운드
 - 과세(Tax)
 - － 재정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개인의 과세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 － 인적공제 12,500파운드로 인상, 세율 40%이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 상향조정,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인하
 - 공공지출(Public spending)
 - － 재정적자 여전히 큰 규모이므로, 공공지출 통제와 효율화를 위한 노력 지속
 - － Spending Review 2015에서 설정한 지출 계획을 유지하며, FY2021-22까지 부처별 지출 증가율을 인플레이션을 수준으로 통제
- 가을보고서에서 도입한 FY2017-18 정부정책의 총 재정효과는 35억파운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FY2017-18 세입정책에서 3억 7천만파운드 절감, 지출정책에서 39억 3천만파운드 확대
 - 도입된 지출정책 중 국가생산성투자펀드(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이를 제외할 경우, 재정책대 효과는 크게 감소

〈표 V-5〉 2016년 가을보고서 정책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세입정책	+25	+375	+640	+720	+565	+555
지출정책	-310	-3,930	-6,335	-8,680	-7,490	-9,270
총 정책효과	-285	-3,555	-5,695	-7,960	-6,925	-8,715
(기존정책 변경 및 NPIF 제외)	-220	+40	+170	-5	+30	+130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6*, 2016.11., Table 1.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세입정책으로 인하여 FY2017-18 3억 7천만파운드 규모의 세수 증가가 전망되며, 보험료 세율 인상은 주요 세수증가 요인으로, 연료세 동결은 주요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
 - 2017년 6월부터 시행되는 보험료세 2%p 인상(10%→12%)으로 FY2017-18에 약 6억 8천만파운드의 세수증가가 전망
 - 2017년 4월부터 국민보험기여금(NICs) 소득기준구간 통합으로 1억 7천만파운드 세수 증대 효과 발생

	FY2016-17		FY2017-18
Primary Threshold (PT)	주당 155파운드	⇒	주당 157파운드
Secondary Threshold (ST)	주당 156파운드		

- 저비용 기업에 대해 VAT 단일세율제도(FRS; Flat Rate Scheme)를 적용하여 1억 9천만파운드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 기대
 - 2017년 4월부터 지출비용이 연간 천파운드 미만이거나, 매출액의 2% 미만인 기업에 대해 현행 4~14.5%인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대신 16.5%의 단일세율 적용
- 연료세를 리터당 57.95펜스로 동결함으로써 FY2017-18 8억 4천만파운드의 세수 감소효과 발생

〈표 V-6〉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전국민 대상						
연료세 동결	0	-845	-845	-860	-885	-910
조세개혁						
보험료세: 2%p 인상	0	+680	+840	+840	+845	+855
국민보험기여금(NICs) 구간 조정	0	+170	+145	+145	+145	+145
급여공제(Salary Sacrifice) 혜택 축소	-10	+85	+235	+235	+235	+260
금전구입제(Money Purchase) 혜택 축소	0	+70	+70	+70	+75	+75
법인차량세: 초저공해차량 인센티브 개혁	0	0	0	0	+25	+5
조세회피 및 불공정성 방지						
VAT 단일세율 부가	0	+195	+130	+130	+125	+115
위장급여: 자영업자까지 확대, 공제 제한	+10	+25	+180	+310	+40	+65
개조 차량 세금혜택 남용 방지	0	+20	+15	+15	+15	+15
Employee Shareholder Status: 세금우대 중지	*	+10	+15	+15	+25	+50
국세청 행정 및 운영 수단	-115	-20	+50	+170	+215	+180
역외탈세 개선	0	+10	+25	+15	+60	+70
자금서비스업자(MSB) 데이터 수집	0	0	+5	+5	+10	+10
기 타						
기업세금 완화	0	-10	-15	-15	-20	-25
기부금 환급제 개혁	0	*	-10	-15	-15	-20
박물관, 미술관 세금 완화	0	-5	-30	-30	-30	-30
사회투자 세금 완화	0	+10	+5	+5	*	-5
실업: 상담제도 개혁	0	+25	+20	+20	+25	+25
총 세입정책 효과	+25	+375	+640	+720	+565	+555

주: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1., Table 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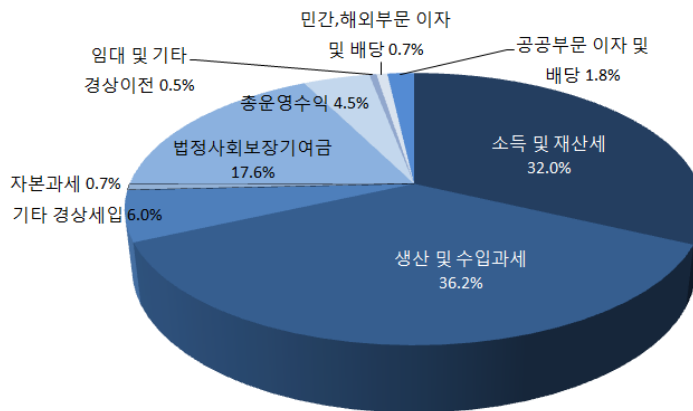
□ OBR 11월 전망에 따르면 FY2017-18 총경상수입은 7,380억파운드로 예상되며, 3월 전망치 대비 전기간의 경상수입 전망치를 하향 조정

- 개인소득세 및 NICs 등의 세수 감소로 FY2017-18 총경상수입을 3월 전망치 대비 78억파운드 하향조정
 - (개인소득세 및 NICs) 낮은 개인소득 증가율, 법인설립자 수 확대에 의한 배당세 및 법인세 증가로 개인소득세와 국민보험기여금 수입을 하향 조정
 - (인지세) 고급부동산에 대한 세수 실적 부진, EU 탈퇴 국민투표 전후의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하여 세수전망을 하향 조정
 - (법인세) 법인 수 증가, 기업투자 부진으로 인한 감가상각(Capital Allowance) 공제 감소로 세수 상향 조정
- 전망기간 동안 세입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FY2021-22에는 8,692억파운드로 예상
 - (설탕세) 2018년 4월부터 설탕세(Soft drinks industry levy)를 적용하여 매년 5천만파운드 규모의 세수 창출

□ FY2017-18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원은 생산 및 수입과세가 36.2%(2,655억파운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소득 및 재산세 32.0%(2,347억파운드),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17.6%(1,291억파운드), 기타 경상세입 6.0%(441억파운드)등의 순으로 구성

[그림 V-2] FY2017-18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



출처: OBR, EFO Fiscal Supplementary Tables, 2016,11., Table 2.39

〈표 V-7〉 경상세입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 망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소득세	168,9	173,7	175,4	183,5	192,6	201,9	213,1
국민보험기여금(NICs)	114,1	124,4	129,1	133	138,8	145,4	152,1
VAT	116,4	120	124,7	129,9	136,1	142	147,6
법인세	44,4	46,1	50,6	51,6	53,3	54,2	54,3
석유세	-0,6	-0,8	-0,8	-0,7	-0,6	-0,6	-0,5
연료세	27,6	27,9	27,4	27,9	28,5	29,2	30
비거주재산세	28,8	29	29,3	30,3	31,2	31,8	32,3
지방세(Council tax)	29	30,4	31,8	33,2	34,6	35,6	36,7
VAT 환급(refunds)	14,1	13,9	14,1	14,2	14,1	14,6	15
자본취득세	7,1	7,3	7,4	8,3	10,3	10	11
상속세	4,7	4,7	4,9	4,9	5,1	5,4	5,7
인지세	10,9	11,3	12,2	13,2	14,3	15,6	16,8
인지세(on shares)	3,3	3,5	3,3	3,4	3,6	3,7	3,9
담배세	9,1	9,2	9,2	9,4	9,4	9,4	9,3
산업용주정(spirits)세	3,1	3,4	3,5	3,6	3,8	3,9	4,1
와인세	4	4,2	4,3	4,6	4,9	5,2	5,4
맥주 및 과일주(cider)세	3,6	3,6	3,8	4	4,1	4,1	4,2
항공여객세	3	3,2	3,4	3,5	3,7	3,8	4
보험료세	3,7	4,9	5,8	6	6	6	6,1
기후변화세	1,8	1,9	1,9	2	2,2	2,2	2,2
기타 국세(HMRC taxes)	7,1	7,3	7,4	7,5	7,6	7,7	7,7
자동차세	5,7	5,8	6	6,1	6,2	6,5	6,7
은행세(bank levy)	3,4	2,9	2,7	2,6	2,5	2,4	1,3
은행추가세(Bank surcharge)	0	1	1,3	1,2	1,2	1,2	1,2
건설세(Apprenticeship Levy)	0	0	2,6	2,7	2,8	2,9	3
면허료 수입	3,1	3,1	3,2	3,3	3,4	3,4	3,5
환경부담금	4,6	7	9,7	11,4	11,7	12,2	13
EU ETS 경매세	0,5	0,5	0,4	0,4	0,4	0,3	0,3
Scottish taxes	0,6	0,6	0,7	0,7	0,8	0,8	0,9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0	0,1	0,1	0,1	0,1	0,1	0
설탕세(Soft drinks industry levy)	0	0	0	0,5	0,5	0,5	0,5
기타 조세	6,7	7,7	7,7	7,8	8,1	8,4	8,7
National Accounts taxes	628,6	657,7	683,2	710,3	741,1	770	800,4
EU 부담금 공제	-3,1	-3,3	-3,4	-3,4	-3,5	-3,5	-3,5
이자 및 배당	6,1	5,5	5,9	7,1	8,6	10	11,2
총운영수지	45,4	48,6	50,4	52	53,5	56,2	59,1
기타수입	2,7	2,1	2	2	2	2,1	1,9
총 경상수입	679,8	710,6	738	768	801,8	834,8	869,2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2,0	-5,8	-7,8	-11,6	-19,1	-17,3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1., Table 4.6 및 4.7.

나. 세출

- 가을보고서의 지출정책으로 FY2017-18에 39억 3,000만파운드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개인독립지출(Personal Independence Payment)은 3월 예산안의 연간관리지출 감축(AME saving)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6억파운드의 재정지출 확대
 -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계획변경으로 FY2017-18 2억 9,500만파운드의 재정지출 확대
 - 기존의 급여 제도를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로 전환 완료하는 시점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
 - FY2017-18 국가생산성투자펀드(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 조성을 통한 인프라 투자로 23억 9,000만파운드의 재정지출 확대효과 발생
- 11월 가을보고서의 FY2017-18 총관리지출(TME) 전망은 7,733억 파운드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176억파운드(2.3%) 증가
 - 3월 예산안 전망 대비 124억파운드 증가
 -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예산항목 조정으로 인한 영향(13억파운드)
 - 경제전망 가정 변화로 인한 영향(79억파운드) : 인플레이션 가정 변화(32억파운드), 채무 이자율 가정 변화(△4억파운드) 등
 -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32억파운드) : 연간관리지출 정책변화(23억파운드) 등
 - FY2017-18의 GDP 대비 총관리지출 비중은 전년보다 약 0.1%p 감소한 39.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전망 기간 동안 총관리지출(TME)의 규모는 증가하나, GDP 대비 비중은 부처별 지출한도(DEL) 및 연간관리지출(AME) 비중의 감소추세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 FY2015-16 GDP 대비 40.1%였던 총관리지출 비율이 FY2019-20에 38.0%까지 변화하면서 2.1%p의 급격한 하락세 보인 후, FY2021-22까지 추가로 0.2%p 하락
 - FY2015-16 GDP 대비 16.4%였던 자원 DEL 비율이 FY2021-22에 14.2%p 감소
 - 연간관리지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복지지출이 주택수당, 장애연금, 기초연금 감소로 FY2015-16 GDP 대비 11.5%에서 FY2021-22 10.3%로 하락

〈표 V-8〉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기존정책 변경						
개인독립지출(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15	-605	-1,250	-1,400	-1,390	-1,410
Universal Credit: 재설계	-20	-295	-445	-185	-110	-425
장애급여: 자격진단 방법 변경	-20	-20	-20	-20	-15	-15
Social Sector Rent downrating 조정	0	-5	-10	-15	-15	-15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인상(Pay to Stay) 미실시	0	-280	-15	-100	-100	-105
주택수당 조정	0	0	-305	-265	+160	+125
공공지출						
효율성검토: 채투자	0	0	0	-1,000	-	-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						
주택	-10	-1,465	-2,060	-2,490	-2,145	-
교통	0	-475	-790	-705	-1,050	-
통신	0	-25	-150	-275	-290	-
연구개발	0	-425	-820	-1,500	-2,000	-
장기투자	0	0	0	0	0	-7,000
전국민 대상						
Universal Credit: 테이퍼율 인하	0	-35	-175	-400	-570	-700
NS&I 투자채권	0	-45	-85	-90	-45	0
공공임대 주택구매권 확대	0	-25	-90	-110	-25	0
생활임금 강화	0	-5	-5	-5	-	-
기타						
ODA: GNI 대비 0.7% 유지	0	+80	+210	0	-	-
Moj: 교도시설 안전성 강화	0	-125	-245	-185	-	-
Grammar Schools 확대	0	-60	-60	-60	-60	-
세금공제: correcting awards	-95	-80	-65	-55	-40	-25
생명의학 촉진 및 기술 이전	0	-40	-60	-60	-60	-
DCMS 지출	-10	-10	-20	-15	-10	-
Midlands Rail Hub	0	-5	-5	0	-	-
Scotland City Deals and Fiscal Framework	0	-25	-60	-75	-50	-25
Mayfield Review of Business Productivity	0	-5	-5	-5	-	-
총 지출정책 효과	-310	-3,930	-6,335	-8,680	-7,490	-9,270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1., Table A.2.

〈표 V-9〉 총관리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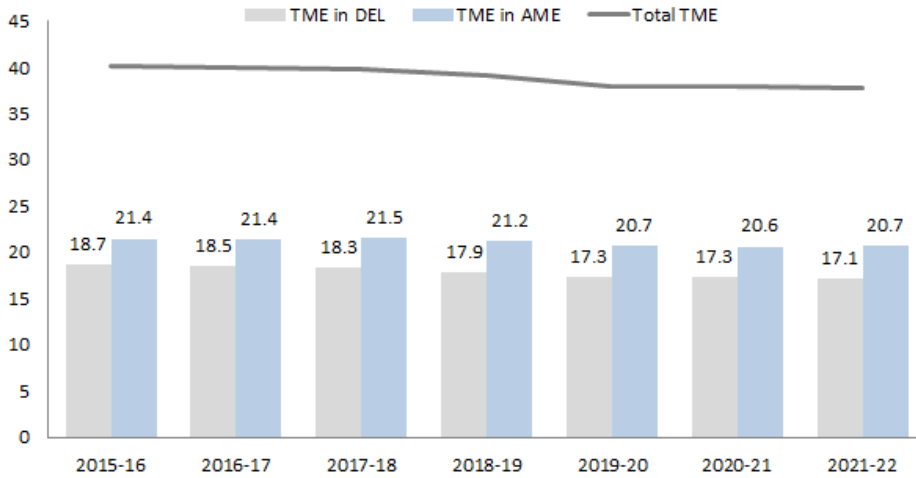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 망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경상지출							
자원 DEL	309.0	315.4	316.9	319.6	319.8	326.0	332.7
자원 AME	373.7	384.5	396.1	409.8	416.3	428.5	447.5
사회보장급여	216.1	218.4	221.2	224.6	227.5	233.2	241.8
세액공제	2.8	3.2	3.3	3.4	3.5	3.6	3.7
순공공서비스연금	11.4	11.1	12.1	13.6	13.4	14.6	16.1
국가복권	1.3	1.4	1.4	1.4	1.4	1.5	1.5
BBC 내국 서비스	3.6	3.9	3.8	3.9	3.7	3.5	3.7
철도네트워크	0.8	0.9	0.6	0.0	-0.2	-0.2	-0.3
기타부처지출	1.4	0.8	0.7	0.7	0.7	0.6	0.7
EU분담금	10.5	10.7	10.2	12.5	-	-	-
EU분담금 대체 국내 지출	-	-	-	-	13.0	13.4	13.9
지방재정지출	41.7	42.2	44.3	45.8	47.4	48.7	50.2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APF 채무이자 삭감	33.4	36.3	38.0	39.2	39.3	39.6	42.7
공기업 채무이자	2.8	3.9	4.0	4.1	4.2	4.2	4.3
감가상각	29.4	31.0	32.7	34.3	36.0	37.9	40.0
경상 부가가치세 환급	11.9	11.8	12.0	12.2	12.2	12.5	12.7
환경부담금	4.2	6.9	9.9	11.8	12.1	13.3	14.2
지방정부 귀속연금	1.9	2.0	2.1	2.2	2.3	2.4	2.5
기타 회계 조정	0.2	-0.1	0.0	0.0	-0.1	-0.1	-0.2
공공부문 경상지출	682.7	699.8	713.0	729.4	736.2	754.5	780.1
자본지출							
자본 DEL	43.0	46.1	49.9	52.7	54.4	64.8	68.2
자본 AME	30.0	32.9	34.1	32.4	33.2	36.2	38.1
세무소송	0.0	0.2	1.5	1.5	1.5	1.5	1.5
철도네트워크 자본지출	6.4	6.6	6.1	5.1	6.4	6.5	6.7
기타 자본지출	0.5	1.0	1.4	1.6	1.9	2.4	2.7
지방재정 지출	7.0	7.7	7.3	6.2	6.8	6.9	7.2
공기업 지출	17.1	17.1	17.5	17.5	16.2	18.1	19.0
회계 조정	-0.9	0.4	0.3	0.5	0.5	0.8	0.9
공공부문 총투자	75.7	73.4	77.4	76.7	75.7	79	90.2
감가상각 공제	-38.5	-39.8	-41.6	-43.4	-45	-46.8	-48.9
공공부문 순투자	37.2	33.6	35.8	33.4	30.6	32.2	41.3
총관리지출	749	755.7	773.3	787.5	801.2	821	857.2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1.9	6.8	12.4	13.5	13.3	14.4	-

주: 총관리지출(TME)은 공공부문 경상지출(자원 AME+자원DEL)+공공부문 총투자(자본 AME+자본 DEL)로 구성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1., Table 4.16 및 4.17

[그림 V-3] 총관리지출(TME)의 규모와 구성 변화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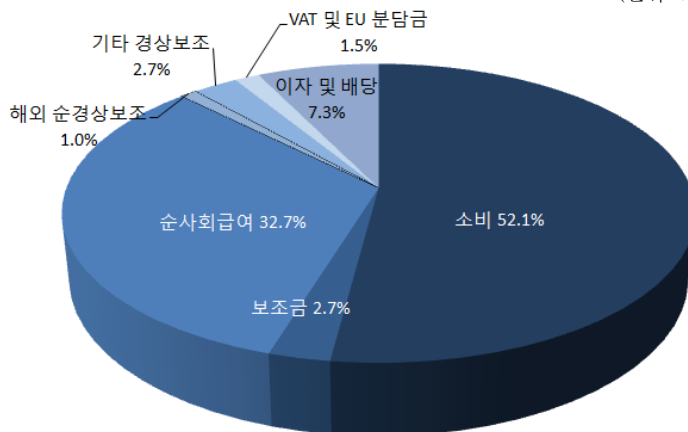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1, Table 4.15.

- FY2017-18의 일반정부 기준의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소비가 52.1%(3,765억파운드), 순사회급여가 32.7%(2,367억파운드)의 높은 비중을 차지
 - 그 밖에 이자 및 배당지출이 7.3%(529억파운드), 기타 경상보조금 2.7%(195억파운드) 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그림 V-4] FY2017-18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지출규모

(단위: %)



자료: OBR, *Fiscal Supplementary Tables*, 2016,11., Table 2.39.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인프라 투자 5개년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2016 to 2021)을 중심으로 중기 투자를 시행
 - 인프라 분야에 향후 5년간 1,000억파운드 이상의 자본 투자를 시행하며,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액을 GDP 대비 4% 수준으로 유지
 - 독립적 자문기구인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NIC)이 인프라 우선순위 설정에 관여하고 정부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감독
 - 인프라 확충에 있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2021년까지 400억파운드 규모의 보증계획(UK Guarantees Scheme)을 시행
- 11월 가을보고서에서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 발표
 - FY2017-18년부터 FY2021-22년까지 총 230억파운드의 국가생산성투자펀드를 인프라 건설에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
 - 신규주택 건설 72억파운드, 과학 및 혁신 분야 연구개발 47억파운드, 도로 건설 26억파운드, 통신 10억파운드, 기타 분야 70억파운드

〈표 V-10〉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투자계획

(단위: 백만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주택					
Housing Accelerated construction	285	635	665	380	*
Affordable housing	1,120	1,125	880	340	*
Housing Infrastructure Fund	60	300	945	1,425	*
교통					
Transport Roads and local transport	365	500	430	650	*
Next generation vehicles	75	100	110	115	*
Digital railways enhancements	30	55	165	285	*
Cambridge-Milton Keynes-Oxford corridor	5	135	0	0	*
통신	25	150	275	290	*
연구개발	425	820	1,500	2,000	*
총 계획	2,390	3,820	4,970	5,486	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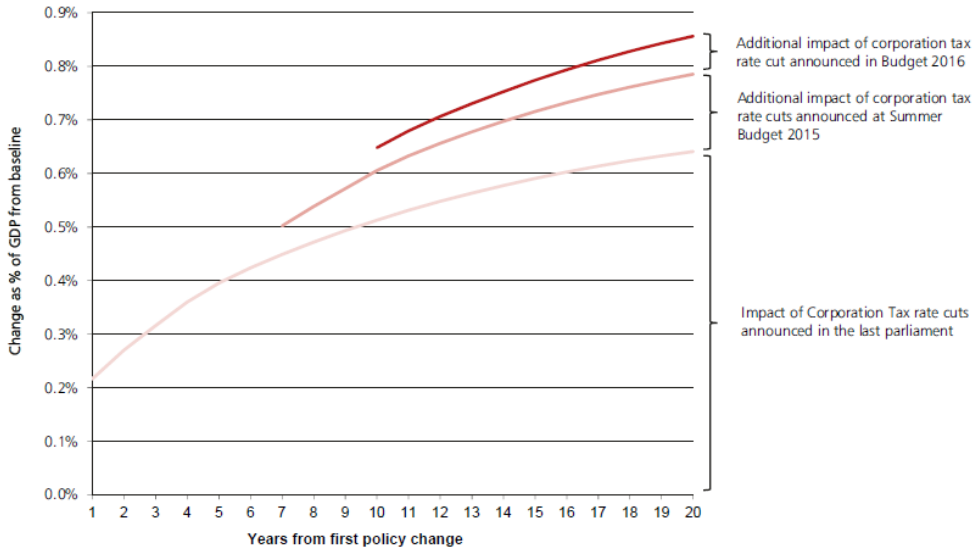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6*, 2016.11., Table 3.1.

□ 3월 예산안에서 법인세율 및 자본이득세율을 인하하고 비거주재산세 부담을 경감

- 기존 법인세율 조정 계획⁶⁸⁾을 수정하여, 2010년 28%에서 현행 20%까지 인하된 최고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인하
 - 2010년 법인세율 인하가 시작된 이후 FY2020-21까지 감축될 법인세액 규모는 연간 150억파운드로 추산
 - 영국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투자촉진 및 경기부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간주하며, G7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계획

68) 2015.7. 여름 예산안에서는 2017년 19%, 2020년 18%의 법인세 인하계획 제시

[그림 V-5] 영국 법인세율 인하 효과



출처: HM Treasury, *Business tax road map*, 2015.3., Chart 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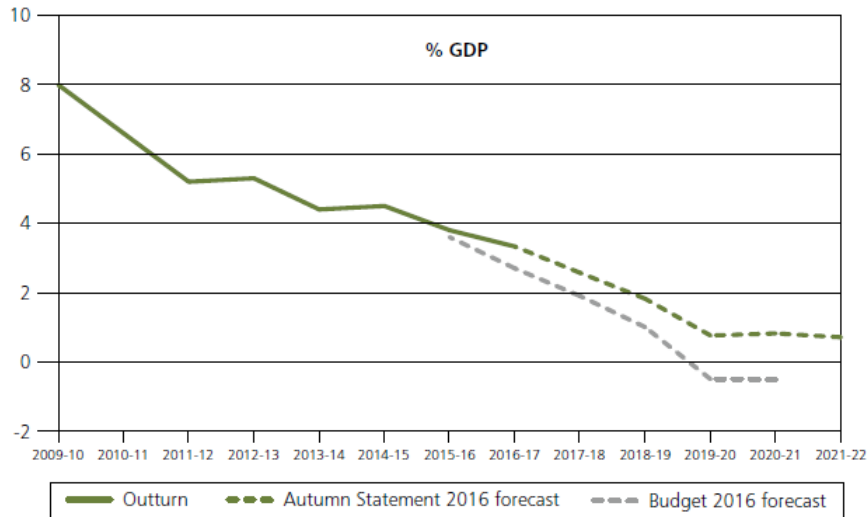
- 비거주재산세 인하로 향후 5년간 67억파운드의 세금 부담 경감 효과 발생
 - 소규모 기업에 대대한 비거주재산세율경감(SBRR; small business rate relief) 혜택을 50%에서 100%로 확대
- 자본이득세율 고세율(higher rate)은 28%에서 20%로, 본세율(basic rate)은 18%에서 10%로 인하

나. 재정건전화

- 경기둔화 가능성, EU 탈퇴 협상 개시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이번 의회 내에 재정흑자를 달성한다는 기존 목표는 포기
 - 차기 의회 내에 가능한 빨리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변경
 - “return the public finances to balance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in the next Parliament”(Autumn statement 2016)

[그림 V-6] 공공부문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전망

(단위: %)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6*, 2016.11., Chart 1.3

- 11월 가을보고서에서는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정목표(Mandate for fiscal policy)를 규정
 - 재정목표(Fiscal Mandate)
 - FY2020-21까지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적자를 2% 이하로 감축
 - 보완적 재정목표(Supplementary Target)
 - FY2020-21에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을 하락세로 전환
 - FY2021-22 복지비용이 가을보고서에서 설정한 복지지출 상한선(welfare cap and margin)을 준수

- 공공지출 통제와 집행 효율성 개선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 노력 지속
 - Spending Review 2015에서 설정한 215억파운드의 공공지출 감축계획과 Budget 2016에서 설정한 35억파운드의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유지
 -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출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지출 우선순위: 국방, 해외원조, 잉글랜드 지역의 국가보건서비스 및 교육지원, 경

찰행정, 과학분야

- 2017년부터 ‘효율성 검토 보고서’(Efficiency Review)를 통해 재무부의 지출통제 능력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
- FY2021-22에 적용될 새로운 복지지출 상한(Welfare Cap)을 제시하고 복지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 FY2021-22에 적용될 복지지출 상한은 1,260억파운드이며, 불가피한 복지지출 변동성에 대응한 margin(3.0%)을 적용할 경우 실질 지출한도는 1,297억파운드

〈표 V-11〉 신규 복지지출 상한

(단위 : 십억파운드)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Cap	-	-	-	-		126.0
Interim pathway	119.8	119.6	120.1	120.5	123.2	-
Margin (%)	0.5	1.0	1.5	2.0	2.5	3.0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6*, 2016.11., Table 1.6

VI. 호 주

□ FY2016-17 : 2016년 7월 ~ 2017년 6월

□ 출처

- Budget Overview, The Treasury, 2016.5.3.
- Budget Paper No.1 ~ No.2 2016-17, The Treasury, 2016.5.3.
-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The Treasury, 2016.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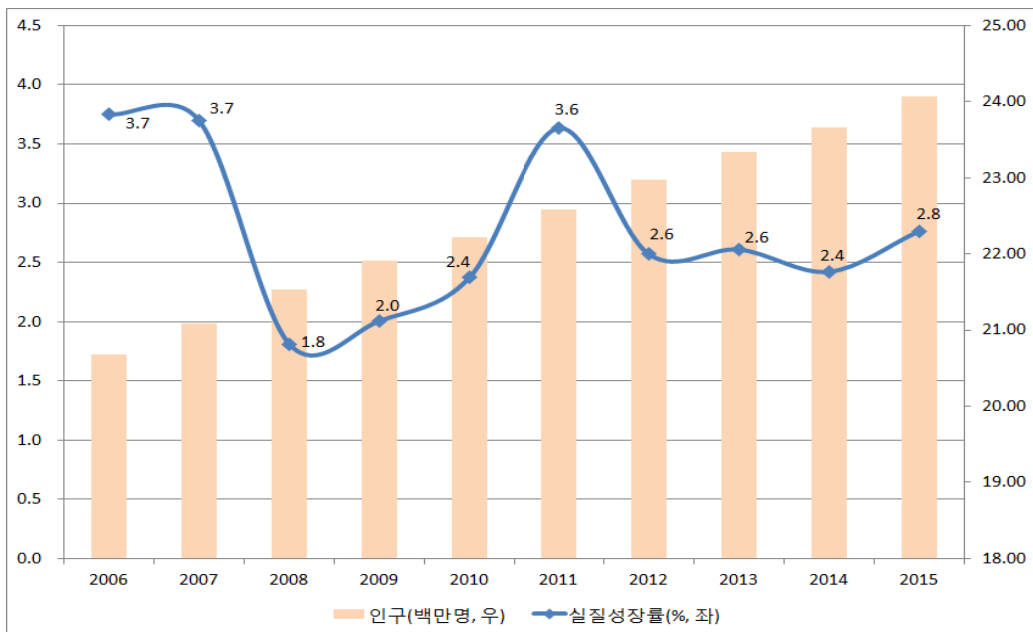
□ 환율 : 1호주달러 = 약 863.26원(2016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4년 경상GDP 1조 1,315억달러(우리나라 0.65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15년 기준 40.0%(우리나라 84.8%)

□ 인구 : 2,407만명(2015년 추정치)

□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호주 경제는 광산부 투자에서 생산 국면으로 변환기에 있으며, 광산 투자 하락으로 인한 하방 요인이 사라지면서 경제 성장이 예상됨
- (재정전망) FY2016-17 예산수지 적지는 365억호주달러(GDP 대비 2.1%)에서 FY2019-20에 100억호주달러(GDP 대비 0.5%)로 적자폭이 감소할 전망

□ 예산기조: 호주는 과거의 광산 투자 붐에서 더 강하고 다양화된 새로운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1)일자리 창출과 성장 촉진, 2)조세시스템 개선, 3)균형예산과 장기 채무 감축에 초점

□ 예산안 내용

- (수입) FY2016-17 재정수입은 4,111억호주달러(GDP 대비 23.5%)이며, FY2019-20에 5,027억호주달러(GDP 대비 25.5%)로 개선될 전망
- (지출) 정부지출은 예산균형을 위한 지출통제로 전망기간동안 25.6%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예산 흑자 달성을 위한 중기재정전략(Medium-term fiscal strategy)을 유지
- FY2020-21에 균형예산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건전화 속도는 연평균 GDP 대비 0.5% 규모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 (개혁관련) 혁신개혁안 NISA(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6.3.15.	2015 규제철폐 연간 보고서 발표	2016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6.3.15.	호주정부,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혜택 도입 발표	
2016.3.21.	호주 재무부, 호주의 미래 금융기술 ‘핀테크’에 관한 성명 발표	
2016.3.23.	호주 정부, 재생 에너지 혁신을 위한 청정에너지혁신기금 조성	
2016.5.3.	FY2016-17 예산안 발표	
2016.5.20.	호주 재무부, 2016 선거전전망보고서(PEFO) 발간	
2016.8.31	‘예산 절감 옴니버스 법안(Omnibus Bill)’ 의회 제출	2016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6.9.7	연금개혁 발표	
2016.9.30	FY2015-16 결산보고서 발표	
2016.12.19	FY2016-17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 발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호주 경제는 광산부 투자에서 생산 국면으로 변환기에 있으며, 광산 투자 하락으로 인한 하방 요인이 사라지면서 경제 성장이 예상됨
 - (경제)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는 FY2016-17 실질GDP 성장률을 5월에 발표된 선거전전망보고서(PEFO)에 비해 0.5%p 하향 조정된 2.0%로 전망하였으나, FY2017-18에 2.75%로 성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 수출과 가계소비가 경제 성장을 지지하고, 단기적으로 주거부문 투자가 높아질 것임
 - － 비광산 부문 투자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
 - － 명목GDP 성장률은 FY2016-17에 5.75%로 전망되며, 이는 최근의 상품가격 상승 등이 반영됨
 - (고용) 호주 고용률은 경제 성장세의 지속 및 임금 상승률 침체로 FY2016-17에 1.25%, FY2017-18 이후 1.5% 수준

〈표 VI-1〉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¹⁾ 전망

(단위: %)

	예측(Forecasts)						전망(Projections)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PEFO ²⁾	MYEFO ³⁾	PEFO	MYEFO	PEFO	MYEFO	PEFO	MYEFO	PEFO	MYEFO
실질GDP 성장률	2.5	2.7	2.5	2.0	3.0	2.75	3.0	3.0	3.0	3.0
고용률	2.0	1.9	1.75	1.25	1.75	1.5	1.25	1.5	1.5	1.5
실업률	5.75	5.7	5.5	5.5	5.5	5.5	5.5	5.25	5.5	5.25
소비자물가지수	1.25	1.0	2.0	1.75	2.25	2.0	2.5	2.5	2.5	2.5
명목GDP 성장률	2.5	2.3	4.25	5.75	5.0	3.75	5.0	4.25	5.0	4.5

주: 1) 실질GDP성장률과 명목GDP성장률은 연평균증가율, 고용률과 소비자물가지수는 2사분기(June Quarter) 기준 연증가율, 실업률은 2사분기 기준

2) PEFO는 선거전경제재정보고서(5월 발표), MYEFO는 반기경제재정보고서(12월 발표)의 약어

3) MYEFO의 2015-2016는 실적치

출처: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The Treasury, 2016.5.20.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The Treasury, 2016.12.19.

- 실업률은 2015년 7월 6.3%로 정점을 찍은 후 FY2016-17에 5.5%로 점차 하락, 전망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물가) 소비자물가는 예측기간동안 최근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고, FY2016-17 소비자물가지수를 1.75%로 예측
- 무역 조건 및 명목 GDP 전망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변동성이 있을 것

나. 재정전망

-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MYEFO)상 FY2016-17 예산수지 적자는 5월에 발표된 선거전 전망보고서(PEFO) 대비 6억호주달러 증가한 365억호주달러(GDP 대비 2.1%)로 전망되며, FY2019-20까지 100억호주달러(GDP 대비 0.5%)로 적자폭이 감소할 전망

〈표 V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6-17		2017-18		2018-19		2019-20	
	PEFO	MYEFO	PEFO	MYEFO	PEFO	MYEFO	PEFO	MYEFO
재정수입(Revenue) ¹⁾	416.9	411.1	449.5	441.2	484.4	473.1	515.1	502.7
GDP 대비 비율	24.2	23.5	24.9	24.3	25.5	25.0	25.9	25.5
재정지출(Expenses) ¹⁾	450.6	448.6	464.8	460.4	489.3	483.6	511.6	504.0
GDP 대비 비율	26.2	25.6	25.7	25.4	25.8	25.6	25.7	25.6
재정수지(Fiscal Balance) ²⁾	-37.1	-41.5	-18.7	-22.3	-9.8	-15.3	-2.1	-6.4
GDP 대비 비율	-2.2	-2.4	-1.0	-1.2	-0.5	-0.8	-0.1	-0.3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³⁾	-37.1	-36.5	-26.1	-28.7	-15.4	-19.7	-5.9	-10.0
GDP 대비 비율	-2.2	-2.1	-1.4	-1.6	-0.8	-1.0	-0.3	-0.5
순채무(Net debt)	326.1	317.2	347.1	343.0	356.7	359.0	355.4	363.8
GDP 대비 비율	18.9	18.1	19.2	18.9	18.8	19.0	17.8	18.4

주: 1) 발생주의 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 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4) PEFO는 선거전경제재정보고서(5월 발표), MYEFO는 반기경제재정보고서(12월 발표)의 약어

출처: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The Treasury, 2016.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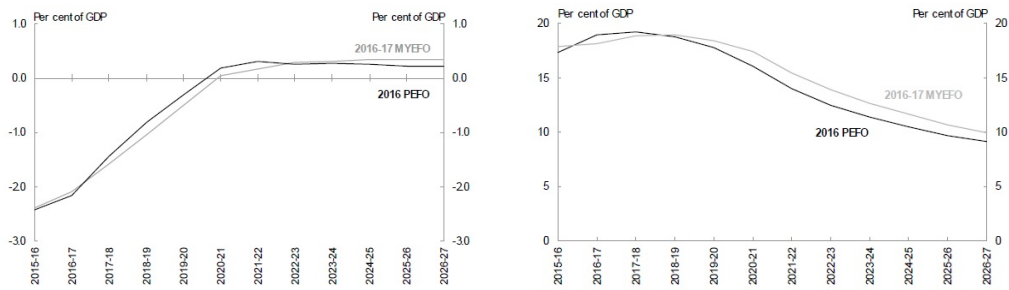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The Treasury, 2016.12.19.

- (재정수입) FY2016-17 재정수입은 4,111억호주달러(GDP 대비 23.5%)이며, FY2019-20에 5,027억호주달러(GDP 대비 25.5%)로 개선될 전망
 - (재정지출) 정부지출은 예산균형을 위한 지출통제로 전망기간동안 25.6%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재정수지) FY2016-17 재정수지 적자는 전망 기간 동안 415억호주달러(GDP 대비 2.4%)에서 64억호주달러(GDP 대비 0.3%)로 감소할 전망
 - (예산수지) FY2016-17 예산수지 적자는 365억호주달러(GDP 대비 2.1%)에서 FY2019-20에 100억호주달러(GDP 대비 0.5%)로 적자폭이 감소할 전망
 - (순채무) 순채무는 FY2018-19에 GDP 대비 19.0%로 정점에 다다른 후 FY2019-20에 18.4%로 감소
- (중기재정전망) FY2020-21에 균형예산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건전화 속도는 연평균 GDP 대비 0.5% 규모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 (중기재정전략)
 - － ① 생산성 및 노동시장참여를 높이는 질적 투자로의 정부 지출 재분배
 - － ② 고용 및 경제 성장을 위해 지출제한을 통하여 민간 투자 자원을 확보하는 강력한 재정 규율(Fiscal discipline)을 유지
 -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payments to GDP ratio) 감축
 - 순채무 감축 및 안정화
 - － ③ 소득 및 경제성장 제고 정책을 통해 세입 증가율 지지
 - － ④ 순금융가치(Net Financial Worth) 개선을 통한 재정 수지 강화
 - (재정회복전략⁶⁹⁾) 신규 재정지출은 다른 예산분야의 지출 삭감으로 상쇄, 경제변화로 인한 재정수입 양(+)⁶⁹⁾의 변화분은 예산결산의 개선(improvement to the budget bottom line)으로 반영 등
 - (주요내용)
 - － (예산수지) FY2020-21에 예산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FY2026-27에는 GDP 대비 0.2%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69) Budget Repair Strategy: GDP대비 최소 1%의 재정흑자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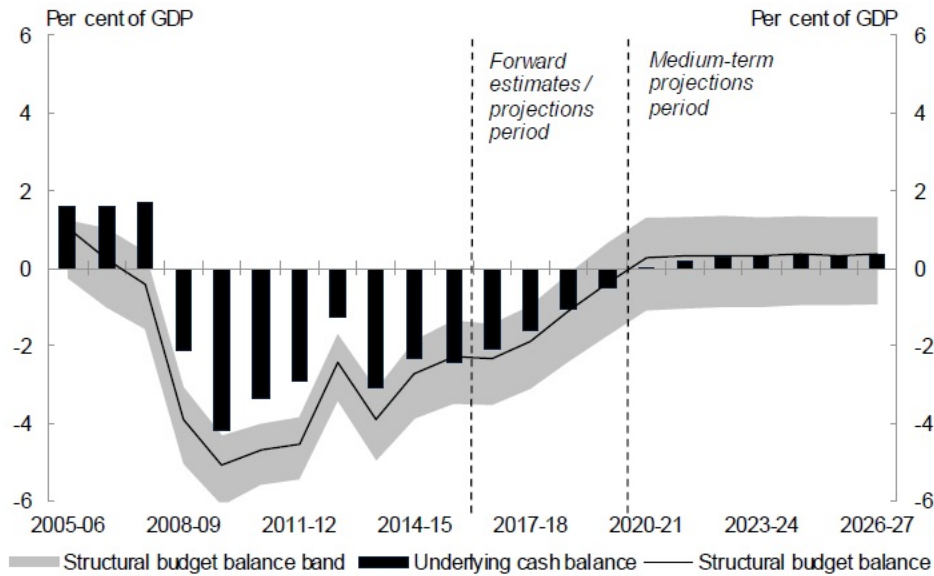
- (순채무) 순채무는 중기적으로는 FY2026-27에 GDP 대비 9.9%까지 감소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FY2016-17에 GDP 대비 2.3% 적자에서 FY2020-21에 소폭의 흑자로 전환될 전망

[그림 VI-1]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출처: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2016.12.19.

[그림 VI-2]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 전망



출처: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2016.12.19.

2 예산기조

- FY2016-17 예산안은 과거의 광산 투자 붐에서 더 강하고 다양화된 새로운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1)일자리 창출과 성장 촉진, 2)조세시스템 개선, 3)균형예산과 장기 채무 감축에 초점
 - (기업과세)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
 - － 향후 10년 내 법인세율을 30%→25%까지 인하 계획
 - － 중소기업 기준을 연매출 1천만호주달러로 상향하고, 1천만호주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27.5% 세율 부과(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 * 연매출 200만호주달러 이하(2015년 예산안)→ 1천만호주달러 이하(2016년 예산안)
 - － 비법인(unincorporated)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간 5백만호주달러까지 8% 감세 혜택
 - (퇴직연금 개혁) 고소득층 등 부유층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중간소득층 세금우대 상한선 상향 조정
 - － 퇴직연금 총액상한선을 160만호주달러로 도입하고, 초과 시 15% 과세
 - － 세금공제를 받고 퇴직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Concessional Contribution 납입상한선 2만 5천호주달러로 감소
 - － 25만호주달러 이상 고소득자 대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에 30% 세금 확대 부과 Lifetime Non-Concessional Contribution⁷⁰⁾ 총액상한선을 50만호주달러로 도입
 - (아이디어 붐 투자) 11억호주달러 규모의 혁신개혁안 NISA(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 등⁷¹⁾
 - － 신생 및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투자 활성화
 - － 경쟁 및 소비자에 관한 법률(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46절 수정으로 중소기업 불공정 계약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
 - － 신성장동력인 핀테크 산업 지원으로 일자리 및 경제 성장 강화

70) 세금공제를 받지 않고 개인자금을 퇴직연금에 납부

71) 자세한 세부 내용은 격주 『재정동향』 4월 2호에 실림

〈표 VI-3〉 주요 정책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Initiatives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Total
	\$m	\$m	\$m	\$m	\$m	\$m
Public Hospitals – new funding arrangements	0.0	0.0	-477.2	-936.8	-1,445.8	-2,859.8
School funding – additional funding from 2018	-	-	-102.2	-306.1	-519.3	-927.6
Commonwealth Assistance for Western Australia	-490.0	0.0	0.0	0.0	0.0	-490.0
Operation Okra – extension	-	-351.5	-22.1	-13.9	-	-387.6
Youth Employment Package – Youth Jobs PaTH (Prepare-Trial-Hire)	-0.1	-12.1	-70.1	-83.8	-83.4	-249.5
Operation Accordion – extension	-	-186.2	-7.0	-3.2	-	-196.4
My Aged Care – consumer access	-	-29.6	-30.9	-35.5	-40.5	-136.5
Cyber Security – implementation of Australia's Cyber Security Strategy	0.0	-19.2	-28.9	-33.3	-37.2	-118.6
School funding– additional funding for students with a disability	-	-86.7	-31.6	-	-	-118.3
Western Sydney Airport – further preparatory works	-	-65.6	-49.5	-	-	-115.1
National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y – exploring for the future	-	-24.5	-20.4	-30.8	-24.9	-100.5
Aged Care Provider Funding – improving the targeting of the viability supplement for regional aged care facilities	-	-12.6	-26.1	-27.4	-29.3	-95.4
Investment Approach to Welfare – Try, Test and Learn Fund	-	-31.7	-31.4	-24.8	-8.2	-96.1
Youth Employment Package – encouraging entrepreneurship and self-employment	-	-16.2	-24.2	-24.0	-24.2	-88.6
Clean and Renewable Energy Innovation –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and the 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	1.0	-47.5	-43.3	-13.0	30.0	-72.9

Revenue items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Total
	\$m	\$m	\$m	\$m	\$m	\$m
Tobacco excise – measures to improve health outcomes and combat illicit tobacco	-	-2.9	690.1	1550.0	2470.0	4,707.2
Ten Year Enterprise Tax Plan – targeted personal income tax relief	-	-800.0	-950.0	-1050.0	-1150.0	-3,950.0
Tax Integrity Package – establishing the Tax Avoidance Taskforce	-	28.6	564.4	1071.2	1395.8	3,060.0
Ten Year Enterprise Tax Plan – reducing the company tax rate to 25 per cent	-	-400.0	-500.0	-800.0	-950.0	-2,650.0
Superannuation Reform Package – reforming the taxation of concessional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	-2.8	499.1	797.8	1148.9	2,443.0
Ten Year Enterprise Tax Plan – increase the small business entity turnover threshold	-	-280.0	-700.0	-550.0	-650.0	-2,180.0
Superannuation Reform Package – introduce a \$1.6 million superannuation transfer balance cap	-	-4.4	550.0	700.0	750.0	1,995.6
Superannuation Reform Package – introducing a Low Income Superannuation Tax Offset (LISTO)	-	-	-102.8	-701.1	-801.1	-1,605.0
Superannuation Reform Package – tax deductions for personal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	-	350.0	-600.0	-750.0	-1,000.0

자료: Budget 2016-17 Overview, The Treasury, 2016.5.

- (인프라 투자) FY2013-14부터 FY2019-2020까지 500억호주달러 규모를 도로, 철도, 공항, 댐 등 인프라 투자 계획
- (방위 산업) 향후 20년간 54척의 해군 군함 조달에 총 890억호주달러를 투자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20년 이후 조선업에 2천 5백명 이상의 고용이 유지될 전망
- (청년고용 패키지) 8.4억호주달러 규모의 청년고용패키지를 통해 향후 4년간 12만명의 고용 유지
 - STEP 1. 기술 트레이닝: 6주간 집중 훈련
 - STEP 2. 인턴십: 4-12주간의 인턴십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2주당 2백호주달러의 추가 소득 지원, 고용 기업에는 2주당 1천호주달러를 지원
 - STEP 3. 청년고용보조금(Youth Bonus Wage Subsidy): 고용주에게 최대 1만 호주달러를 지급하고, 임금 보조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유연화

3 예산안 내용⁷²⁾

가. 재정수입

- FY2016-17 재정수입은 5월에 발표된 선거전전망보고서(PEFO) 대비 57억호주달러(1.4%) 감소한 4,111억호주달러(GDP 대비 23.5%)로 예상되며, FY2019-20에 5,027억호주달러(GDP 대비 25.5%)로 증가 전망
- 조세수입은 3,863억호주달러(GDP 대비 22.1%)로 선거전전망보고서(PEFO) 대비 49억호주달러(1.3%) 하향 조정됨
 -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광산분야 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예상보다 저조한 임금성장률과 비광산분야 약세가 이를 상쇄하여 세수감소
- 세외수입은 248억호주달러(GDP 대비 1.4%)로 예상되며, FY2019-20까지 355억호주달러(GDP 대비 1.8%)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72) '16년 12월 발표된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 기준으로 업데이트함

〈표 VI-4〉 재정수입 전망

(단위: 백만호주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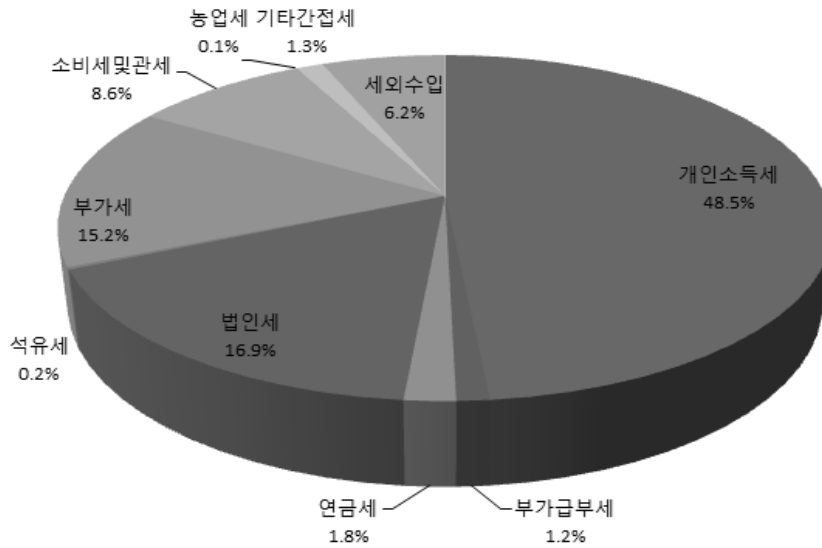
	실적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재정수입	395,055	411,112	441,223	473,062	502,699
GDP 대비 비율	23.9	23.5	24.3	25.0	25.5
조세수입	368,939	386,345	412,842	439,780	467,206
GDP 대비 비율	22.3	22.1	22.7	23.2	23.7
세외수입	26,116	24,767	28,381	33,281	35,491
GDP 대비 비율	1.6	1.4	1.6	1.8	1.8

주: 발생주의 기준

출처: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2016,12,19.

[그림 VI-3] FY2016-17 재정수입 구성

(단위: %)



출처: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2016,12,19. 재구성

〈표 VI-5〉 FY2016-17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¹⁾

(단위: 백만호주달러, %)

	2016-17		증감(b-a)	
	PEFO ²⁾	MYEFO ³⁾	금액	비율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391,283	386,345	-4,938	-1.3
소득세(Income taxation revenue)	284,550	280,720	-3,830	-1.3
개인소득세(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	201,330	198,480	-2,850	-1.4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4,760	4,540	-220	-4.6
법인세(Company tax)	70,100	68,700	-1,400	-2.0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7,510	8,080	570	7.6
석유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850	920	70	8.2
간접세(Indirect taxation revenue)	106,733	105,625	-1,108	-1.0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63,340	62,410	-930	-1.5
소비세 및 관세(Total excise and customs duty)	35,795	35,670	-125	-0.3
농업세(Agricultural levies)	494	519	26	5.2
기타간접세(Other taxes)	5,625	5,476	-149	-2.6
세외수입(Non-taxation revenue)	25,579	24,767	-811	-3.2
재정수입(Total Revenue)	416,862	411,112	-5,749	-1.4

주: 1) 발생주의 기준

2) PEFO는 선거전경제재정보고서(5월 발표), MYEFO는 반기경제재정보고서(12월 발표)의 약어
출처: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2016.12.19.

나. 재정지출

□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에서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과 기타변화효과 등을 반영하여 FY2016-17 재정지출 규모를 4,486억호주달러(GDP 대비 25.6%)로 전망하고, 이후 전망기간의 재정지출규모를 예산안 대비 하향 조정

-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교육, 국방 부문의 지출이 총지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
- 주요 지출 증가 정책
 - － 향후 4년간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75개 프로젝트)에 약 8억호주달러 추가 지원

- 향후 4년간 커뮤니티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에 5억 41백만호주달러 지원 계획이며, 선거 공약에 따라 지역개발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Grants Programme)을 통해 지원
- 향후 3년간 지역펀드(Building Better Regions Fund)에 약 3억호주달러 지원
- 주요 지출 절감 정책
 - 약속되지 않은 인프라 펀딩의 전용(redirecting)으로 향후 4년간 22억호주달러 감소
 -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사기 방지 및 신용회복 확대로 향후 4년간 21억호주달러 절감 예상
 - 연간 소득이 8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가구에 가족세제혜택(FTB)-A 지급 중단으로 향후 4년간 6억 44백만호주달러 절감이 예상되며, 이는 예산 절감 옴니버스 법안의 일환임
 -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임금 보조금 제한으로 4년간 약 3억호주달러 절감

〈표 VI-6〉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6-17	2017-18	2018-19	2019-20
■ 2016-17예산안 재정지출	450,553	464,812	489,325	511,604
예산안과 MYEFO와의 차이	-1,911	-4,430	-5,693	-7,629
- 정책결정효과 ¹⁾	-927	-1,138	-367	-270
- 거시경제변수 변동효과	-708	-1,242	-1,707	-2,009
- 공공채무이자지급	-661	-406	-88	462
- 프로그램변수 변동효과	595	-1,589	-3,324	-3,481
- 기타변화효과	-211	-54	-202	-2,325
■ 2016-17 MYEFO 재정지출	448,642	460,382	483,632	503,975

주: 1) 정책결정으로 인한 공공채무 이자지급의 영향은 제외하고 결정된 정책을 위한 응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는 차감계산

출처: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2016.12.19.

〈표 VI-7〉 FY2016-17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기능별 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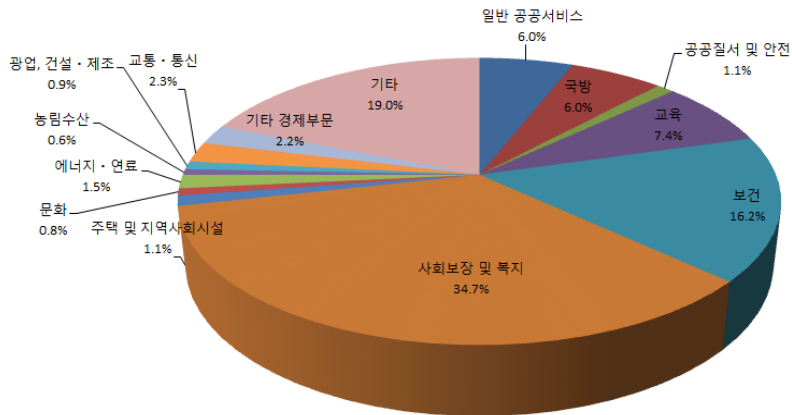
(단위: 억호주달러, %)

	2016-17		2017-18		2018-19		2019-20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일반 공공서비스	227	270	218	207	223	210	235	221
국방	272	268	279	280	294	294	315	315
공공질서 및 안전	49	51	48	48	47	47	47	46
교육	337	333	338	331	345	337	358	350
보건	714	728	734	737	762	763	793	788
사회보장 및 복지	1586	1558	1665	1627	1843	1784	1918	1849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53	51	51	51	45	45	44	42
문화	34	35	33	34	32	34	33	33
에너지·연료	67	69	68	70	70	72	73	76
농림·임업·수산	31	29	31	30	26	28	23	24
광업·건설·제조	35	41	38	40	40	42	43	45
교통·통신	111	103	106	107	66	76	54	63
기타 경제부문	98	99	86	85	86	83	85	82
기타	89	851	953	955	1013	1021	1095	1105
재정지출 (GDP대비 비율)	4,506 (25.7)	4,486 (25.6)	4,648 (25.6)	4,604 (25.4)	4,893 (25.9)	4,836 (25.6)	5,116 (26.0)	5,040 (25.6)

출처: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Table 3.20 재구성, 2016.12.19

[그림 VI-4] FY2016-17 재정지출 구성

(단위: %)



출처: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6-17, Table 3.20 재구성, 2016.12.19.

4 주요 재정정책

가. 일자리창출 및 성장 활성화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혜택(tax incentives) 도입(2016.3.15.)⁷³⁾
 - '15년 12월에 발표한 11억호주달러 규모의 혁신개혁안 NISA(National Innovation and Science Agenda) 조치 중 하나로 '16년 7월부터 시행 예정
 - (초기 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 신생 및 창업기업 투자에 20%의 세금 감면(tax offset), 12개월 이상 투자자에 대해 향후 10년 내 투자한 주식지분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면제
 -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한도는 1년에 20만달러
 - (Early Stag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ESVCLP) ESVLCP 프로그램에 등록된 투자펀드로부터의 자금 지원 등에 대해 10%의 세금 감면
 - 신규 및 기존 등록펀드의 최대 규모를 1억호주달러에서 2억호주달러로 증가
- 성장 및 고용 진작을 위해 경쟁 정책(competition policy) 수정(2016.3.16.)⁷⁴⁾
 - 경쟁 정책에 관한 일명 하퍼 리뷰(Harper Review) 보고서⁷⁵⁾의 제안에 따라 '호주 경쟁 및 소비자에 관한 법률(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46절(시장 지배력 조항에 대한 오용)을 수정
 -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 불공정 계약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쟁과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
- 호주의 미래 금융기술 '핀테크(FinTech)'에 관한 성명 발표⁷⁶⁾(2016.3.21.)⁷⁷⁾

73) 출처: 호주 재무부 장관 홈페이지, <ht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29-2016/>
NISA 웹페이지, <http://www.innovation.gov.au/>

74) 출처: 호주 재무부 장관 홈페이지, <ht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30-2016/>

75) 하퍼(Ian Harper) 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호주 경쟁 정책 검토 패널(Competition Policy Review Panel)이 호주의 현 경쟁 정책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경쟁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콘텐츠 디지털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 저작권 및 경쟁 정책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발표됨

76)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

77) 출처: 호주 재무부, <http://fintech.treasury.gov.au/>

- 호주 정부는 신성장동력인 미래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핀테크 산업 지원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을 통한 경제 강화
 - 신생 핀테크 회사에 벤처캐피탈투자 감면세(concessional tax) 보장
 -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를 통한 새로운 상품에 관한 정보 이용 및 접근성 활성화
 - 디지털 화폐(비트코인)에 대한 이중과세(double GST) 문제 해소를 위한 부가세법 개정 추진 예정
 - 호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개혁을 제시함
 -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크라우드펀드(Crowdfunding) 허용
 - 쿨링오프(cooling off) 기간을 제거하고, 합법적 이유로 투자를 철회하는 재량을 사용하도록 플랫폼을 허용
 - 개인 크라우드펀드 자격요건을 위한 호주 시장 면허(Australian Market Licence, AML) 검토
 - 또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와 로보 어드바이스(robo-advice) 또는 디지털 금융 상품 어드바이스, 대출 상품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
- 재생 에너지 혁신을 위한 청정에너지혁신기금(Clean Energy Innovation Fund) 조성 (2016.3.23.)⁷⁸⁾
- 호주 정부는 10억호주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새로운 청정 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도울 계획이며, 공적자금 투자로 재정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래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
 - 청정에너지혁신기금의 프로젝트는 대형 태양광발전, 해양 에너지, 바이오 연료,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등이며, 호주 신재생에너지청(ARENA)과 청정에너지금융 공사(CEFC) 두 부처가 청정에너지혁신기금을 운용
 -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배출감소기금, 신재생에너지 목표, 국가에너지생산성계획 및 청정에너지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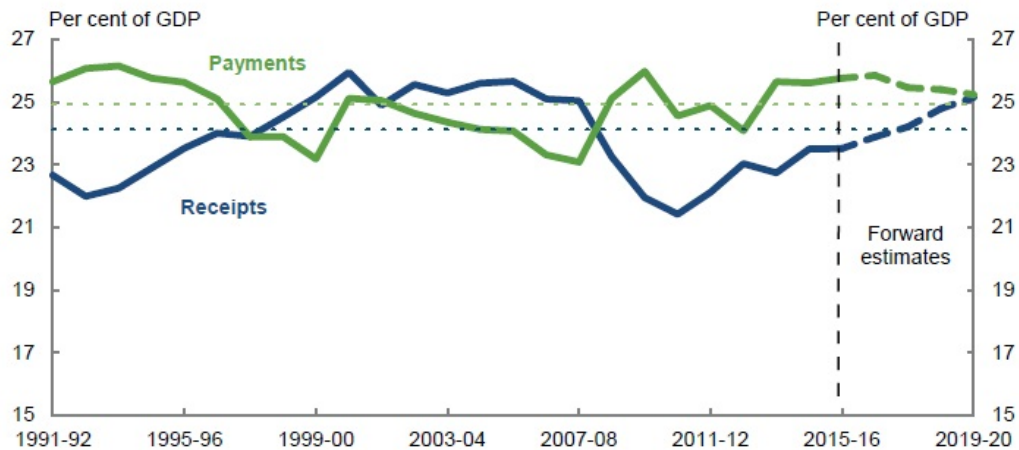
78) 출처: 호주 총리실, <http://www.pm.gov.au/media/2016-03-23/turnbull-government-taking-strong-new-approach-clean-and-renewable-energy>

- 호주정부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맞설 것이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26~28%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나. 재정건전화

- FY2016-17 예산안은 연평균 GDP 대비 0.5% 규모로 재정건전화를 계획하고, FY2020-21 예산 흑자 달성을 위한 중기재정전략(Medium-term fiscal strategy)을 유지
 - 지출 제한으로 실질증가율이 연평균 1.9%를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소득 및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정책으로 세입 증가율을 지지
 - GDP 대비 예산수지 적자 비중이 FY2015-16 2.4%에서 FY2019-20 0.3% 수준으로 감소 전망

[그림 VI-5] GDP 대비 지출 및 수입 추이



주: 점선은 30년 평균선

출처: Budget 2016-17 Overview, The Treasury, 2016.5.

- ‘예산 절감 옴니버스 법안(Omnibus Bill)’ (2016.8.31.)⁷⁹⁾
 - 예산절감을 위한 옴니버스 법안에는 24개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59억 96백만호 주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79) 호주 재무부,

<http://www.treasury.gov.au/PublicationsAndMedia/Newsroom/MediaReleases/2016/Omnibus-Bill-2016>

- 현 호주 총 채무는 4,300억호주달러에 달하며, 매 월평균 약 60억달러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채무 감축 및 예산 균형 회복이 중요한 과제
- 예산 절감 조치에는 호주재생에너지청(ARENA) 지원금 삭감, 가족세제혜택(FTB) 파트 A,B 및 연방정부 노인의료카드 등 새로운 복지 수당 수급자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중단, 가족세제혜택 파트 A 기준소득 동결 등 포함

〈표 VI-8〉 주요 절감 조치(Major savings)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Total
	\$m	\$m	\$m	\$m	\$m	\$m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Savings Fund	72.0	162.4	408.5	-1,062.2	2,676.8	2,257.6
Higher Education Reform – further consultation	28.4	133.7	488.6	569.2	790.5	2,010.5
Public Sector Transformation and the Efficiency Dividend	0.0	0.0	298.6	510.5	614.6	1,423.8
Jobs for Families Package – deferred implementation	60.0	43.4	1,152.6	-7.3	-86.2	1,162.5
Aged Care Provider Funding– further revision of the Aged Care Funding Instrument	-0.2	119.0	229.5	339.5	463.9	1,151.7
Medicare Benefits Schedule– pause indexation	0.0	0.0	0.0	301.5	623.8	925.3
Asset Recycling Initiative – return of unallocated funds	0.0	452.7	307.4	93.5	0.0	853.6
Youth Employment Package – Work for the Dole – reform	0.0	128.1	120.7	123.0	122.5	494.2
Industry Skills Fund – efficiencies	24.6	55.8	55.6	55.6	55.6	247.2
Job Commitment Bonus – cessation	-0.4	45.8	66.1	65.5	65.0	242.0
Health Flexible Funds – pausing indexation and achieving efficiencies	-	-	31.9	57.8	92.4	182.1
Reforming the Visa and Migration Framework	-	-	20.0	70.0	90.0	180.0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gramme – efficiencies	0.0	7.8	0.3	4.2	150.4	162.7
Higher Education Participation Programme – efficiencies	-	13.0	18.1	33.1	88.1	152.3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administrative efficiencies	-	20.0	20.0	20.0	20.0	80.0
A Streamlined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 for New Zealand Citizens	0.0	-2.1	9.3	24.4	33.5	65.1
Onshore Immigration Detention Network – consolidation	-1.6	-9.8	6.8	24.0	38.0	57.4
Child and Adult Public Dental Scheme	-4.1	60.6	50.5	32.8	-122.4	17.4

출처: Budget 2016-17 Overview, The Treasury, 2016.5.

□ 연금 개혁 (2016.9.7.)⁸⁰⁾

-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연성', '통합성' 향상을 위한 주요 연금 개혁 조치는 다 음과 같으며, 2017년 7월 1일 이후 적용 계획

80) 호주 재무부, <http://www.treasury.gov.au/Policy-Topics/SuperannuationAndRetirement/Superannuation-Reforms>

- 연금의 목표(objective) 법제화: ‘노령연금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퇴직 소득 제공(to provide income in retirement to substitute or supplement the Age Pension)’
- 세금공제를 받고 퇴직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정기여금(Concessional Contribution)의 납입상한선 2만 5천호주달러로 축소하고, 25만호주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추가 세금(30%) 부과
- 세금공제 없이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비인정 기여금(Non-Concessional Contribution) 납입상한선은 연간 10만호주달러로 제한하고, 연금총액이 16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납입허용
- LISTO (Low Income Superannuation Tax Offset) 도입: 연소득 3만 7천호주달러 미만의 저소득자에 한해 연간 500호주달러까지 퇴직연금 세금 감면 혜택 등
 - 이는 저소득 근로자 개인의 세율이 퇴직연금세율보다 높은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재정적 어려움(fiscal challenges)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보다 잘 목표화된(targeted) 세금 감면으로 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재정 수입이 약 31억호주달러 증가하는 효과 기대

정책분석 17-04

주요국 예산안 2017

발 행 2017년 3월 31일
발 행 인 박형수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 화 (044)414-2114(代)
홈 페이지 www.kj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천 세